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6. 8.



기획예산처

■ 「2026년도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시행계획」(2026. 8.)

■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 (044-214-1434)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II. 일반 현황 및 시행계획의 개요	28
1. 기획예산처 일반 현황	2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1
III. 세부 추진계획	36
1. [전략목표Ⅰ] 중장기 미래 대비	36
2. [전략목표Ⅱ]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82
3. [전략목표Ⅲ] 재정 인프라 혁신	139
IV. 환류 등 관련계획	180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80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82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83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92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중장기 미래 대비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구조전환 대응

- (중장기전략 수립)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임기: '25.9월~'27.9월) 구성,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등 논의
 - * 기획처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로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 미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포럼·컨퍼런스*,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중장기 이슈 공론화 노력
 - * 미래전략포럼: 바이오(5월), AI(9월), 문화컨텐츠(11월), AI 국제 컨퍼런스(12월)
 - **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9~11월, 주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AI 대전환 정책 아이디어)
- (구조전환 대응) AI 등을 활용한 우리 경제·산업구조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노력
 - (AI 대전환) 한국이 보유한 IT 기반, 제조 역량 등을 통해 AI 글로벌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대폭 확대
 - '26년 AI 지원 예산 전년 대비 3배 확대('25년 3.3→'26년 9.9조원)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요 내용: ①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업의 도입·활용 등 지원, ②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부여 등
 -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및 NDC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 * 경제 상황, 산업계 부담, 산업 체질 전환 등을 종합 고려하여 △53 ~ 61% 확정

- (배출권) 배출권 총량 및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6~’30) 수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약 25억 3729억만 톤) 결정 및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에 따른 업체별 무상할당분 결정

제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목표비율

구분		‘26	‘27	‘28	‘29	‘30
탄소누출	발전	15	20	30	40	50
非우려 업종	발전 外	15				
탄소누출 우려 업종		0				

- (기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과제 발굴

2 포용성 · 지속가능성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부문별 축소 등과 같은 파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인구비상대책회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월)」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경활인구 확보 과제 마련

* 「초고령화 대응방향(’25.1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25.3월)」 등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월)」 中 인구 관련 주요 과제 >

분야	주요 과제
저출생 극복	① (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② (사업주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③ (아이돌봄 지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등 이용가구 확대
경활인구 확보 (해외인재 유치)	① (국경없는 인재 활용) 국내외 연구기관간 글로벌 공동연구, 파견 등 포괄지원 확대, AI·SW 아카데미 등 우수 참여청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 등 ② (특별비자 신설) 탐티어 비자(現 첨단산업분야)를 연구분야까지 확대 적용 등 ③ (재외한인 인재 복귀)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 신설 및 연구비 지원 등

- 다양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인해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반등*

* 합계출산율(명) : (’15) 1.24 (’20) 0.84 (’21) 0.81 (’22) 0.78 (’23) 0.72 (’24) 0.75 (’25p) 0.80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설립부터 성장·협업까지 통합적 지원 확대

*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억원) : ('23) 75.1 → ('24~'25) 15.8 → **(26) 29.3**

- ① (설립 및 운영지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상시자문, 업종별 창업·규모화 컨설팅 등 맞춤형 경영지원 확대
- ② (판로지원) 협동조합 상품 진단, 민간 유통채널 확보 및 입점 지원,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 등 시장접점 확대 지원
- ③ (교육지원) 조합원 참여와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공시, 총회 등 관련 교육 지속 추진

- (현장 간담회) 권역별 협동조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소통하고, 정책 마련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재정총량 목표와 재정운용 전략 제시
 -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 실시
- (고강도 재정혁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고강도 재정혁신 방안 마련·추진
 - (재정구조 혁신) 「재정구조 혁신 TF」를 출범('25.9월, 차관 주재)하여 지출+세입+사회보험·연금+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 논의
 -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의무·경직성 지출 제도개선,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적극 발굴

- (재정지표 관리) 재정 본연의 역할과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병행하여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26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기구·신평사의 긍정 평가도 확보

- (재정분권) 5극3특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에 재정분권 반영

*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참여 · 공개 · 협력 기반 재정운용

-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재정교육 외연확대, 지방정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참여예산) 신규사업 및 지출효율화 국민제안, 집행현장 모니터링 등 예산 소 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

* '26년 예산에 9건(137억) 반영('25년 50억원) ** '지출효율화 국민제안' 시범실시('25.7월)하여 '26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에 반영

- (재정교육)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 기존 공무원 중심의 재정교육에서 일반국민으로 교육 외연 확대

* 교육 수료자수(명) : ('22) 5,173명 → ('23) 5,145명 → ('24) 6,663명 → ('25) 7,105명

** 대국민 재정용어 해설 이러닝 콘텐츠(숫품, 룡품) 개발공개(25.12.1)

- (지방정부 협력) 기획처 및 중앙부처 장관,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와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

* 기획처 차관 주재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 개최('26.2.26.)

□ **아태재정협력체(PEMNA*) 운영·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재정혁신 사례를 개도국에 공유하고 한국 재정운영 성과 국제사회 확산**

*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Pacific: 아시아 14개국 간 재정 분야 정책협의체로 분과회의·방문연수 등을 통해 회원국 간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재정시스템·개혁 사례를 아시아 개도국에 소개하여 개도국 재정운영 선진화 지원**

* 한국은 성과주의 예산, 발생주의 회계 등 총 90여회 발표

- **한국의 재정정책 대응사례***를 PEMNA 채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한국 재정성과 확산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예) 코로나19 팬데믹 재정대응 사례('20년), 1~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 사례('25)

□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dBrain⁺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예산 편성·집행, 자금 이체, 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쏠과정을 지원하여 차질없는 재정업무 수행**

- 재정정보공개플랫폼 「열린재정」에 공개되는 **재정통계*** 및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 **내용 확대****를 통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중앙) 141종 → 157종, (지방) 39종 → 51종, (지방교육) 26종 → 34종

** 세부사업보다 하위인 내역사업 정보 및 산출근거, 결산내용 등까지 확대

[2] 적극적 · 전략적 재정투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 (총지출 증가율) '25년 총지출 증가율은 8.1%(673.3→727.9조원, +54.6조원)
 -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등 초혁신경제 실현,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과감한 투자*
 - * AI 대전환(3.3→10.1조원), R&D 역대 최대 증액(+19.3%), 아이돌봄 지원확대(중위 200→250%)
 -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27조원 수준을 절감하여 핵심사업 투자 재원 마련
- (유사중복) 부처의 신규사업 수립시부터 예산안 심의과정까지 3단계*의 사전점검 절차를 거쳐 56개 사업 미반영
 - * (1단계) 신규사업 추진 부처가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 (2단계) 예산실이 유사·중복성에 대해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 (3단계) 심의 과정에서 유사·중복 판단 및 예산안 반영
- (보조금) 과감한 효율화 노력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 목표를 상회하는 구조조정 이행을 달성(94.7%)
 - 관행적·저성과 사업의 정비를 통해 관리 대상 사업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고성과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재정여력 마련
- (기금운영비·수지차기관 경상비 관리)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낭비를 최소화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 자연증가 소요*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필수소요 중심 편성
 - * 인건비·공공요금 인상, 사업비 지출에 따른 운영비 증가소요 등

2 미래대비 ·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 (청년) 청년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수요가 높은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 강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확대(10→10.5만명)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5만명) 근속 인센티브* 신설
 - * 2년 근속시 비수도권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600~720만원 지급
 - 광역간(초광역)·기초간 연계를 통한 청년 지역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신설 등 실노동시간 단축,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장 안착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
 - 근로자 지원 강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출산·배우자출산·유사산·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인상(월210 → 220만원)
 - * (주10시간, 통상임금100%) 월220→250만원, (주10시간초과, 통상임금80%) 월150→160만원
 - 사업주 부담 경감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사후 지급제도 폐지 및 업무인수인계 기간 추가 지원(+1개월)
 - * 대체인력지원금: 월120 →130만원, +10만원 / 업무분담지원금: 월20 → 40만원, +20만원
- (안전일터)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예방 투자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안전투자*(시설·장비) 강화, 고위험업종 상시점검** 등
 - * (필수 안전설비 지원) '251.1 → '261.7만개소, (온열질환 예방장비) '250.5 → '260.9만개소
 - ** 안전한 일터지킴이(+1천명) 사업 신설 →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 점검 확대
- (교육세 개편) 교부금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 확대
 -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영유아특별회계(60%) 및 교부금(40%)으로 배분
 - ※ (現)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 '17~'30) :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보육비 지원
 - (改) 신설영유아특별회계('26~'30) : 만 0~5세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비 지원

□ (고등교육 강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및 사립·전문대는 특성화로 동반성장 도모

- 거점국립대 중심 산학연협력 허브 육성* 및 사립·전문대 인센티브** 강화, RISE 사업 대폭 재구조화***를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신규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교당 400억원), 신규AI 지역거점대학(교당 100억원) 등

** 대학혁신지원(신규특성화인센티브) 85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신규특성화인센티브) 340억원

*** ('25) 1.7조원(7개 사업 통합, '26 통합예정 사업 제외) → 2.1조원(8개 사업 추가 통합)

- AI·로봇 등 첨단분야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부트캠프, 특성화대) 대폭 확대*, 우수 이공계 학생의 성장 단계별 집중 투자**

* 지원 분야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 AI·로봇까지 확대

예산 : <부트캠프> 660(44개) → 1,304억원(88개) / <특성화대학> 1,167(28개) → 1,209억원(33개)

** 신규첨단분야 인턴십 41억원, 신규글로벌 교육과정 8억원, 신규학부연구생 32억원 등

□ (영유아 교육·보육 내실화) 영유아 특별회계 구축을 통해 국가 책임 보육 강화 및 생애 초기 교육·보육 질 제고

- 유특회계를 영유특회계로 전면 개편*하여 4~5세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 → 1:2)등 국정과제 이행

* (기준) 3~5세 유특회계 3.1조원 + 보육사업 5.3조원 → (개편) 0~5세 영유아특별회계 9.2조원(+9.3%)

** (어린이집) 원복·현장학습비 등 (사립유) 정부지원금 대비 초과원비 (공립유) 방과후과정비

□ (탄소중립)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촉진 및 충전인프라 내실화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지원을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

- 그간 축소해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300만원으로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추가100만원) 신설, 전체 보조금 예산도 확대('25 1.5 → '26 1.6조원)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산을 위해 저리융자·보조 등 관련 예산 확대('25 0.9 → '26 1.3조원)

□ (콘텐츠 수출) 국가대표 100대 콘텐츠 펀드 신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투자 확대, 인프라·인력 확산, 대륙별·국가별 마케팅 전략 수립

* 5개 주요 장르(방송, 영화, 애니, 공연, 게임) × 5개 제작사 × 4개 프로젝트

- (지역 문화향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에게 공연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문화 취약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지원**

* 뮤지컬 지역순회 확대, 지역극단 지원, 지정형 국립극장 지원 등

** 물량(270→272만명) 및 단가(15→16만원) 확대, 비수도권 1만원 추가 지원

- (기초예술 지원) 문학창작,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장르·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가 창작역량 제고

* 문학작가 펠로우십, 시각예술 프로젝트 창작, 공연예술 중장기 지원 등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첨단산업 기반 강화) 국가 전략산업 생산 및 투자기반 확충 지원

- (인프라) 반도체 총 투자규모 26조원 → 33조원으로 확대

* (인프라) 3.1→5.1조, (투자) 18.1→21.6조, (차세대 기술) 3.8→5.0조, (인재) 1.4조

- (공급망) 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0.2조원) 등 공급망 위험 적기 대응

- (지역특화) 5극 3특 지역별 전략산업에 특화하여 AX 등 집중 지원

- (중기·벤처) 첨단산업 중심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 (성장) AI·딥테크 특화형 창업패키지(+175개), 유니콘 브릿지 사업(50개사) 신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벤처)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1.0→1.5조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등 혁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

- (소상공인) 재기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보강

- (비용경감) 경기가 어려워 고정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바우처(0.6조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신설

- (재기지원) 폐업비용 부담으로 적자영업을 계속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유도하고자 철거비 지원(4→6백만원) 및 전직수당 확대(1.0→1.2만건)

- (철도) GTX-A·B·C의 차질없는 착·준공을 지원하고 병목구간 개선을 위한 평택 - 오송구간 선로확대, 철도 지하화 추진 등
- (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양재구간 지하도로 설계 추진 및 노후 교량·터널 보수 투자 강화
- (공항) 가덕도, 새만금 등 전국 8개 신공항 건설지원과 인천공항 철도 차량 증차 등 공항 접근성 개선
- (농업·식품) 역대 최대 농업직불예산 3.4조원 달성(+0.3조원), 수입 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농산물 비축, 할인지원 확대, 계약재배 장려 등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 (수산·어촌) 수산업 스마트화 지원, 수산물 수출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어촌발전 및 청년 어업인 정착을 위한 투자 확대
 - 수산물 수출바우처 확대, 소비자유통시설(FDC) 확충, 청년창업·임대형 양식장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반영
- (R&D 투자 확대) 첨단산업 기술개발, 고급인재 확보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29.7→35.5조원, +19.9%)
- (R&D 체계 개편) 출연연 PBS 제도의 국가 임무 중심 체제 전환,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등 현장 맞춤형 제도개편 추진
 - * 풀뿌리 소액연구 신설(1억원 미만 과제 2,000개 지원) 등
- (AI경쟁력 강화) AI 3강 도약 위해 인프라, 인재 등 집중 투자
 - GPU 5만장 조기 구매, AX 통합바우처 신설 등 인프라 구축
 - 지역, 산업, 생활, 공공 등 전방위 AX 투자 확대
 - 청년·고급인재부터 초국민까지 AI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 (사회안전매트) 역대 최대 수준의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비중(37.0%) 예산편성 → 사회적 약자 보호, 복지 사각지대 중점 지원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으로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수급액 200만원 초과(195.1→207.8만원)
 -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확대 등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63→65%) 등
- (저출생·고령화) '26년에 저출생 반등, 미래 세대 지원, 저출생·고령화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62.6→70.4, +7.8조원)
 - 육아·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노력으로 합계출산율 반등 추세 유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등 어르신 지원 강화
- (연금개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로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및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제고
 - * 저소득지역가입자 지원 : ('26년) 824억원
-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놓인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인력·시설·장비 투자를 대폭 확대
 - * ('24년) 0.6억원 → ('25년) 0.9조원 → ('26년) 1.1조원
- (바이오헬스) 단계별 자금조달, 해외시장 진출 촉진, 현장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산업 성장 견인
 - * ('25년) 2,798억원 → ('26년) 4,975억원, +77.8%
- (재난 대응) 역대 최악의 산불('25.3월)에 대해 신속·과감한 대응* 및 재해예방을 위해 예방 인프라 및 소방·해경 장비 대폭 확충
 - * ①(복구계획) 역대 최대 지원(총 1.9조원), ②(산불특별법) 산불재난 최초로 특별법 제정('25.11.28), ③(법 개정) 상가·공장 복구지원을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25.5.27) 및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편

5

지방주도성장 및 국민안전·평화 기반 구축

□ (지방주도성장) 인구 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우대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확대

- '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우대 시범사업 반영

* 인구감소지역(행안부), 균형발전지표(지방시대위), 예타 낙후도평가(KDI) 등

-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 확대

* 소비자할인율 : (수도권) 7~10 → 10% (비수도권) 7~10 → 13% (인구감소지역) 10 → 15%

□ (공공질서 인프라 확충) 현장경찰 인력보강 및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 개편, 교정 시설 안전 보강 등에 적극 투자

- 신임경찰 충원확대(4,800→6,400명), 저위험층 확충 등 현장 즉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AI 기술 도입 및 마약장비 보강 등 수사역량 제고

-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국선변호인 증원(254→274명) 등 지원

- 교정, 검찰, 경찰 등의 재난안전 시설 보강(0.2→0.3조원)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및 검거 관련 기술 보유 기업에 수출·투자 지원 등 치안산업 육성 지원

* 1) 국민안전펀드 내에 치안 분야 투자 재원 100억원 조성

2) 국제치안산업대전을 통해 치안산업 수출 지원(AI CCTV카메라, AI 영상관제시스템 등)

- (굳건한 안보태세 강화)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과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65.9조원)
 - 첨단 전력 확보 및 3축체계 고도화와 방산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11.9% 증가한 20.2조원 지원
 - 초급간부의 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통 인상률에 더해 보수를 추가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확대
- * ('26년) 공통 보수인상률(3.5%) + 추가 보수인상률(최대3.1%)
-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 및 고품질 전투피복으로 교체, AI·드론 교육 및 대학원격강좌 등 자기개발 지원 강화

[3] 재정 인프라 혁신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 (성과목표관리) 각 중앙관서가 설정한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차년도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점검·관리
 - '24년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507개 성과지표 중 416개 목표 달성(달성률 82.1%)하여 전년대비 +5.2%p 상승
- (성과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침인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2.8월)하여 성과관리 방향성 정립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에 기반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24.12)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라 211개 사업(50.4%) 구조조정
 - *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와 정부안 편성 시 반영
- (기금자산운용) 연기금투자폴* 자산운용 제도 개편·보강을 통해 운용 효율화 및 수익률 제고를 달성하고 재정효율성 제고
 - * 중소형 기금의 효율적인 여유자산 운용을 위해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pooling)하고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방식을 통해 위탁 운용하는 제도
 - 제도 도입('01년) 이후 모든 투자자산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
 - * 투자폴 운용 수익률(시장 대비 초과수익률) : ('21) 1.49(+0.28), ('22) △2.16(△0.07), ('23) 6.67(+0.78), ('24) 5.28(+0.69), ('25) 6.85(+0.63)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타당성심사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재정효율성 강화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별 특수성 평가 강화, 지역균형발전 평가 기준 최신화 등 예타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
 - R&D 사업의 신속·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
 - * 예타 도입 이후 지속 확대된 예타 대상을 최초로 조정
 - AI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속한 예타 선정·면제·완료 등 국가아젠다를 적극 뒷받침
- (민간투자) 경기진작 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래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하여 '재정·민간투자' 병행
 - 재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25년부터 컨설팅(신규) 등 추진**
 -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4.10월) → 특별인프라펀드 신설('25.2), 인프라펀드 과세 특례 일몰연장('25.8월, 조특법 개정) 등
 - ** 민간투자사업 집합교육(부처·공공기관, '25.4.8.~4.9.), 현장컨설팅(75차례) 등 실시
 - '서울시 방화동 미래형 실버타운사업' 제안서 접수('25.8월) 등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본격 추진
 - * ❶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❷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❸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 '25년 관리대상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전년을 상회한 67%(중앙재정)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추진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 (복권의 공익기여) 복권에 대한 신뢰 및 긍정 인식 제고로 복권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및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기여

○ 복권기금의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및 민생안정 적기 대응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지원 강화 ('25년 대비 +1,399억원, +6.6%)

**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384억원),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1,000억원) 등 확대

○ 복권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공익활동 및 건전화 노력을 통해 복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 복권수익금(억원): ('21) 24,416, ('22) 26,430, ('23) 27,735, ('24) 29,788 ('25) 31,110

** 복권에 대한 긍정 인식도(입소스, %) : ('14) 62.9 → ('20) 66.5 → ('24) 69.6 → ('25) 76.9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 '17년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관리에 착수

○ 자치단체 보조금('25년 96조원)을 제외(지방정부에서 별도 관리)한 민간보조금(30조원)을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점검

○ 대법원·국세청 등 311개 시스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부정징수 사업을 추출*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 여부 확인

* 특정거래처 편중, 직계존비속 간 거래, 세금계산서 분리발행 등 추출패턴 적용

□ '23년 부정수급관리단(임시조직) 설치 이후, 합동(특별) 현장점검 확대, 지침 강화 및 새로운 기술 적용 등으로 적발 실적* 증가

* 적발금액(백만원) : ('21) 3,488 ('22) 9,807 ('23) 69,985 ('24) 49,302 ('25) 66,765

(1) 중장기 미래 대비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구조전환 대응

- (중장기전략 수립) AI대전환,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중장기 시계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추진
 - (의견수렴) 일반국민,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만드는 전략 수립
 - (추진체계) 우리처 주관하에 대학·정부출연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략수립
- (산업구조 대전환) AX·GX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
 - (AX(AI Transformation)) AI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모델 개발, 인재 양성, AI 대전환 등 핵심 정책과제 발굴 추진
 - (GX(Green Transformation)) 2035 NDC 이행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 수립 지원
- (탄소중립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 달성, 기후테크 등 탈탄소 신산업 육성
 - 우리나라의 주요 감축 기제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등 기후테크 육성 및 감축동력 강화
 -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우리 기업 부담 완화
 - 美·EU 등 글로벌 동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한국형 지속가능공시' 마련 및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ESG 역량 강화

2 포용성 · 지속가능성 제고

- (양극화 대응) AI대전환, K자형 경제 고착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위해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및 시급한 현안 대응
 - (중장기전략 수립)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일환 사회분야 중심 통합성장 도전과제 대한 중장기전략 마련(2030, 2030+ α , 단기 정책대응과제 포함)
 - 민관협의체와 구성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복지, 일자리, 상생, 지역균형 등 국민체감 분야 제도개편·재정지원 재정부 등 추진
 - (현안 대응) 민생, 청년, 일자리, 노동, 지역균형발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재정의 적재적소 지원방안 마련
 - 국토대전환TF, 기본사회위·지방시대위 등 관련 회의체 협의
 - 개정노조법(가칭 노란봉투법) 대응, 초광역권 지원 등 최근 시급한 현안 대응전략 마련 및 개선방안 도출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의 반전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부문별 충격에 대한 적응력 제고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제도개선과 함께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제도 개편 추진
 - 총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응, 지방·교육·국방 등 부문별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 이와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성장·발전 및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현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경제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한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중기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기계획의 실효성·책임성 제고 및 전략성 강화 노력
- 「재정구조 혁신 TF」 상시 운영, 재정지표 분석·관리체계 고도화,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 마련 등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
 - (재정구조 혁신)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지출 + 세입 + 사회보험·연금 + 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
 - (재정지표 관리) 재정적자·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추진
 - (재정분권) 중앙·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주도 성장 지원
- 거시경제 관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 확충
 - 특히, 재경부·금융위·한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 강화

4 참여 · 공개 · 협력 기반 재정운용

- 재정운용 과정에 국민·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 (국민참여예산 확대) 국민 제안범위 확대, 시민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민주권재정’ 실질적 구현
 - (재정교육 강화)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재정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 추진
 - (지방정부 협력)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재정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재정·정책 협력 소통 강화
- 주요국 정부·국제기구·다자협약체 등과 재정·미래 전략 분야 정책교류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강화
 - (정책공조 강화) 주요국 재정·기획 당국과 고위급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국제기구·기관과 재정·구조개혁 등 공동연구 추진
 - (개도국 재정협력 확대) 對개도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아시아 중심 협력에서 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진출 기반 마련
- 중앙·지방·지방교육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가칭모두의 재정) 구축으로 재정정보 접근성 투명성 강화
 - 중앙재정(“열린재정”), 지방재정(“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2] 적극적 · 전략적 재정투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 성장동력 확충 및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 구축
 - 재정지출의 성격(의무·재량, 사업비·경상경비, 한시·계속)과 무관하게 쏠 부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여부 및 규모 재검토
 - 유사·중복 사업의 사전 차단, 관행적인 효과저조·과다지원 보조 사업의 적극적 정비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재투자 도모
 - 기금운영비, 수지차기관 경상비는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재정 낭비 최소화 및 절감기조 유지
 -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

⇒ 「적극재정 → 성과제고 → 경제성장 → 지속가능재정」 선순환 구조 정착

2 미래대비 ·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 ①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일터 조성, ②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교육 체계 내실화, ③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 문화격차 해소 지원
- ①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노동안전 투자 강화
 - 경제활동인구 감소, 은퇴계층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AI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위험요인 선제 대응 산재예방 투자 확대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체계 내실화

- 지역 전략산업 연계 거점국립대 육성, RISE 체계 고도화와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인재의 단계별 성장경로 내실화
- 영유아 특별회계 기반 무상보육 확대, AID 산업 맞춤형 직업 교육 전환 및 해외 한국어 수요에 대응한 보급 확대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이행, K-콘텐츠 수출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통한 글로벌 문화강국 뒷받침

- 산업계의 적극적인 감축촉진 지원, 국민들의 녹색생활 유도 등 탄소중립 저변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추진
- 펀드 신설 등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공연장 제공, 통합문화이용권·기초예술 지원 확대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및 모두의 창업생태계 조성

- (첨단산업)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전환기 기업 부담 완화
- (경제안보) 주요 자원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및 유망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수출 경쟁력 강화
- (창업·소상공인)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한 국가창업시대 개막 뒷받침 및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 과학기술과 AI의 융합 통한 기술 주도 성장 및 AI 3強 공고화

- (R&D 혁신) 과학기술xAI로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래 기술·산업의 글로벌 판도를 바꿀 전략적 투자에 집중
- (AI 경쟁력) AI 기본사회 구현 및 지역 특화 AI 대전환 등 본격 투자 통해 AI 강국 입지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및 경제활력 제고
 - (SOC) 철도·공항 등 집행부진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및 편의성 제고 투자 확대
 - (농림·수산) 혁신성장펀드 조성 등 스마트농어업 투자 확대와 북극항로 개척, K푸드 경쟁력 제고로 농어업 미래 산업화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 ①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②지역필수의료 등 보건 의료체계 내실화, ③재난 대비 인프라·현장 대응 강화
 - ① 양극화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 구축,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지원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
 -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고 노인 빈곤 문제 대응 강화
 - ②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연금개혁 후속조치 지속 추진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투자 확대,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체질개선에 중점 투자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첫 보험료 지원, 크레딧 등 연금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 자살 시도 초기부터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는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
 -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 고도화 및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극한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
 -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마련, 무인소방로봇, 해양 감시드론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현장인력 위험노출 최소화

5

지방주도성장 및 국민안전·평화 기반 구축

□ 지방주도성장 지원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본격 도입
-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5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지원

□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 안보 위협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방위력 강화 투자
 - 국방비 양적 확대와 함께 사타 제도개선,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 질적 고도화 추진
-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상비병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의 복무여건 제고노력 지속 추진

□ 국익 연계 상생 전략형 ODA로 개편

- 국익과 K-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하는 전략적 ODA 추진
- 역량 있는 시행기관의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3] 재정 인프라 혁신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 (재정사업 평가)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
 - 평가대상 중복 및 부처 평가부담 최소화,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위해 개별평가를 통합 성과평가와 연계·통합 운영
 -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
- (성과목표 관리) 성과목표 관리 단위 점검·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재정정보 확대제공 등 성과목표관리 실효성 제고
 - * 세부사업 규모, 사업목적의 이질성 정도 등에 따라 ①별도 성과지표 설정(소규모/이질성 小) 또는 ②프로그램 분리(대규모/이질성 多)
 - '25년 신규 도입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열린재정 포털에서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주요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공
- (기금자산운용)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공적역할 제고를 위해 기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책 기능 강화
 -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통 기준으로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최초 수립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공적 역할 제고 도모
 - 투자폴운영위원회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투자폴에만 한정되던 논의 사항을 기금 자산운용 정책 방향으로 확대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강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균형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아젠다 추진을 뒷받침
 - '계량화된 경제성(B/C)과 비계량 가치*' 사이의 최적점을 모색하고, 예타 제도의 성과와 역할을 분석·재검토하여 제도 혁신방안 마련
 - * 지역균형 및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 (민간투자)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경제성장, ②국민 참여 확대, ③지방의 민자 활성화, ④국민 안전을 뒷받침
 - 민자 영역을 신사업·신유형으로 확장,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
 - 인구감소지역의 민자사업과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자사업의 안전기준 신설·강화
 - *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등
- (재정집행) 당해연도에 예정된 재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
 -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신속집행 목표 설정, 경기·민생회복 등과 밀접한 핵심사업 선별하여 집행관리
 -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개최(차관 주재)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 (복권의 공익가치 실현) 복권사업의 안정적 성장 확보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추진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판매방식 개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 복권 및 복권기금 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불법행위 선제 대응 등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 추진
 - 복권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 기금사업군 선정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들의 구매 효능감 및 인지도 제고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 기획예산처 중심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마련·시행
 - 기획처·관계부처·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특별집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정징후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
 - 부정수급을 빈틈 없이 적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점검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보강 추진
 -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유인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을 상향
 - 부정수급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회 신설
 - 부정수급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자치단체 보조금을 민간보조와 동일하게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기획예산처 일반 현황

[1] 조 직

□ (본부) 3실, 1대변인, 1정책보좌관, 13국·관·단, 52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기획실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재정참여정책관
재정성과국	재정성과국, 재정투자심의관
국고보조금관리단	국고보조금관리단

□ (소속기관: 1) 복권위원회사무처(1처장, 3과)

[2] 인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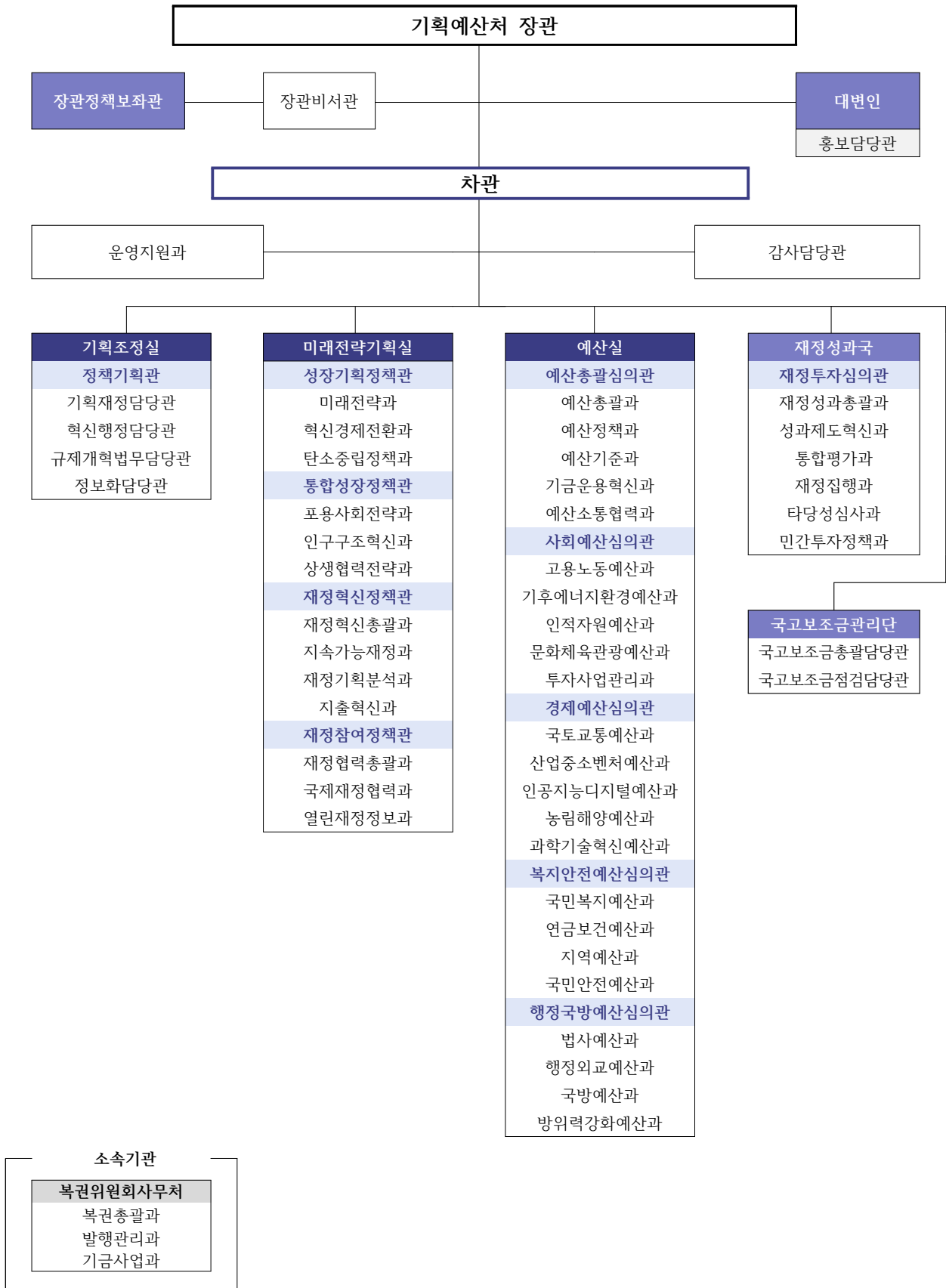
□ (정원) 총 486명(본부 460명, 소속기관 26명)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관리 운영	연구직	전문 경력관	별정직
계	486	2	18	16	39	48	209	144	3	1	2	4
본부	460	2	17	16	36	46	197	136	3	1	2	4
소속	26	-	1	-	3	2	12	8	-	-	-	-

※ '26.7월 기준

[3] 조 직 도



[4]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5	'26	'27	'28	'29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01,908	104,214	107,118	108,957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73,234	212,370 △22.3	211,272 △0.5	210,737 △0.3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444	475 7.0	508 7.0	544 7.0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208	214 3.0	221 3.0	227 3.0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101,256	103,524 2.2	106,389 2.8	108,186 1.7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2,472	42,530 0.1	42,484 △0.1	42,537 0.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69,608	102,542 △39.5	95,547 △6.8	91,334 △4.4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2,472	42,530 0.1	42,484 △0.1	42,537 0.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69,608	102,542 △39.5	95,547 △6.8	91,334 △4.4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9,435	61,684 3.8	64,634 4.8	66,420 2.8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03,626	109,828 6.0	115,725 5.4	119,404 3.2
【복권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9,415	61,684 3.8	64,634 4.8	66,420 2.8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95,863	101,746 6.1	106,997 5.2	109,986 2.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7,763	8,082 4.1	8,729 8.0	9,417 7.9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비전) ¹⁾초혁신경제 구축 및 ²⁾따뜻한 공동체 실현
 - ①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②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 마련
 - ③ 국민의 삶 변화와 모두를 위한 성장 실현
- (중장기 미래 대비) 구조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미래전략 제시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
 -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사회자본 활성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 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으로 국민주권재정 구현
-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재정의 성과중심 운용과 마중물 역할으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안전망 확충 등 고용상황 대응, 고등교육 혁신·탄소중립 저변 확대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의 역할 증대
 - 전략적 투자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촉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원칙을 예산안 편성과정에 본격 도입,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ODA 질적 내실화
- (재정인프라 혁신) 재정성과 및 재정투자 관리 강화 등으로 전략적 재정운용을 뒷받침, 복권사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 체계적·종합적 성과관리 틀 마련, 신속한 예타 선정·면제·완료로 국가아젠다 뒷받침, 민간투자 확대, 재정집행 관리 강화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 마련
- 국민의 삶 변화와 모두를 위한 성장 실현

비전

“초혁신경제 구축” 과 “따뜻한 공동체” 실현

전략 목표	I. 미래전략분과 중장기 미래 대비	II. 예산분과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III. 재정성과분과 재정 인프라 혁신
성과지표	· 실질 GDP 성장률(%)	· 지출구조조정 규모(조원)	· 재정인프라 혁신 종합지표
성과 목표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성과지표	·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	· 총지출 증가율(전년대비 %)	· 재정성과관리 만족도 조사(점)
성과 목표	2.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성과지표	· 15세 이상 고용률	· 고용·교육·문화·환경분야 투자규모(조원)	· 재정투자관리 만족도 조사(점)
성과 목표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성과지표	· 지출혁신 방안 도출 수	· 산업, SOC, 농림,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	·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성과 목표	4.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성과지표	· 열린재정 이용자 수	·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 법령 등 제도 정비
성과 목표		5.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성과지표		· 공공질서안전·일행·외통·국방분야 총지출 증가율(%)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3	13	37	8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중장기 미래 대비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국정 15,
	② AX-GX 등 산업 구조 대전환	국정 20, 21, 22, 38, 40, 41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국정 38, 39, 40, 41, 42, 43
2.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① 양극화 대응 전략 마련	국정 49, 51, 53, 54, 55, 57, 77, 82, 84, 85, 86, 89, 93, 94, 95, 96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정 87, 88, 91, 95
	③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국정 81, 지시(0*-1*-0**)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①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② 고강도 재정혁신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지시(0*-1*-0**)
	③ 거시·재정정책 공조 강화	
4.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① 재정운용의 참여 소통 활성화	국정17-4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7-4-㉔
	② 국가발전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	국정17-4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7-4-㉔, 지시(0*-7*-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Ⅱ.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국정 17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국정 17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국정 75, 92, 93, 94, 95, 96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국정 55, 99, 100, 101, 102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	국정 38, 39, 40, 42, 43, 44, 103, 104, 105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경제안보 구축,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	국정 29, 30, 34, 35, 37, 38, 39, 41, 51, 61, 67
	②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정 49, 57, 68, 69, 71
	③ AI 3강 공고화 및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실현	국정 20, 21, 22, 26, 27, 28, 29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정 77, 78, 79, 87, 88, 91
	② 지역필수의료 확충, 연금제도 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국정 29, 32, 87, 90
	③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국정 73
5.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① 지방주도성장 지원	국정 53, 61, 81, 지시(0*-7*-1**)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국정 109, 110, 111, 112, 113
	③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	국정 40, 68, 120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Ⅲ. 재정 인프라 혁신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① 체계적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국정 17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적극적 재정환류 및 투명성 강화	국정 17
	③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	-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①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 강화	지시(0*-7*-1**)
	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시(0*-7*-1**)
	③ 재정집행 관리 강화	-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 사업 혁신		
	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국정 88, 104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시(0*-4*-0**)
	②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 중장기 미래 대비

기 본 방 향

- ◇ AI 대전환·인구구조·기후 변화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 ◇ AX·GX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AI 3강 도약·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확립
-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장 중심의 비용 효과적 탄소 감축과 기후 신산업 생태계 조성
- ◇ 민생, 청년, 노동, 지역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해소 방향성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현안 대응
- ◇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
- ◇ 양극화·지방 소멸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지방주도 성장,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 ◇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경제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
- ◇ 재정운용의 효과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전반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거시·재정정책 간 공조 강화
- ◇ 국민·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재정협력 공조 강화
- ◇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2	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중장기 미래 대비		실질 GDP 성장률(%)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중장기전략에 대한 국민 만족도(%)
	② AX·GX 등 산업 구조 대전환	① 산업구조 대전환 범정부 추진대책 정책수립(건)
		② 산업계 건의사항 정책반영(%)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① K-MSR 수립
		②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마련
		③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관련 토론회 개최
2.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15세 이상 고용률(%)
	① 양극화 대응 전략 마련	① 일자리·지역 등 관련 대책(수)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율(%)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① 간담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발표 건수
		② 중장기 인구전략 대책 수립
	③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정책만족도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①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문가 평가 점수
	② 고강도 재정혁신	정부 예산안 반영 과제 건수
	③ 거시·재정정책 공조 강화	① 거시·재정정책 공조 건수
		② 경제지표 부처 내 공유·확산 횟수
4.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열린재정 이용자 수(명)
	① 재정운용의 참여소통 활성화	① 예산국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점수(점)
		② 재정교육 이수자 수(명) (공무원등+일반국민 구분)
	② 국가발전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	양자·다자 협력채널 구축(건)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	① 재정데이터 활용 건수(건)
		② '모두의 재정' 재정통계 공개확대(건)

(1) 주요내용

-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로 KDI·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 잠재성장률 전망(%): (한은, '24.12월): ('21~'23)2.1 → ('25~'29)1.8
(KDI, '25.5월): ('15~'24)2.5 → ('25~'30)1.5

- 또한 양극화, AI 대전환, 기후위기,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복합 위기가 상존
- 이러한 구조적 복합위기는 단기·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 시계 체계적 전략·비전 마련을 통한 대응 필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복합 구조위기 대응 관련 미래전략 제시 및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사회자본 활성화 등으로 사회 전반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 (양극화 완화) 일자리, 소득·자산, 지역 등 분야별 양극화 완화 위한 정책방향 도출, 단기 현안 대응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대응과제 마련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적 반전을 달성하고, 부문별 인구감소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적응력 제고
- (협동조합 활성화) 양극화·지방 소멸 등 구조적 리스크 대응 및 포용적 사회 구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과제 추진

- 전략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화하고, 거시·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여 경제성장 견인
 -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구조 혁신 TF」 상시 운영, 재정지표 분석·관리체계 고도화,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 마련 등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
 -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 확충
- 참여·공개·협력 기반의 재정운용을 통해 국민주권재정 실질적 구현
 - 재정운용 소과정에 국민·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참여 소통 확대 추진
 - 주요국 정부와 고위급 협의 채널 구축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재정협력에 적극 참여
 - 재정정보 공개 내실화·확대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30			
실질 GDP 성장률(%)	4.0	2.7	1.4	2.0	1.0	30-50 클럽 평균 성장률 상회	30-50 클럽은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들로서,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주요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한국은행 발표	한국은행 발표

(1) 주요 내용

- (미래사회변화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및 AI 대전환·기후위기 대응 관련 구조전환 방안 마련
 - (중장기전략 마련) AI 대전환·거버넌스 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조망해, 이에 기반한 미래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
- (산업구조 대전환) AX·GX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
 - (AX(AI Transformation)) AI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모델 개발, 인재 양성, AI 대전환 등 핵심 정책과제 발굴 추진
 - (GX(Green Transformation)) 2035 NDC 이행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 수립 지원
- (탄소중립 기반 구축) 배출권거래제 + 자발적 탄소시장 등 시장 기반을 활용한 감축 유인 제고 및 ESG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 K-MSR 도입, 배출권시장 참여자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관련 논의 지속
 - 시장의 수요·공급 활성화, 시장 기반 마련 등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관련 대책 수립
 - EU CBAM 본격 시행에 따라 수출기업 부담 현실화, 우리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연구
 - 녹색·전환금융 연계 등 기업 ESG 공시 지원 위한 논의 지속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
관리과제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 중장기전략에 대한 국민 만족도(%)
	② AX·GX 등 산업 구조 대전환	▶ 산업구조 대전환 범정부 추진대책 정책수립(건) ▶ 산업계 건의사항 정책반영(%)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 K-MSR 수립(건)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마련(건) ▶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안 관련 토론회(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	신규	신규	신규	5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규지표의 정책 수립 건수 조사가 불가능한 점 고려 필요,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해 과별 1개 이상의 정책 수립 목표	보도자료 등	보도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중장기전략 등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갈등관리 필요
 - 전략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외 기획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제고
 - 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수렴 채널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전략 공감도 제고
- (AX·GX 전략 마련) 부처 간 협의 조정 및 재정지원 관련 과제 검토 등 적극 협의
- K-MSR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계-산업계 갈등 가능성 →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선제적 갈등관리 추진
 - NDC 부처 협의체, 배출권할당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계 -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I-1-①)

□ 추진배경

- 기술·산업 대전환,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복합 과제 도전에 직면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전략 수립 필요

⇒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종합적인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처와 대학, 정부출연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 구성('26.1월)

* 기획처 포함 KDI, 서울대 등 40여개 기관, 90여명, 7개 분과로 구성

-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권오현 前 삼성전자 회장)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 20명, 3개 분과로 구성

-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26.1월~), 시민사회 토론회·포럼·컨퍼런스·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핵심과제 공론화 추진

⇒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토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도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민관협력체 구성	'26.1월	
	국민 의견 수렴 관련 국민제안 홈페이지 개설	'26.2월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6.3월	
2/4분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6.4월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26.5~6월	
3/4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	'26.9월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6.10월	
4/4분기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26.11월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6.12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발표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처와 대학, 정부출연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 구성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전체·분과) 및 전문가 간담회, 포럼·컨퍼런스 등 개최
- 일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 대국민 공모전 개최, 시민사회 간담회 등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민관협력체 분과회의	'26.1~11월
	민관협력체 전체회의	'26.1~11월
	중장기전략위원회 분과회의	'26.1~12월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26.1~12월
간담회	중장기전략 전문가 간담회	'26.1~12월
	중장기전략 시민사회 간담회	'26.1~12월
	미래전략포럼	'26.6~12월
	미래전략컨퍼런스	'26.6~12월
공모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26.5~11월

□ 기대효과

-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비전 제시 및 구조적 복합위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I -1- 일반재정②)				
①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1132)	일반회계	9.2	33.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중장기전략에 대한 국민 만족도(%)	-	-	-	70	'25년 민간위원 평가 등을 고려 정량적 질적요소를 평가가능한 지표로 변경,, 중장기전략은 인구기후위기 등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책과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므로 대표성 충족, '26년 목표치는 중장기 전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시 도전적 목표설정(처음 시도하는 성과지표로, 비교할 실적이 없는 점도 감안 필요)	중장기 전략 관련 전문가 등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지

② AX · GX 등 산업 구조 대전환 (I-1-②)

□ 추진배경

- 최근 우리 경제는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

⇒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도약을 위하여 AX·GX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AX(AI Transformation)) AI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모델 개발, 인재 양성, AI 대전환 등 핵심 정책과제 발굴 추진
 - (AX 스프린트) 생활·산업 밀접 분야에서 1~2년 내 시장 침투가 가능한 AI 적용 제품·서비스를 선정하여 개발·출시·상용화 지원
- (GX(Green Transformation)) 2035 NDC 이행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 수립 지원
 - (K-GX 전략 수립 지원)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수송 등에 대한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 마련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산업 관련 현장 간담회	1~3월	
	AX 스프린트 추진계획 발표	~3월	
2/4분기	신산업 관련 현장 간담회	4~6월	
3/4분기	신산업 관련 현장 간담회	~7월	
	AX 스프린트 추진상황 점검	'26.下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범부처 회의 및 업종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진행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AX 스프린트 범부처 회의	상시
간담회	전략산업 업종별 간담회	1~7월

□ 기대효과

- 전산업 부문의 AX 대전환, 전국민 AI 활용도 제고 등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 실현하는 녹색경제로의 대전환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산업구조 대전환 범정부 추진대책 정책수립(건)	-	-	-	3	AX·GX 등 산업대전환 관련 정책* 마련·발표 * 사업추진방안, 재정투자방안 등	정책 발표, 대책 마련	장관급 회의 안건 상정·발표, 보도자료 등
산업계 건의사항 정책반영(%)	-	-	-	20	■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의 중심으로 반영 ■ 민원성, 이해관계 상충, 지엽적 건의사항 등은 반영이 어려운점 감안	관계부처 대책, 중장기전략 등에 포함된 건의사항 반영 비율	대외발표 안건, 보도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등

3 탄소중립 기반 구축(I-1-③)

□ 추진배경

- 2035 NDC*로서 '18년 대비 $\Delta 53 \sim 61\%$ 감축목표 제출('25.11월), 선형감축 이상이라는 주요국 대비 도전적 목표** 설정

* 2030 NDC는 $\Delta 40\%$ 감축목표 제출('21년)

** 주요국 중 선형감축 초과목표 국가 : 영, 독 / 그 외 국가는 선형감축 이하

- 美파리협정 탈퇴, 위해성 판단 폐기 등 탈탄소 의지 후퇴, 中배출정점('24년 예상) 대비 '35년 $\Delta 7\sim 10\%$ 감축** 계획 발표('25.11월)

* 미국은 국제해사기구(IMO) 중기조치 도입도 강하게 반대 → 중기조치 채택 1년 유예

** 중국, 10년간 7~10% 감축 계획 vs 한국, 12년간(배출정점 18년) 40% 감축 추진중(NDC 2030)

- EU 공급망실사 등 글로벌 ESG 제도화 + 한국형 지속가능공시 초안 既발표 → 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 탄소 감축이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합리적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련 제도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탄소중립 이행) 미래세대·전문가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달성 기반 마련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산업부·기후부 등과의 협업,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ESG 확산)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ESG 정책 조정 및 제도·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
- (배출권 시장 활성화) 시장 안정화 제도(K-MSR) 도입, 참여자 확대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시장의 수요, 공급을 활성화하며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배출권시장 활성화) 관계 부처 논의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관계 부처 논의	'26.2월	
	(탄소중립 이행) 배출권시장 모니터링	계속	
2/4분기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대책 발표	'26.5월	
	(탄소중립 이행) EU CBAM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분석	'26.4월	
	(탄소중립 이행) 배출권시장 모니터링	계속	
3/4분기	(배출권시장 활성화) 한국형 시장 안정화 제도 도입·운영	'26.8월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거래체계 관련 관계 부처 논의	'26.9월	
	(탄소중립 이행) 배출권시장 모니터링	계속	
4/4분기	(배출권시장 활성화) 참여자 확대, 파생상품 도입 등 검토	계속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수요·공급 활성화 관련 추가 과제 발굴	'26.12월	
	(탄소중립 이행) 배출권시장 모니터링	계속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배출권할당위를 통해 민간 전문가, 부처 간 의견 수렴
-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수립시 한국거래소, 대한상의 등 관련 기관 및 관심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진행
- 중장기 감축경로, ESG 정책 등 논의시 관계 부처협의체를 통해 환경계 - 산업계 의견 수렴·조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자발적 탄소시장 전문가·업계 간담회	상시
	배출권시장 고도화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상시
회의	배출권시장 고도화 관련 관계 부처 회의	상시
	배출권할당위원회 개최	'26.8월

□ 기대효과

- 시장 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거래 안정성 제고 등
배출권시장 안정화를 통한 기업 감축 유인 제고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제 탄소규제 대응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K-MSR 수립(건)	-	-	-	1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시장내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 수립	대외 발표	보도자료 등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건)	-	-	-	1	시장의 수요, 공급을 활성화하며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대외 발표	보도자료 등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관련 토론회 개최(건)	-	-	-	1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발표 이후 법 제정방향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계획 등

(1) 주요 내용

□ (양극화 대응) AI대전환, K자형 경제 고착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위한
주요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 (일자리·상생) AI 전환기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기본사회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본적 삶 보장 강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균형) 거점육성, 성장앵커 재배치 등 5극3특 성장기반 구축, 핵심인프라 구축 확대 등 지방주도 성장, 자생력 강화 중점 지원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연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양극화 해소 현안 대응 및 일자리·초광역 지원 강화 추진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반전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부문별 충격에 대한 적응력 제고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제도개선과 함께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제도 개편 추진
- 총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응, 지방·교육·국방 등 부문별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 15세 이상 고용률(%)
관리과제	① 양극화 대응 전략 마련	▶ 일자리·지역 등 관련 대책(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율(%)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간담회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책 발표 건수 ▶ 중장기 인구전략 대책 수립
	③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정책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15세 이상 고용률(%)	62.6	62.7	62.9	63.0	역대 최고수준인 '25년 고용률 초과 달성	월별 고용률의 연 평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지원기관(국회, 관계부처 등) 간 갈등으로 인해 정책 수립·추진에
어려움 발생 우려
 - 소통채널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부처·이해관계자,
중장기전략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지속 보완
- AI 대전환으로 피지컬 AI 등 일자리 대체·감소 우려가 큰 가운데,
고용경직성 등은 이를 가속화할 우려
 - 산업전환기 근로자 경쟁력 제고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급감
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조합 필요
- 복지제도 개편,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
마련시 재정부담 증가, 사회적 갈등 심화와 같은 문제 발생 우려
 -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적극 마련

-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연관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갈등관리 필요
 - 현장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수렴 채널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이해 제고
 - 전문가간담회, 시·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마련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양극화 대응 전략 마련(1-2-①)

□ 추진배경

① (양극화 심화) 소득분배 악화*, 세대간 고용격차 심화**, 수도권 집중 등 양극화로 체감경제 어려움 지속

* (지니계수) '23 0.323 → '24 0.325, (5분위배율) '23 5.72배 → '24 5.78배 (데이터처, '25.12월)

** 전체(15세~)/청년(15~29세) 고용률(%) : ('22) 62.1/46.6 → ('25) 62.9/45.0

② (AI전환 충격) AI 등 산업대 전환 따른 대기업·IT 분야 성장편중 및 중소기업 투자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제조업 OECD, '20년 : (韓) 36.8 (佛) 62.7 (獨) 56.1 (日)¹⁹ 57.2 (OECD²⁰ 평균) 55.8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 100, '24.6월 고용부) : (대기업) 100 (대기업) 62.3 (중소기업) 57.7 (중소기업) 41.5

③ (지방) 자산기업·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라* 비수도권 공동화로 국가 전체 성장동력 약화 추세

* 지역 내 총생산(GRDP) 수도권 비중 : ('15) 50.1% → ('24) 52.8%

국내 500대 기업 본사 소재지의 77%가 수도권 집중('2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장기전략 수립)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일환 사회분야 중심 통합 성장 도전과제 대한 중장기전략 마련(2030, 2030+α, 단기 정책대응과제 포함)
 - 복지·일자리·상생, 지역균형성장 등 민관협업체 구성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국민체감 분야 제도개편·재정전략 도출 및 구체화
- (양극화 대응) 소득분배, 세대·계층간 고용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AI 전환기 고용충격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본적 삶 보장 강화 및 대·중견기업 채용을 유도,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수당 개선 등 비정규직·기간제 공공분야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 모색, 개정노조법 등 관련 법적·예산상 쟁점에 대한 현장 안착 지원
-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근로자의 원활한 이·전직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 일자리 선순환 촉진
- (지역균형) 5극3특 중심 초광역권 성장기반 구축 및 지방주도 인프라 조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 초광역권 단위의 전략산업(성장엔진) 및 거점 육성, 초광역권계정 신설 지원 등 관련 지역균형발전 전략 과제 구체화
 - 초광역권 육성 추진협의체 지원 및 관계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 및 전문가 의견청취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민관협의체(추진단) 구성 및 논의	1월	
	양극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	
	개정노조법 대비 공공부문 관계부처 TF 가동 및 점검	2~3월	
2/4분기	다함께 도약 TF 개최·운영	4월	
	다함께 도약 프로젝트 1호(일자리) 대책 발표	4~5월	
	초광역(5극3특) 육성 중앙부처 총괄작업반 TF 운영	5월~	
	다함께 도약 프로젝트 2호(지역균형) 대책 발표	6월	
3/4분기	초광역(5극3특) 육성 중앙부처 총괄작업반 TF 운영	7월	
	'27년 양극화 대응 관련 예산안 발표	~9월	
	양극화 대응 추가과제 발굴	~9월	
4/4분기	'27년 양극화 대응 관련 예산 확정	12월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청년, 기업, 의료단체, 지역 등 현장 애로사항,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대응방안 마련
- 예산의 적기 투입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주도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간담회	다함께 도약(지역균형) 전문가 간담회	1~3월 + 하반기 진행
	다함께 도약(보건·의료) 전문가 간담회	
	다함께 도약(일자리) 전문가 간담회	
회의	양극화 대응 정책 관련 관계부처 회의	상시
	중장기전략위원회 분과 회의	

□ 기대효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이동성 회복
- 다극 체제의 지역주도 발전 기반 마련하여 국가 성장 활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일자리·지역 등 관련 대책 발표(수)	-	-	-	3	일자리·지역 등 관련 대책 (3건 이상)	일자리·지역 등 대책 발표	보도자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율(%)	0.0	△1.3	△0.6	+0.2%p	(비정규직 임금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 α = +0.2%p * α: 기본급 외 수당·교통비 등 추가 요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Ⅰ-2-②)

□ 추진배경

- '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4년부터 2년 연속 반등했으나 여전히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 이하 수준
- '2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고령화 가속화되어 고령사회 진입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24년)
- 장기적인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20년), 총인구 감소('21년)로 노동·지방·교육 등 부문별 축소 우려 대두

⇒ 저출생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반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응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제도개선과 함께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제도 개편 추진
 - 복지부·노동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신규 정책과제 발굴
- 총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응, 지방·교육·국방 등 부문별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전문가·정책수요자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노동·지방·교육 등 주요 부문의 전략목표·성과지표 수립, 추진 과제 발굴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간담회(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연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관계부처 회의	연중	
2/4분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	~'26.6월	
4/4분기	범정부 인구정책 방향 마련	~'26.12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구 분야) 마련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정책 수요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 (정책 수요자)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평가 및 애로사항, 정책제언 청취
(전문가) 인구정책 현황 분석·평가, 주요국 사례 검토 및 정책 제언 등 수렴

-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정책화하기 위해 복지부·노동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회의 개최·참석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인구정책 수요자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상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관련 관계부처 회의	

□ 기대효과

-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고령친화적 고용·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반전
-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선제 발굴하여 총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 유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간담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발표 건수			4	12회	'25년 실적(간담회 4회&대책발표 0회)을 상회하는 목표 설정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등
중장기 인구전략 대책 수립				1회	중장기 인구전략 대책을 연내 수립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등

③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1-2-③)

□ 추진배경

- 양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포용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 역할 부각
-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인 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공급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기본사회 달성 기여 가능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 도출
- (경쟁력·정체성 강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 활동 촉진
- (연대·협력 시너지 창출) 연합회 및 거점실행조직*의 기능 강화, 사회연대경제 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금융 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할 강화) 의료·돌봄, 주거·관광·교육, 농어촌 서비스 공급 등 지역공동체 단위 삶의 필수영역 보완 역할 지원
- (‘협동조합의 날’ 행사) 기념행사 지속 개최, 사회연대가치 확산 등 홍보 확대 및 인식 제고 도모

*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26.1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6.1월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개최	'26.2월	
2/4분기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발표	'26.4월	
	협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최	'26.6월	
3/4분기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개최	'26.7월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개최	'26.8월	
4/4분기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6.12월	
	협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최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시 **회의체**(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정책협의회 등), **현장 간담회** 등으로 **의견수렴** 진행

* 구성 : 기획처(주재), 행안·복지·중기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 사회연대경제조직 **현장방문 및 간담회** 진행 등 **의견 수렴**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및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업종·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현장, 관계부처,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26년 반기별 1회
	협동조합 실무협의회	'26년 반기별 1회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상시
간담회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간담회	'26.1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26.1월
	협동조합 정책 콘퍼런스('협동조합의 날' 행사)	'26.7월

□ 기대효과

-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달성에 기여
- 의료·돌봄 등 생활 필수서비스 공급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① 협동조합 활성화사업(1331-302)	일반회계	15.8	29.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협동조합 정책만족도	-	-	-	85	협동조합이 정체성에 부합하는 비전·미션·목적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5%(제7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5)인 것을 고려하여, 정책만족도 목표치는 이를 상회하는 85%로 설정	협동조합 이사장·임원·조합원, 전문가, 협의회 대상 설문 조사	직접 조사

성과목표 I-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1) 주요 내용

- ☐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 「재정구조 혁신 TF」 상시 운영, 재정지표 분석·관리체계 고도화,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 마련 등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
- ☐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의 경제 건인 효과 확충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 지출혁신 방안 도출 수
관리과제	①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문가 평가 점수
	② 고강도 재정혁신	▶ 정부 예산안 반영 과제 건수
	③ 거시·재정정책 공조 강화	▶ 거시·재정정책 공조 건수 ▶ 경제지표 부처 내 공유·확산 횟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지출혁신 방안 도출 수	신규			30개 이상	부처·이해관계자 협의 필요 등을 감안, 매월 2~3건 이상의 과제 발굴 목표	차관급 이상 회의체에서 발표된 지출혁신 과제 수	보도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여러 재정혁신 방안 마련 시 일반 국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I-3-①)

□ 추진배경

-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중기 재정전략 수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분야별·부처별 자원배분 방향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설정하여 반영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예년보다 조기에 개최하여 논의 내용을 '27년 예산안 및 '26~'30년 중기계획에 충실히 반영
- 민간 전문가·시민사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중기 재정전략 수립의 투명성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확대개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장관급 격상,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성 적극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평가·분석보고서를 구체화*하여 중기계획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

* 국정과제 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국가재정법 개정안(박홍근의원안) 발의('24.11.1일) → 개정 完('26.2.10일)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1~12월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1~12월	
2/4분기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분기 중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장관급 격상	2분기 중	
3/4분기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작성 및 국회 재경위 제출	5~8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및 국회 제출	6~9월	
4/4분기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운영을 통해 12대 예산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 및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안 마련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지출효율화 TF」와 연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출범	4월
회의	분야별 실무회의	3~5월
중간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중간보고	5월
최종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최종보고	11월

-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중기 재정전략 등에 대해 논의 및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연중
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분기 중
회의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8월

□ 기대효과

- 적극적·선제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회복세 공고화 및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뒷받침
-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경제 선순환’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①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2712)	일반회계	22	36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301)	일반회계	22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문가 평가 점수(점)	77.4	74.5	75.2	75.7	최근 점수 하향 추세 등을 감안, 최근 3년간 평균(75.7점)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전문가 평가 점수	설문조사

② 고강도 재정혁신(1-3-②)

□ 추진배경

- (재정구조 혁신) 안정적 재정운용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차관 주재 「재정구조 혁신 TF」 출범('25.9월)
 - 하위분과인 지출혁신반(「지출효율화 TF」)을 통해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장기 지출구조 혁신 추진
- (재정지표 관리) 선제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재정지표 기반 분석 강화 및 재정통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 (재정분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방주도의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정구조 혁신 TF) 지출 + 세입 + 사회보험·연금 + 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 추진
 - 주기적으로 차관 주재 점검회의(분기별 1회 목표) 개최하여 작업반별 발굴·추진한 주요 혁신과제 점검·논의
- (지출효율화 TF) 기존 단년도 지출구조조정(예산편성 시기 추진)과 함께, 제도개선 등 과제에 대해 상시 지출효율화 병행
 - 의무·경직성지출 제도개선,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적극 발굴·추진
- (재정지표 관리) 월간 재정동향 등을 통해 주요 재정통계를 산출·분석하고, 신규 보완지표 발굴·추가 검토
 - IMF, S&P 등 주요 국제기구·신평사의 재정운용 평가를 점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산출·관리체계 정비
- (재정분권)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중앙·지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제시
 - 중앙·지방 재정여건 및 가용재원 분석, 세원 이양에 상응하는 지방 기능이양 방안 등 검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개최	1분기 중	
	• 재정통계 개선 방안 관련 IMF 협의	1~12월	
	• 「월간 재정동향」 발간	1~3월	
	• 신규 보완지표 도입 검토	1~6월	
	•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및 회의(4차례)	1~3월	
2/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개최	2분기 중	
	• 「월간 재정동향」 발간	4~6월	
	• 「한국 통합재정수지」 발간	4월	
	• IMF Fiscal Monitor 분석 및 대응	4월	
	• 「범정부 재정분권 TF」 회의 및 재정분권 방안 마련	4~6월	
3/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개최	3분기 중	
	• IMF, S&P 등 국제기구·신평사 연례협의 대응	8~12월	
	• 「범정부 재정분권 TF」 회의 및 재정분권 TF안 발표	7~9월	
4/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개최	4분기 중	
	• IMF Fiscal Monitor 분석 및 대응	10월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발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정구조 혁신) 「재정구조 혁신 TF」 및 하위 작업반의
관계부처·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혁신과제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차관 주재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개최	분기별 1회
회의	「지출효율화 TF」 작업반별 회의 개최	상시

- (재정지표 관리) 우리나라 재정지표의 개선·보완사항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민간전문가, 국제기구 등의 의견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방안 사례연구’ 연구용역 최종 보고	4월
회의	우리나라 재정통계 개선을 위한 IMF 협의	1~12월

- (재정분권)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 수렴 및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범정부 재정분권 TF」 회의	1~9월
간담회	재정분권 연계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간담회	2월

□ 기대효과

- (재정구조 혁신) 재정 전반의 혁신과제 추진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지표 관리) 재정지표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정위험 대응 및 재정통계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 (재정분권) 중앙·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주도 성장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정구조 혁신 TF」 운영				
①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2712)		일반회계	22	36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301)		일반회계	22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정부 예산안 반영 과제 건수	신규			12	분야별 지출효율화 과제 1건 이상 정부예산안에 반영	「지출효율화 TF」에서 발굴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과제 건수	보도자료 등

③ 거시·재정정책 공조 강화(1-3-③)

□ 추진배경

-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효과적 수행 및 균형적 예산 편성·배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 다만, 정치·학계 등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기능 분리로 인한 의사결정 속도 저하, 정책 엇박자 발생 우려 제기
 -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경제·재정 정책 운영을 위하여 재정정책 수립시 거시경제 현황 분석 및 경제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

⇒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거시분석지원팀」을 신설, GDP·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적기·정확하게 정책 수립과 연계 목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협력 네트워크) 재정이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경부·한은 등과 정책 공조를 통한 최적 Policy Mix 추진
 - 현안 발생시 기획처-재경부-금융위 장관급 거시재정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정책 협력 확대
 - 한국은행과 고위·실무급 다각적 협력을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합성 확보
 - (거시지표 모니터링) 선제적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경제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경제지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민 경제와 밀접 연관되고 변동성이 큰 유가증권·외환, 채권, 원자재 시장 동향 日 2회 모니터링 → 경제흐름 변화 조기 인지
 - 한국은행·데이터처 협의를 바탕으로 GDP·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사전 입수하여 우리경제 상황에 기반한 재정정책 수립 기여
- ⇒ 모니터링 결과 및 시사점을 부처 내 공유하여 재정정책 수립에 활용

- (분석역량 고도화) AI를 활용하여 거시경제 데이터 수집 자동화, 수요자 기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분석·가공 기능 구축 추진
 - 거시경제·제정 등 정부기관, 한국은행 등의 발표 통계 및 유가증권·국채·환율 등 시장 데이터 자동 현행화 시스템 도입 목표
 - ※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 국가 통계,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 보도자료 등
 - 기획처 직원 누구나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시각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양식 구축 지원
 - ※ 한국은행 데이터 AI 분석도구(바이더스) 벤치마킹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표 사전공유 관련 한은·데이터처 협의	'26.1~2월	
	1분기 발표 핵심 거시지표(GDP·물가 등) 사전 보고 및 공유	'26.1~3월	
2/4분기	거시경제 분석 AI 시스템 개발사업 개시(정보화팀 협조)	'26.4월	
	기획처-한국은행 고위급 회담(잠정)	'26.5월(잠정)	
	기획처-재경부-금융위 장관급 회의체 운영	미정	
	2분기 발표 핵심 거시지표(GDP·물가 등) 사전 보고 및 공유	'26.4~6월	
3/4분기	기획처-재경부-금융위 장관급 회의체 운영	미정	
	3분기 발표 핵심 거시지표(GDP·물가 등) 사전 보고 및 공유	'26.7~9월	
4/4분기	거시경제 분석 AI 시스템 중간 점검(정보화팀 협조)	'26.10월	
	기획처-재경부-금융위 장관급 회의체 운영	미정	
	4분기 발표 핵심 거시지표(GDP·물가 등) 사전 보고 및 공유	'26.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거시경제 데이터 AI 분석도구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 회의	'26.1월
	기획처-재경부-금융위 장관급 월간 회의체 운영	'26.4월~
	AI 시스템 개발 관련 정보화·NIA 실무 협의	상시
간담회	기획처 장관-한은 총재 간담회	'26.5월

□ 기대효과

- 물가·GDP 변동 확대와 중동 사태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상황 분석에 기반한 재정정책 적기 수립
 - 기획처 자체적으로 거시경제 분석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경제 부처 간 상호 공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도 가능
- ⇒ 경제부처 분리 취지 달성 기여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거시·재정정책 공조 건수	-	-	-	3	장관 임명 시기('26.4월)를 감안하여 3회 수준 거시·재정정책 정책 공조 추진	협의 횟수	회의체 운영 횟수
경제지표 부처 내 공유·확산 횟수	-	-	-	48	매월 4개 수준 경제지표를 사전 분석하여 부처내 공유	보고자료 작성 횟수	보고자료 공유 횟수를 내부 산출

(1) 주요 내용

- 재정운용 과정에 국민, 지방정부 등 정책수요자와의 참여 소통 확대를 추진하여 국민주권재정 구현 뒷받침
 - 국민 참여범위 확대, 지원협의회 구성·역할 확대 및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홍보강화를 통해 참여예산제도 인지도 개선
 -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대국민 재정교육을 강화하고 재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품질 지속 관리
 - 지방정부와의 재정·정책 협력 소통 강화 등 협력기반 구축
- OECD, PEMNA 등 다자협력체·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재정분야 글로벌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규범 정립 등에 협력
 - 주요국 간 재정운용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재정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대안 제시
 - 개도국 재정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분야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 범위를 넓히고, 알기 쉽고 투명하게 재정정보 확대 제공
 - 「열린재정」을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하여 중앙재정 통계 확대는 물론, 지방 교육재정 통계도 중앙재정과 유사한 항목 중심으로 확대 공개

* ('25.12월) 중앙재정 157종, 지방재정 51종, 교육재정 34종 공개

→ ('26) 중앙재정 +15종, 지방재정 +95종, 교육재정 +245종 추가 연계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 열린재정 이용자 수(명)
관리과제	① 재정운용의 참여소통 활성화	▶ 예산국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점수(점) ▶ 재정교육 이수자 수(명)
	② 국가발전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양자·다자 협력채널 구축(건)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	▶ 재정데이터 활용건수(명)
		▶ 모두의 재정 구축 및 공개(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열린재정 이용자 수(명)	176,055	391,184	507,054	582,000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자체수집 (열린재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국민이 주인인 열린 재정’ 실현을 위해 일반 국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
- ☐ 중동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나 신용평가사 및 국제기구는 재정건전성 측면 지속 강조
 - 우리 재정운용이 회복·성장·구조개혁을 견인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음을 신평사 등에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필요
- ☐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 시 행안부(지방재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재정운용의 참여 소통 활성화(I-4-①)

□ 추진배경

- (참여예산) 기존 예산편성 중심에서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 소 과정에 국민의 복잡·다양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
- (재정교육) 재정규모의 지속증가 및 재정제도의 복잡화에 따라 재정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정이해도 제고 필요성 증대
- (지방정부 협력)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재정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협력 소통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 국민제안 사전검토를 담당할 전문가 협의체를 ‘국민참여자문단’^(기존 지원협의회)으로 확대·개편
 -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 인지도 제고
 - 기존 ①신규사업 제안 외에 ②지출효율화 제안, ③기타 자유제안 추가
- (재정교육) 재정업무 담당자 및 국민의 재정이해력 증진을 위해 교육 커리큘럼 신설 및 콘텐츠 개발 등 재정교육 강화 추진
 -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참여형 프로그램 신설
 - 전문가 교육을 통한 강사진 활용 등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
- (지방정부 협력) 기획처 장관 주재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중앙-지방소통 협력기반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재정교육 홈페이지 운영	1~12월	
	• 2026년 재정교육 교육계획 수립	2월	
	• 제1차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개최	2월	
	• 국민참여단 대상 재정교육 실시 및 위촉	3월	
	• 국민참여자문단 확대·개편 및 위원 위촉	3월	
	• 나라살림멘토단 운영(실무경력자 활용 재정교육)	3~12월	
2/4분기	• 재정교육 운영(집합, 사이버 등)	4~12월	
	•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정캠프	4~12월	
	• 국민참여예산 제안 전문가 사전검토 및 부처 적격성 검토	4~5월	
	• 국민참여단 1~4차 사업화 및 사업설명회(6.5) 개최	4~6월	
	•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5월	
	• 대국민 재정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6월	
3/4분기	•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7월	
	• 대학생 대상 재정교육(집합)	7~8월	
	• 제2차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개최	미정	
4/4분기	• 재정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월	
	• 재정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12월	
	• 재정교육 세미나 개최	12월	
	• 국민참여자문단 (가칭) 과정평가보고서 작성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사업화 과정에서 국민참여단 및 전문가 의견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전문가 사전검토	4~5월
	예산국민참여단 1~4차 사업화 및 사업설명회 개최	4~6월
국민제안	국민참여예산 사업발굴형·지출효율화형 국민제안 수렴	상시
만족도 조사	예산국민참여단 사업화 과정 만족도 조사	7월

- (재정교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생 대상 재정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교육 운영 전문가 간담회 실시	상시
국민제안	재정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1월
만족도 조사	'26년 재정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1~12월

□ 기대효과

- 예산 쏠 과정에서 일반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질적 '국민주권재정' 구현
-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 및 재정운용의 공감대 형성, 재정업무 담당자의 역량 향상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①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2712)			
■ 재정교육(303)		6.55	10.35
■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304)		5.93	11.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예산국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점수(점)		84.1	83.1	84.1	84.7		전년도 만족도 조사 실적치(84.1)에 최근 5년간('21~'25년) 연평균 증가율(0.76%)를 적용	예산국민참여단 설문조사	자체수집
재정교육 이수자 수(명)	공무원등	5,145	6,663	7,105	7,400		전년도 실적 및 '26년 교육계획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 상향된 목표치 설정	온·오프라인교육 이수자 수 합계	자체수집
	일반국민	-	-	-	690		신규	대면교육 참가자 수 합계	자체수집

② 국가발전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I-4-②)

□ 추진배경

- 기획처 출범에 따라 조직의 위상·역할 등을 국제사회에 알려 재정·기획 당국으로서 글로벌 재정협력에 참여할 필요
 - 양자 고위급 협력 채널 신설, 다자 공동연구, 포럼·세미나 등을 통하여 재정 및 인구·기후위기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협력 필요
 - 아울러, 중동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하에서 재정의 역할과 관련한 국제 논의 및 정책 공조 필요성 증대
- ⇒ 대외협력 창구이자 국제협력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국가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공조 강화) 고위급 해외인사 접견*과 국제기구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재정·미래 전략 등 공통 현안에 대해 지속 협력
 - * PEMNA 고위급총회 등 주요국 고위급 방한 시 양자 면담을 추진하여 협력 방안 모색
 - ** '26년도 한-OECD 공동연구 수행 추진
- (실무협약) 우리의 정책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및 국제보고서 등에 긍정 반영되도록 국제기구·신평가 연례협의 등에 적극 대응
 - * 신평가(Fitch, Moody's, S&P) 연례협의 및 OECD, IMF, AMRO 등 국제기구 보고서 발간
- (개도국 재정협력 확대) 재정 분야*의 정책 자문 프로그램을 강화 (모듈화)하여 개도국 거버넌스 체계적 지원
 -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성과기반 예산편성, 중기재정운용계획, 민자사업 제도 등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주요국 정부·국제기구 앞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명의 서한 발송	'26.1월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미션단 면담	'26.2월	
	• ADB 아시아경제전망(ADO) 미션단 면담	'26.2월	
	• S&P 연례협의를단 면담	'26.3월	
	• 핀란드 재정위원회 의원단 면담	'26.3월	
	• 2026년 PEMNA 고위급총회(연차총회)	'26.3월	
2/4분기	• IMF staff visit	'26.5월	
	• OECD 고위예산관료회의(SBO) 참석	'26.5월	
	• PEMNA 방문연수(Study Visit)	'26.5~8월	
3/4분기	• 유관 국제기구(AMRO, IMF STI) 방문조사	'26.8~9월	
	• 한-OECD 국제재정포럼 참석(파리)	'26.9월	
4/4분기	• AMRO 연례협의	'26.12월	
	• Fitch 연례협의	'26.12월	
	• 개도국 대상 지식공유 프로그램 연구용역 발주	'26.12월	
상시	•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위원회 등 범정부 회의체 대응	계속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PEMNA 등 국제 재정 네트워크 공고화를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의견 교류

☐ 기대효과

- 한국의 재정개혁 경험과 노하우를 他 국가와 공유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협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2712)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세부사업)	일반회계	22	35.6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내역사업)		1.2	9.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양자·다자 협력채널 구축(건수)	신규	신규	신규	16회	기획처 출범 및 국제재정협력과 신설에 따라 신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 4회(분기별 1회), 실무급 협력채널 구축 12회(분기별 3회)	외국정부·국제 기구와의 공식 면담·회의·협의	보도자료 또는 내부증빙자료 등

3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I-4-③)

□ 추진배경

- (정보공개) 재정정보가 중앙·지방·교육 재정별 플랫폼*을 통해 분절적으로 관리·제공됨에 따라 체계적 정보 활용 제한

* 열린재정(중앙정부, 기획처), 지방재정365(행안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재정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원스톱으로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시스템 간 연계 강화 필요

⇒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연내 구축

* 중앙재정 정보공개플랫폼 '열린재정' → '모두의재정' 플랫폼으로 개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합 재정정보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지방교육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구축

- 현재 중앙재정(“열린재정”), 지방재정(“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분절적으로 관리·제공되는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 (AI 서비스) 대국민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을 통해 재정특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확대

- AI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 지식DB를 구축하고 다양한 AI 기능 제공으로 국민의 재정정보 활용의 새로운 경험 제공

< '26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AI 서비스 제공(안) >

서비스명	열린질문 AI	통계분석 AI	보고서 분석 AI	수혜서비스 AI
서비스 내용	채팅 형식의 생성형 AI 서비스	AI가 나만의 통계 데이터 생성	보고서를 AI가 설명 및 요약분석	AI가 다양한 속성으로 맞춤형 정보 추천

○ (공개 정보 확대) 재정통계 공개 확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재정운용의 흐름과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확대 제공**

- 중앙 위주의 정보 공개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재정별 핵심 통계를 신규 발굴하여 공개*

* ('25년) 중앙재정 157종, 지방재정 51종, 교육재정 34종 공개

→ ('26년) 중앙재정 + 15종, 지방재정 +95종, 교육재정 +245종 공개 확대

- 세부사업의 예산 편성·집행·조달까지 추적되어 중앙정부 예산의 집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추진

- 「온라인 재정박물관*」 개관을 통해 재정정보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

* (예시) 재정역사관, 재정법률기록관, 재정통계관, 재정미래관, 재정시스템관 등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모두의 재정」 사업 추진	3월	
2/4분기	· 재정정보 연계 기능 구축	5월	
2/4분기	· 국가결산 정보공개	6월	
4/4분기	· '27년도 부처별 사업설명자료(정부안) 제공	10월	
4/4분기	· 온라인 재정박물관 개관 · 「모두의 재정」 구축 완료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및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기획처, 행안부, 교육부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1/4분기	· 「모두의 재정」 구축 관계기관 협의체	3월
2/4분기	· 「모두의 재정」 구축 관계기관 협의체	4월
3/4분기	· 「모두의 재정」 구축 관계기관 협의체	8월

□ 기대효과

-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데이터 신뢰성·투명성 제고에 기여
 - 「모두의 재정」 한 곳에서 통합 관리·제공하여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가공·활용 가능
- 재정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제고
 - 방대한 재정 정보를 쉽게 검색·활용 가능하여 유형별 맞춤형 재정 AI 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2713)	일반회계		207.7	223.17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5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재정데이터 활용 건수(건)	45,864	66,847	88,235	105,882	기준치* 대비 20% 증가율 반영 *3년 평균 또는 전년실적 중 최고치	재정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 API 활용종수	자체수집 (열린재정)
'모두의 재정' 재정통계 공개 확대(건)	-	-	-	355	중앙재정 +15종, 지방재정 +95종, 교육재정 +245종 공개 확대 계획	'25년 열린재정 공개건수와 비교	'모두의 재정' 구축후 인터넷 공개

기 본 방 향

- ◇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문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低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기금운영비·수지차기관 경상비 절감 등 적극적 재정운용 혁신 병행 및 정책수요자 맞춤형 소통·홍보 강화
- ◇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일터 조성, 고등교육 혁신,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K-콘텐츠 수출·문화향유 격차 해소 등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
 -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위험요인 선제대응을 위한 산재예방 투자 강화,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K-콘텐츠 수출 및 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
- ◇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창업생태계 조성,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및 AI 3강 공고화 등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국내 첨단·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AI·딥테크 등 첨단분야 스타트업 육성 강화, 유망 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적기 대응
 - 교통안전 및 편의성 제고 등 필수 SOC 투자 확대 및 농·어업 체질 개선을 통한 K푸드 가치사슬 강화
-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저출생·고령화 적극 대응, 연금개혁 뒷받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안전에 투자 확대
 - 양극화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 구축, 저소득·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연금개혁 후속조치 지속 추진 및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등 사고현장 대응 강화
- ◇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 지방주도성장 지원,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국익 연계 상생 전략형 ODA로 개편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5	15	4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지출구조조정 규모(조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총지출 증가율(전년대비 %)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① 총지출 대비 지출구조조정 규모(%) ② 부처·지자체·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건수)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①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건수) ②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① 기금 총지출(외평기금자산운용 수수료 포함) 대비 기본경비 비중(%) ②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교육·문화환경분야 투자규모(조원)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① 고용취약계층 지원규모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 억원) ②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① 대학 육성 재정투자규모(억원) ② 첨단분야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규모(명) ③ 영유아보육료 단가 (0세반 기준)(만원)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	① 재생에너지 투자규모(조원) ②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사업 개수 ③ 문화재정 총지출 대비 K-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 예산 비중(%)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산업, SOC, 농림,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조원)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경제안보 구축,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지출 증가율(%)
		② 석유비축계획 달성률(%)
		③ 창업벤처 예산 총지출 기여도(%p)
	②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미래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활성화 투자 규모(억원)
		②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
		③ 농수산업임직불금 및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규모(조원)
		④ 농림분야 예산 대비 농어업 K-푸드 산업 육성과 미래기반조성 위한 투자 비중(%)
	③ AI 3강 공고화 및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실현	① AI 관련 재정 투자규모(조원)
		② 신규 AI 시스템 투자(억원)
		③ NEXT 전략기술 투자규모(조원)
		④ 투자형 R&D 신설 및 투자규모(억원)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② 저출생 조세지출·현금 급여 통합·확대 규모(조원)
		③ 소득기준 하후상박 구조 기초연금 개혁(%)
	② 지역필수의료 확충, 연금제도 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① 지역필수의료 관련 투자규모(억원)
		②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크레딧 지원대상(명)
		③ 자살예방대응 예산투입규모(억원)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① 재난예방 강화(%)
		② 공장화재 안전강화(여부, 개소)
		③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강화(%)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공공질서안전·일행·외통·국방분야 총지출 증가율(%)
① 지방주도성장 지원		①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개수(개)
		②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규모(조원)
		③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규모(조원)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① 한국형 3축체계 투자 확대(조원)
		② 병력운영 재구조화 및 장병 복무여건 제고 사업군 투자 강화(억원)
		③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③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		① 무상 ODA 사업 수(개)
		② ODA 예산 과목구조 전면개편
		③ AI·문화 ODA 예산 증가율(전년대비 %)

(1)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 회복 및 성장의 발판 마련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성장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여건 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 유지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 프로세스 구축

(2)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22 (23년 예산안)	'23 (24년 예산안)	'24 (25년 예산안)	'25 (26년 예산안)	'30 (31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조원)	△24	△23	△24	△27	△33		최근 4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4%) 추세를 감안하여 '25년 실적 대비 20% 이상 설정	'31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31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성장동력 확충 및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 구축
- 재정지출의 성격(의무·재량, 사업비·경상경비, 한시·계속)과 무관하게 쏠 부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여부 및 규모 재검토
 - 유사·중복 사업의 사전 차단, 관행적인 효과저조·과다지원 보조사업의 적극적 정비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재투자 도모
 - 기금운영비, 수지차기관 경상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 ⇒ 「적극재정 → 성과제고 → 경제성장 → 지속가능재정」 선순환 구조 정착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총지출 증가율(%)
관리과제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총지출 대비 지출구조조정 규모(%)
		부처·지자체·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 (건수)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 (건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기금 총지출(외평기금자산운용 수수료 포함) 대비 기본경비 비중(%)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년 예산안)	'24 ('25년 예산안)	'25 ('26년 예산안)	'26 ('27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	2.8	2.5	8.1	경상 성장률 초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경기 전망'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초과 설정	'27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 경상성장률	'27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 경상성장률 (%)	3.3	6.2	3.8 ^e	4.9 ^e	* '26.1월 경제성장전략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갈등요인) 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성과관리 강화 등 지출혁신 추진 시 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우려
- ☐ (갈등관리계획)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을 재투자 하는 우선순위 조정시 부처·전문가·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관계부처 회의, 재정정책자문회의, 전문가·시민단체 간담회 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Ⅱ-1-①)

□ 추진배경

- 성장동력 확충 및 5대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여력 확보 필요

* ①AI 대전환, ②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③탄소중립, ④양극화, ⑤지방소멸

- 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예산안 편성지침) 국정성과를 뒷받침하고, 재정운용 전반의 혁신과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한 '27년 예산안 편성 방향 수립
 -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우선순위 재조정
- (지출구조조정)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 또는 근본적 구조개선 추진
 - 재량지출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나아가, 의무지출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을 마련하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현장소통 강화) 정책수요자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 강화, 예산안 발표 후 적극 홍보로 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관련 현장소통 추진	'26.1~3월	
	'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26.3월	
	'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 및 배포	'26.3월	
2/4분기	'27년 예산안 검토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26.4~8월	
	'27년 예산안 관련 현장소통 추진	'26.4~8월	
3/4분기	'27년 예산안 국회 제출	'26.9월	
	'27년 예산안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26.9~12월	
	'27년 예산안 현장 방문·간담회 추진	'26.9~12월	
4/4분기	'27년 예산 국회 의결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예산요구·편성 시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여
수혜자 맞춤형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27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협조요청 사항 전달(기획처-각 부처) *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아젠다 발굴 등 정책 우선순위 검토	'26.1~8월
간담회	부처·전문가·시민단체 대상 정책 간담회 추진	'26.1~12월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프로세스 구축
- '27년 예산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국민의 정책체감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년 예산안)	'24 ('25년 예산안)	'25 ('26년 예산안)	'26 ('27년 예산안)			
총지출 대비 지출구조조정 규모(%)	3.46	3.55	3.76	4.0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최근 3개년 대비 최대 증가폭(+0.24%p) 및 증가율(+6.4%) 설정	'27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27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부처·지자체· 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건수)	65	68	82	100	'25년 실적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보다 20% 이상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예산실 내 자체과제인 현장경청 the 100 프로젝트와 연계	재정전문가 및 부처·지자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측정	재정전문가 및 부처·지자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측정

② 유사중복 통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Ⅱ-1-②)

□ 추진배경

- 중점투자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나 신규 세수 확보는 제한적
-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저성과 보조사업을 과감하게 정비
 - 각 부처 간 사업 목적·대상이 중복되는 신규사업 추진은 정책의 일관성 및 재정의 효과성을 저해
 - 보조사업은 엄격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재투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신규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방지 및
- ② 외부평가 환류 등 통한 보조사업의 강도 높은 정비

① (유사중복 방지) 3단계에 걸친 ‘신규사업 유사중복 사전점검’을 실시해 신규요구 사업의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 각 부처가 신규사업 요구 시 과거 유사중복 빈발 관계부처(2~4개)에 유사중복 여부를 상호 열람·검증하고, 이를 기획처가 다시 검증하는 제도('18년 예산 도입)

- 검토 결과 유사중복성이 확인된 신규사업은 예산에 미반영

⇒ '27년 예산안에는 전년(68건) 보다 높은 80건 목표

- * 신규사업 차단실적: ('23) 48 → ('24) 56 → ('25) 68 → ('26목표) 80건 (+12)

② (보조사업 정비) 신규 도입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저성과·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적극 구조조정

⇒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 평가 결과 제시된 구조조정(폐지·통합·감축) 의견을 '27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이행률 96% 이상)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규사업 요구시 유사중복 검증방안 명시(편성지침)	'26.3~4월	
2/4분기	보조사업 정비계획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	'26.5월	
	각 부처 요구 신규사업에 대한 타부처 의견 조회	'26.5~6월	
3/4분기	보조사업 구조조정 예산안 편성	'26.6~8월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유사중복 의견 예산반영	'26.6~8월	
	'27년 예산안 국고보조사업 정비실적 정리	'26.6~8월	
4/4분기	유사중복 차단 및 보조사업 구조조정 예산안 국회 확정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등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 보조사업 편성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수시
의견수렴	•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26.6월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재정 누수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에 기여
- 중복·관행적 사업 차단으로 확보한 재정여력으로 필요분야 재투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 (건수)	48	56	68	80	○ 가장 높은 성과를 시현한 '25년 대비 더 도적인 목표 설정 - 전년 성과 대비 12건 상향 설정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 건수	'27년 예산안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95.4	91.9	94.7	96	○ 신규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시 준수 - 저성과낭비성 사업의 적극적 구조조정을 위해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정부안 편성시 구조조정 의견 준수 사업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사업수	'27년 예산안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Ⅱ-1-③)

□ 추진배경

- 의무지출·주요 정책과제 지출 소요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 및 정부출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금운용계획 기본방향 및 투자중점, 건전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27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통보
- 기금운영비, 수지차기관 경상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관리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7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26.3월	
2/4분기	기금관리주체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26.5월	
3/4분기	기금운영비 협의·조정 및 수지차기관 경상비 관리방안 마련	'26.6~8월	
	'27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26.9월	
4/4분기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결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기금관리주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업무연락	• 다수 기관(기금운용주체 67개, 수지차 보전기관 62개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연락포털시스템 등 활용하여 상시 소통·협의	상시
사전설명회	• 기금운영비·수지차기관 편성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26.4~5월
현장방문	• 특이소요 및 완료소요 등 관련 기관 현장방문	'26.4~5월
협의	• 특이소요 제출 중심으로 각 기관 예산안 협의	'26.6~8월

□ 기대효과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사전에 제시하여 주요 정책과제 및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 및 수지차기관의 경상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효율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재투자 여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기금 및 정부 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기금 총지출 (외평기금 자산운용 수수료 포함) 대비 기본경비 비중(%)	0.468	0.449	0.416	0.392	□ '27년 기금운영비 기본경비 비중, 수지차보전기관 경상비 비중의 '26년 대비 감소율 최근 2년 평균 수준(5.7%/3.1%) 달성 목표 * (기금운영비) 2년 평균 감소율(5.7%) 적용 → 기본경비 비중 목표치 0.392 * (수지차기관) 2년 평균 감소율(3.1%) 적용 → 경상비 비중 목표치 3.11 ○ 그간 경상비 지속 절감 노력을 감안 시, 최근 2개년 평균 수준 감소율 유지는 도전적인 목표 * 전년대비 감소율(기금운영비 기본경비 비중/수지차보전기관 경상비 비중, %) : ('24) 4.6 / 2.9 → ('25) 9.6 / 3.3	기금 총지출 (외평기금 자산운용 수수료 포함) 대비 기본경비 비중(%)	'27년 정부예산안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	3.42	3.32	3.21	3.11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비율	'27년 정부예산안

(1) 주요 내용

□ (배경) 대외 불확실성 확대, 양극화 심화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투자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간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일자리 격차 지속, 소득·자산 양극화**('K자형 성장') 심화

* 시간당 임금(24.6월 대기업정규직=100) : (대정규)100 (대비정규)62.3 (중소정규)57.7 (중소비정규)41.5

** 소득 지니계수(23) : (韓)0.323 vs. (OECD)0.307 / '25.3월 기준 순자산지니계수 통계작성 이후 최고

- 학령인구 급감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대학 위기가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 고착화
-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저변확대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안전망 확충 등 고용상황 대응,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탄소중립 저변 확대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역할 증대

□ (주요내용) ①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일터 조성, ②고등교육 혁신,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③탄소중립 저변확대 및 콘텐츠 수출·문화격차 해소

①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노동안전 투자 강화

- 경제활동인구 감소, 은퇴계층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AI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위험요인 선제 대응 산재예방 투자 확대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체계 내실화

- 지역 전략산업 연계 거점국립대 육성, RISE 체계 고도화와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인재의 단계별 성장경로 내실화
- 영유아 특별회계 기반 무상보육 확대, AID 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전환 및 해외 한국어 수요에 대응한 보급 확대

-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이행, K-콘텐츠 수출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통한 글로벌 문화강국 뒷받침
- 산업계의 적극적인 감축촉진 지원, 국민들의 녹색생활 유도 등 탄소중립 저변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추진
 -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콘텐츠 펀드 등 적극 지원하고,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교육·문화·환경분야 투자규모(조원)
관리과제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고용취약계층 지원 규모(억원)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 ·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 대학 육성 재정투자규모(억원) · 첨단분야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규모(명) · 영유아보육료 단가(0세반 기준)(만원)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	· 재생에너지 투자규모(조원) ·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사업 개수 · 문화재정 총지출 대비 K-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및 문화향유 격차해소 예산 비중(%)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고용·교육·문화·환경 분야 투자규모(조원)	81.2	83.3	89.5	90.4	과거 3년치 연평균 증가율, 전년도 증가율 등 종합 고려 1% 증가율 설정	■ '27년 예산안 편성	■ '27년 예산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고용·교육·문화 등 부문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강하고, 지원 대상·범위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부처별 예산 협의회(부처),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민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노력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Ⅱ-2-①)

□ 추진배경

-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주요업종(건설·제조업 등) 중심 고용시장 위축 우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지역간 격차 확대에 의한 일자리 격차 지속, 소득·자산 양극화**('K자형 성장') 심화 등

* 시간당 임금('24.6월 대기업정규직=100) : (大정규)100 (大비정규)62.3 (中企정규)57.7 (中企비정규)41.5

** 소득 지니계수('23) : (韓)0.323 vs. (OECD)0.307 / '25.3월 기준 순자산지니계수 통계작성 이후 최고

-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30년까지 사망사고 비율 1만 명당 0.29(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달성을 위한 산재예방 집중 투자 필요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고용안전망 확충

- ① (청년·중장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한 일경험·직업훈련, 중장년 경력설계·전환지원 등 노동시장 진입·복귀촉진 방안 마련
- ② (고용안전망) 취약계층의 안정적 구직·재취업을 위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저소득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속 지원
- ③ (일가정 양립)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야간·교대제 노동자 등의 건강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
- ④ (노동약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임금체불·장애인·외국인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대지급금 등 생계 지원 강화

◇ 산재 위험요인 선제대응을 위한 예방투자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 ⑤ (산재 예방투자 확대) 위험 격차 없는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예방 투자 확대 및 다양한 위험요인 대응 강화
- ⑥ (지원·감독 연계)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 감독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안전 인식 확산 기여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점검	1월	
	○ '27년 예산안 아젠다 관련 부처 회의	2월	
	○ '27년 예산편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3월	
2/4분기	○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4~5월	
	○ 산재예방·보험 사업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4~5월	
	○ 취약근로자 사업 관련 현장방문 및 개선사항 발굴	4~5월	
3/4분기	○ 기금 건전성 개선, 의무지출 등 지출혁신 추진	7~9월	
	○ 고용관련 재정사업 '27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제출	7~9월	
4/4분기	○ 고용관련 재정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10~12월	
	○ '27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예산 국회 확정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문가, 구직자·재직자, 사업주 등 적극적 정책현장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27년 예산안 편성 방향 관련 간담회	'26.2월
	○ '27년 예산안 편성 Kick-off 회의	'26.4~5월
현장방문	○ 장애인표준사업장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26.1월
	○ 청년도전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26.4~5월
	○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 사업장 등 방문	'26.下
회의	○ 관계부처·기관 회의	수시

□ 기대효과

- 노동약자 보호,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권익 보장
- 청년, 중장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재취업 촉진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재예방 시설·장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산재발생,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전한 일터 조성(Ⅱ-3-①)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300)	일반회계	8,457	10,128
②	중장년경력지원제(305)	일반회계	36	84
③	중장년층취업지원(300)	일반회계	184	248
④	대지급금 지급(300)	임채기금	5,264	7,461
⑤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300)	일반회계	92	119
⑥	청년일자리창출지원(301)	일반회계	7,772	9,080
⑦	모성보호육아지원(358)	고보기금	40,225	40,728
⑧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300)	일반회계	8,851	9,443
⑨	구직급여(350)	고보기금	109,171	115,376
⑩	장애인고용장려금(303)	장고기금	3,774	4,032
⑪	장애인고용관리지원(306)	장고기금	2,521	2,753
⑫	클린사업장 조성지원(350)	산재기금	4,818	5,371
⑬	업종별재해예방(350)	산재기금	1,632	2,361
⑭	산재예방시설용자(351)	산재기금	4,588	5,3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고용취약계층 지원 규모(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 (단위: 억원)	291,914 ('24 예산)	304,089 ('25 예산)	323,016 ('26년 예산)	329,476	■ 재정지원 일자리 투자 예산 '26년 대비 2%이상 증가 *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 0.7% 수준	■ '27년 예산안 편성	■ '27년 예산안 (재정지원 일자리)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0.393	0.386	0.383	0.377	■ '26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1.5% 이상 감소 * '24년 전년대비 감소율 1.8%, '25년 전년대비 감소율 0.8% → 2년 평균 증가율 1.3% 이상 설정	■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 근로자 수 x 10,000	■ 산안공단조사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Ⅱ-2-②)

□ 추진배경

- 학령인구 급감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대학 위기가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 고착화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거점국립대 및 지방대를 지역 혁신 생태계 허브로 재구조화할 필요성 증대
-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과 산업 수요 간 불일치 해소 및 이공계 우수 인재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시급
-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 확대 및 취약계층·글로벌 한국어 수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고등교육) 지역 전략산업 연계 대학 혁신 및 특성화 투자 강화

-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 단과대·연구원을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 허브화로 거점국립대 육성
- RISE*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지방 사립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및 구조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 지속 제공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인력양성 및 지역현안 해결 과제를 자율 추진토록 지원하는 재정 지원 체계

② (인재양성) 첨단분야 교육혁신 및 이공계 전주기 성장 지원

-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AI 거점대학 신설 및 대학-기업 협업형 산업 수요 중심 교육과정 지속 확대
- 학부에서 박사 후까지 이어지는 이공계 인재 장학 지원 및 AI 학업장려대출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③ (보육·평생) 국가 책임 보육 강화 및 교육 저변 글로벌 확장

- 영유아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확대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전문대 AID 전환 및 직업계고-전문대 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문해 교육 지원 확대
- 해외 현지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및 교원 파견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지속 확산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① 차년도 예산편성 및 중점투자 과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1~3월	
2/4분기	① AI 거점대학 및 첨단분야 특성화 관련 현장 점검	4~6월	
	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3/4분기	① 국가장학금 2유형 전면 개편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추진	7~9월	
	② '27년 예산안 편성		
4/4분기	① 거점국립대 육성, 영유아 등 교육 분야 재정사업 현황 모니터링	10~12월	
	② '27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국회 확정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27년 교육 분야 예산 편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	'26.3~4월
	RISE 성과 중심 재구조화 및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관련 간담회	'26.5~7월
현장방문	대학 재정지원 관련 현장방문	'26.4월
	첨단분야 대학 교육혁신 관련 전문기관, 대학관계자 등 현장방문	'26.5월
회의	RISE 성과 중심 재구조화 및 지방사립대 구조개선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26.4~8월
	지출효율화 과제 관련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회의	'26.4~8월
	'27년 예산편성 및 정책 협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	수시

☐ 기대효과

-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교육혁신 선순환 구조 정착
- 학부생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지속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 인력 공급망 내실화
- 유아 단계적 무상보육 확대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취약계층의 실질적 학습 기회 보장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 제고

□ 관련 재정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II-3-일반재정②)			
①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고특	1,827	2,625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고특	20,010	21,403
③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영유특	(예비비1,289)	4,703
④ 국립대학 육성사업	고특	4,234	8,736
⑤ 대학혁신 지원	고특	7,961	8,192
⑥ 4단계 두뇌한국 지원	고특	5,225	5,4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대학 육성 재정 투자규모 (억원)	58,302 (‘24년 예산)	62,764 (‘25년 예산)	67,892 (‘26년 예산)	73,323 (‘27년 예산)	고등교육 부문 중 ‘국립대학 운영지원’ 및 ‘대학자율 역량강화’ 프로그램(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24개 세부사업) ‘27년 예산을 ‘26년 대비 +8.0% * ‘24 대비 ‘25 실적 증가율 8.1% 이상 ‘23 대비 ‘24 실적 증가율 7.7% 이상 → 2년간 평균 증가율인 7.9% 이상 설정	‘27년 예산안 * 고등교육 부문 중 대학 직접지원 관련 2개프로그램 (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24개 세부사업) 예산	‘27년 예산안
첨단분야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규모 (명)	5,250	5,900	10,450	15,152	27년 예산상 첨단분야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을 통한 수혜자 수 목표 규모를 ‘26년 대비 +45%* * ‘24 대비 ‘25 실적 증가율 77.1% ‘23 대비 ‘24 실적 증가율 12.4% → 2년간 평균 증가율인 44.7% 이상 설정	대학별 최소 인재양성목표 (부트캠프별 100명, 특성화대학별 50명)	‘27년 예산안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지원 규모
영유아보육료 단가(0세반 기준) (만원)	116.9 (‘24년 예산)	122.7 (‘25년 추경예산)	127.7 (‘26년 예산)	133.6 (‘27년 예산)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0세반 대상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등으로 보육료 단가 ‘26년 대비 +4.6% 이상 확대 목표 * ‘24 대비 ‘25 실적 증가율 4.1% ‘23 대비 ‘24 실적 증가율 5% → 2년간 평균 증가율인 4.5% 이상 설정	‘27년 예산안	‘27년 예산안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Ⅱ-2-③)

□ 추진배경

○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무역 규범의 변화와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대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대전환의 지원 필요성 증대

- CBAM* 시행에 따라 수출품목의 탄소 비용 부담 급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강제 등 RE100** 요구 가속화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중립 국경조정제도로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그 차이만큼 비용을 매기는 제도

** (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개념으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협력사(공급망)에도 Re100 요구

- 2035 NDC는 2030 NDC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등 기존보다 강도 높은 탄소중립 이행 필요

* (2030 NDC) '18년 대비 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21.4월)
(2035 NDC) '18년 대비 '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3~61% 감축('25.11월)

○ (콘텐츠 수출 및 문화격차 해소) 문화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콘텐츠 산업 매출·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장을 둔화

* '24년 매출(158조원)·수출(18조원) 모두 ▲전년보다 늘었으나(매출 +2.2%, 수출 +1.7%) 성장세 둔화, ▲전세계 매출 3.9% 완만한 성장세 예상 대비 저조한 수준

- 최근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소득·지역에 따른 문화 생산·향유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경향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2) 58.1, ('23) 58.6, ('24) 63.0

** 시도별 관람률('24년)(%): (대도시) 67.6, (중소도시) 63.4, (읍면지역) 52.1

소득별 관람률('24년)(%): (100만원 미만) 24.0, (300~400만원) 55.4, (600만원 이상) 78.7

⇒ 콘텐츠산업 지속성장 및 문화활동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탈탄소 성장 지향형으로 탈바꿈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철강, 발전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와 글로벌 탄소 무역규제 대응에 대한 지원
- 무공해차 이용 등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저변 확대
-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저리융자 및 자가용 태양광 보조 확대
- RE100 산단 적기 조성을 위해 경제적·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강화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ESS 지속 지원

② (콘텐츠 수출 및 문화격차 해소) 콘텐츠 수출 확대 및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지속 확대

-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5개 주요장르 중점투자 체계 구축, AI 활용 콘텐츠, 대작 IP 확보 등 다각적 지원 강화
- 극장 매출, 관객 수, 수출 규모 감소 추세 등 고려, 중예산영화 및 국제공동제작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뮤지컬 지역순회·지역극단 지원·지정형 국립극장 지원 확대 및 통합문화이용권 등을 통한 소득·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문학·시각·공연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연속성 보장 및 지역 우수 기초예술사업 생존력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탄소중립 대전환 중점 투자방향 및 Agenda 설정	1~3월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 추진		
	○ 문화분야 중장기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과제 구체화		
2/4분기	○ 예산편성지침 등에 환경·에너지 및 문화분야 관련 내용 반영	4~6월	
	○ 환경·에너지 및 문화분야 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 탄소중립 대전환 중점 투자방향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		
	○ 문화분야 중점 투자방향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3/4분기	○ '27년도 환경·에너지 및 문화분야 사업 검토 및 예산편성	6~8월	
	○ '27년 예산안 국회 제출	9월	
4/4분기	○ '27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의결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방문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용자·보조사업 등 관련 지원 사업의 전문가 간담회 실시
- 문화분야 중장기 재정 투자방향 설정 및 '27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분야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콘텐츠 펀드 출자, 영화 창제작·문화예술 향유·창작 시설 등 '27년 문화예술 분야 중점 투자현장 점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현장방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위한 현장방문	'26.3~6월
	간담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6.6~10월
투자 확대·격차 해소	간담회	문화·예술·체육 분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6.3~5월
	현장방문	문화예술·체육 분야 투자현장 점검	'26년 중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
- K-콘텐츠 수출확대 및 문화향유 기회 격차해소 지원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탄소중립 가속화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Ⅱ-3-일반재정③)				
① 대기오염발생원 관리(1633)	에특회계			
■ 무공해차 보급사업(312)			22,631	22,845
② 재생에너지지원(5202)	에특회계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304)			3,263	6,480
③ 산업저탄소화(6131)	기후기금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601)			2,132	2,099
④ 친환경산업 육성·지원(1531)	환특회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307)			878	853
⑤ 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	일반회계		2,950	4,300
⑥ 영화 창제작 지원(1261-300)	영발기금		217	409
⑦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일반회계		245	391
⑧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문예기금		2,806	3,276
⑨ 예술창작지원(1761-300)	문예기금		647	6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 재생에너지투자규모 (억원)	8,946 (24년 예산)	9,771 (25년 예산)	12,640 (26년 예산)	17,000 (27년 예산)	■ 최근 3년 예산 추이 고려시, 가장 증가율이 컸던 '25→ '26년 증가율(29.4%)을 상회 하는 30% 이상 증가 목표 설정	■ '27년 예산안	'27년 예산안
▶ 온실가스감축인자 대상사업개수	294 (24년 예산)	311 (25년 예산)	347 (26년 예산)	366 (27년 예산)	■ 최근 3년 대상사업 증가량 평균 19개((347-288)/3) 고려 하여 '26년 대상사업 개수 347개보다 19개 증가한 366개로 목표치 설정	■ '27년 예산안	'27년 예산안
▶ 문화재정 총지출 대비 K-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및 문화향유 격차해소 예산비중(%)	8.08	7.81	9.40	11.0	■ 과거 추세와 '25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6%p 상승한 11.0%를 목표로 설정	■ (K-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 예산) / (문화재정 총지출)	본예산(정부안)

(1) 주요 내용

- 대내외 불확실성 下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투자방안 마련
 - (첨단산업·통상지원) 국내 첨단·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적기 대응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지원 강화 및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
 - (중소·벤처 점프업) AI·딥테크 등 첨단분야 스타트업 육성 강화, 소상공인 재기·성장지원 등 中企·소상공인 점프업 지원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핵심 전략기술 개발, 소산업 AI 전환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AI경쟁력 강화) 전국민 AI 일상화, AIDC 생태계 조성, 피지컬 AI 육성, 국내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 등 AI 산업 적극 육성
 - (R&D) 전략적 R&D 투자와 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SOC) SOC 효율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미래 교통수단 도입,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 등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농어업) 농어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규모화·스마트화 등으로 농어업의 전략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산업, SOC, 농림,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조원)
관리과제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경제안보 구축,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지출 증가율 - 석유비축계획 달성률(%) - 창업·벤처 예산 총지출 기여도(%p)
	②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미래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활성화 투자규모(억원) - 중장기 교통망(철도, 도로, 항공, 광역교통) 계획 수립 - 농수산임업직불금 및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규모(조원)
		농림분야 예산 대비 농어업 K-푸드 산업 육성과 미래기반조성 위한 투자 비중(%)
		- AI 관련 재정 투자규모(조원) - 신규 AI 시스템 투자(억원) - NEXT 전략기술 투자규모(조원)
	③ AI 3강 공고화 및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실현	투자형 R&D 신설 및 투자규모(억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년 예산)	'24 (25년 예산)	'25 (26년 예산)	'26 (27년 예산)			
산업, SOC, 농림,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조원)	87.9 조원	90.6 조원	100.5 조원	107 조원	4개분야 과거 3년('24~'26년) 예산 정부안 증가율(6.9%) 적용	'26년 예산 4대분야 정부안에 3년 평균 증가율 6.9% 적용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 ☐ (목표치) 복지 예산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경제예산 투자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美 신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되며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위협 중
- ☐ (갈등요인) 경제활력 제고 투자 강화 위한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심사지연 우려
- ☐ (갈등관리계획) 경제활력 제고 위한 투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정당성 적극 설명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경제안보 구축,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Ⅱ-3-①)

□ 추진배경

- (산업·통상 경쟁심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 (미국) 반도체과학법('22.8월)을 통해 390억불(약 11조원) 보조금, 25% 세액공제
(일본) TSMC 투자유치 위해 역사상 최대규모 보조금(12조원) 지급
(독일) 인텔 투자유치(42조원) 위해 14조원 보조금 지급

- (민간중심 경제 위축) 소비둔화·물가상승에 따라 中企·벤처 여건 악화 → 창업 위축 및 폐업 증가 등 창업 생태계 부실화

* 폐업 기업체 수(만개): ('20) 91.1 → ('21) 87.6 → ('22) 83.8 → ('23) 96.8 → ('24) 100.8

⇒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모두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계획 수립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❶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초격차 선점 및 피지컬 AI, AIDC 국가전략 산업화 추진

- (반도체) 생산거점 전국 확대, 원천기술 R&D, 설계·실증·인재양성 전주기 총력 지원 및 ^{신설}반도체특별회계 등 안정적 투자기반 구축
- (피지컬AI) 차세대 피지컬 AI 선점을 위해 국내 생산기반, 제조 역량을 활용한 AI 로봇 육성,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지원

- (AIDC) 주요장비·기술 국산화 R&D 지원 및 국산 장비 성능 실증기반 구축 등 AIDC 국가전략 산업화 추진
- (인프라)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인프라 구축 전폭 지원

②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리스크 대응력 강화

- (에너지) 원유 비축시설 확충,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민간 설비 고도화 및 석유최고가격제 등 지원
- (공급망) 핵심광물 비축, 재자원화 원료확충·설비투자 지원과 함께 공급망 현지 기업 지분확보 등 해외 공급망 투자 강화
- (통상·수출) 대미 통상현안 및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형 조선사 RG 특례보증 등 전략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③ (창업·소상공인) 국가창업시대 뒷받침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모두의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지역거점 창업 도시 조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등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 (성장·도약) 모태펀드 출자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도약 프로그램 확충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 완비
- (소상공인 경쟁력) 로컬 창업가 양성부터 AI 활용 교육, AI·디지털 전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
- (경영여건 개선) 상권·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및 채무 등 경영부담 완화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통상정책 대응방향 간담회	2월
	○ '26년 추경예산 부처 협의 및 편성	2~3월
	○ '27년 예산편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3월
2/4분기	○ '26년 추경예산 국회심의 대응	4월
	○ 유망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4~5월
	○ '27년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및 재정사업 이관·발굴	4~5월
3/4분기	○ '27년도 예산안 편성·제출	7~9월
4/4분기	○ '27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첨단산업 지원, 경제안보 구축 및 창업·벤처 생태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등 정책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회 등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산업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26.2월
	○ 반도체 경쟁력 강화 관련 간담회	'26.4월
	○ 유망 스타트업·로컬창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 간담회	'26.5월
현장방문	○ 스타트업파크 현장방문	'26.3월
	○ 공급망 비축기업 현장방문	'26.4~10월
	○ 주요 반도체 기업 현장방문	'26.4~10월
	○ 모두의 창업 경진대회 현장방문	'26.4~10월
회의	○ 관계부처·기관 회의	수시

□ 기대효과

- 첨단산업 적극적 재정투자 뒷받침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간의 비수도권 투자유인 및 공급망·통상 리스크 대응력 제고
- 벤처·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창업시대 개막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년 본예산	'26년 본예산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지출 증가율	-	-	-
※ '27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사업 분류 예정	다회계·기금	-	-
② 석유비축계획 달성률	-	799	553
○ (산업부) 석유비축사업출자	예특회계	799	553
③ 창업·벤처예산 총지출 기여도	-	39,383	42,431
○ (중기부) 창업 및 벤처 부문 재정사업	일반·중진	39,383	42,4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지출 증가율	-	-	-	총지출 증가율 2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원년 재정투자 우선순위 감안, '27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대비 2배로 설정	'27년 예산안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재정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석유비축계획 달성률	99.2	99.7	100.2	99.0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의 비축시설 및 비축유 연차별 확보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	(비축시설목표 달성률*0.5) + (비축유목표달성률*0.5)	산업통상부/한국석유공사 내부자료
창업·벤처 예산 총지출 기여도(%p)	△3.83	△1.53	△0.36	0.81	최근 3년간 증가추세 감안, '24~'25년 상승분(+1.17%p) 이상 * 목표치 0.81 = △0.36 + 1.17	총지출 대비 창업 및 벤처 부문 지출 증가율 차이 * 부문 증가율 - 총지출 증가율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 '24~'26년 총지출 증가율(%) : ('24) 2.8 → ('25) 2.5 → ('26) 8.1

②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Ⅱ-3-②)

□ 추진배경

- ① (SOC) 효율적 재정 운용과 국민 체감형 미래 모빌리티 구현 필요
 - 인구구조 및 도로 간선 기능 변화에 따라 SOC 투자 우선순위 조정, 도로 설계 기준 변경 등을 통한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철도, 도로, 공항 등)
 - 미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수요자 중심의 국민 체감형 교통 환경 및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모빌리티 환경 조성
- ② (농어업) 농어촌 소멸위기, 동력 약화 극복을 위한 농어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증대
 - 농어촌 고령화, 영세한 농정 구조 등으로 인해 농어업 소득이 정체되고 보조금 등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 증가
 - *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 ('15) 38.4 → ('24) 55.8%
 - * 농가 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중: ('15) 21.2 → ('25) 36.4%
 -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해 농수산물 유통비용이 과다
 - *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24): (농산물) 49.2% (수산물) 63.5%
 - AI 등 기술 발전을 농어업의 생산성·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SOC) SOC 효율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미래 교통수단 도입,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 등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 (교통편의) 모두의카드 등 전국민 교통부담 경감 지원, 출퇴근 시간 절약을 위한 광역버스 인프라 확대 및 광역철도 건설 등

- (미래 교통수단)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UAM 등 미래 교통수단 관련 실증 사업,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
- (교통망 계획 수립) 철도, 공항, 도로, 광역교통 등 중장기 건설 계획 수립
 - 도로 설계기준을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과잉 투자를 차단, 엄격한 투자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
- ② (농어업) 소득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신기술·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AX 확산과 유통구조 혁신 및 농어업의 전략산업화 도모
 - (소득 안전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 (AX) 농어업 생산·유통·소비 전주기에 걸친 AX 확산을 지원하고 피지컬 AI 등 첨단 R&D를 확대하여 AI 생태계 기반 확충
 - * 만관 합작 AI 기반 첨단 스마트팜(생산), AI 기반 정보시스템 확산(유통), 알뜰소비 지원(소비)
 - (K-푸드) 김·참외 등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 및 한식 세계화
 - (유통구조) 전용 바우처, 거래·정산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유통경로 단축 및 거래 투명화 촉진
 - *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 통합 물류기지 시범사업 등
 - (경쟁력) 공동영농 등 농업의 규모화, 청년 유입 촉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농림SOC 분야 투자방향 아젠다 간담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26.3월	
	·농어업 전략산업화 및 SOC 역점사업 발굴 및 중기사업계획 반영		
2/4분기	·SOC 재정지원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26.4~6월	
	·농어업 전략산업화를 위한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3/4분기	·미래교통수단, 대중교통지원 확대 등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	'26.6~9월	
	·중장기 교통망 계획(도로,철도,공항,광역교통) 수립 및 고시		
	·도로구조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농어업 전략산업화를 위한 예산안 편성		
4/4분기	·도로구조규칙 가이드 배포, 개정(시행령) 추진	'26.12월	
	·'27년 예산안 국회 의결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주요 SOC·농어촌 현장방문 등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K푸드 수출유통 관련 전문가 간담회	'26.1~2월
	○ 교통연·KDI 등 SOC 전문가 간담회	'26.2~5월
	○ SOC 투자방향 관련 국토부·새만금청·행복청 간담회	'26.3~5월
	○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K푸드 수출유통 관련 전문가 간담회	'26.6~7월
현장방문	○ 도로 사고 빈발구간,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등 주요 사업현장 방문	'26.9~10월
	○ 산업 동향 확인 및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스마트 어업 현장 방문	'26.3~6월
	○ APC, 비축창고, 수출전문단지, 식품제조기업 등 K푸드 현장 방문	'26.8~10월
회의	○ 재정정책자문회의, 기초실장 간담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수시

□ 기대효과

- 노후 시설 개량, 접근성 제고, 미래 교통수단 투자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교통시설 안전성, 편의성 개선
- 청년 농업인 육성, 미래전략 산업화, 농어민 소득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및 식량 안보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미래교통수단 및 대중교통활성화		26,157	30,928
① 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	교특회계	11,343	10,853
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교특회계	10,214	11,893
③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지원	교특회계	1,638	1,971
④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교특회계	2,375	5,274
⑤ 도심항공교통활성화 지원	교특회계	-	618
⑥ 교통취약지역 시간대 무인 DRT 지원	일반회계	-	-
농수산임업직불금 및 농어촌 기본소득		31,267	33,713
① 공익기능증진직불	농특회계	29,536	29,703
② 수산 공익직불제	농특회계	1,199	1,053
③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농특회계	532	616
④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특회계	-	2,341

농·어업 K-푸드 산업 육성과 미래기반 조성			14,899	23,725
①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특회계	927	1,158
②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농특회계	513	636
③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안기금	149	304
④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용자)	농안기금	600	1,000
⑤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농안기금	15	15
⑥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농안기금	554	460
⑦	농산물안전생산공급지원	농안기금	-	377
⑧	맞춤형농지지원(용자)	농안기금	11,134	18,077
⑨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농특회계	42	80
⑩	노지 스마트농업 ICT융복합 확산	농특회계	-	103
⑪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농특회계	31	48
⑫	축사시설현대화	축발기금	376	359
⑬	농업AX기반조성	농특회계	-	73
⑭	수산물 물류 효율화지원	농특회계	12	9
⑮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농특회계	546	791
⑯	국가어업AX플랫폼	농특회계	-	102
⑰	스마트수산업육성	농특회계	-	1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년 예산)	'24 (25년 예산)	'25 (26년 예산)	'26 (27년 예산)				
미래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활성화 투자규모(억원)	2,364 억원	4,371 억원	8,043 억원	16,086 억원		미래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투자규모 전년대비 100% 이상 확대 * 예산 총액으로 보면 과거 증가 추세 정도 적용이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증액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27년 본예산 규모(정부안)	'27년 정부 예산안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	-	-	-	계획 고시		국토 균형 개발(5급3특),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 변화하는 교통 수요 및 혼잡해소 등 교통 편의성 제공을 위한 노선들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정성적 평가	대한민국 전자관보
농수산업임직불금 및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규모(조원)	3.0 조원	3.1 조원	3.3 조원	3.4 조원		농수산업임직불금 및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전년 대비 4.4% 이상 증가 * 최근 3년 평균 증가율(4.4%)	'27년 본예산규모 (정부안 기준)	'27년 정부 예산안
농림분야 예산 대비 농어업 K-푸드 산업 육성과 미래기반조성 위한 투자 비중(%)	1%	1.1%	1.5%	2%		농림분야 예산 대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예산 비중 30% 이상 증가 *최근 3년 고려시 도전적 목표 설정	'27년 본예산규모 (정부안 기준)	'27년 정부 예산안

③ AI 3강 공고화 및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실현(Ⅱ-3-③)

□ 추진배경

- ① (AI경쟁력 강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및 고급 인재 확보에 투자 확대되었으나, AI의 일상화 달성에는 한계
→ 전국민이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 및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② (전략적 R&D) 생성형 AI의 산업 전반 확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속적 R&D 투자 요구
→ 글로벌 기술 패권 주도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AI) 국산 AI·AIDC 생태계 조성 및 민·관 협력 피지컬 AI 육성
 - (모두의 AI) 국산 AI 모델 기반 서비스 제공 통한 보편적 AI 접근권 제공
 - (AIDC 생태계 조성) AIDC 전후방 산업 국산화를 위한 실증환경 조성
 - (피지컬 AI) 국내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피지컬AI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분야별(환경·돌봄 등) 대규모 과제 발굴 및 집중지원
 - (공공 AX) 시스템 다이어트*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공공 AX 재투자

* 전부처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 낮은 메뉴 정비 및 불필요한 시스템 폐지

- ② (전략적 R&D)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및 혁신성장·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투자
 - (투자강화) R&D 지속 투자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및 투자형 R&D 신설 등 성과 중심의 투자 활성화
 - (전략기술) 글로벌 기술패권 주도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기술 및 난이도가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도전적 R&D 확대
 - (연구생태계) 인재 양성 지원, 지역 R&D 역량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방향 발굴 관계기관 간담회	'26.1~3월	
	• AI/정보화 분야 중점투자방향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6.1~3월	
2/4분기	• ISP제도 설명회 개최	'26.4월	
	• AI정보화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26.4~5월	
	•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6.4~5월	
	• ISP 수립 공통가이드 개정·배포	'26.6월	
3/4분기	• 국가 전략기술 관련 R&D 예산 확대 편성	'26.6~8월	
	• AI/정보화 분야 예산안 편성	'26.7~8월	
4/4분기	• 국가 전략기술 관련 R&D 예산 국회 확정	'26.12월	
	• 예산안 국회 의결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AI 전문가 양성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주요 연구단지 등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 추진

* R&D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련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 주요 국책연구단지 및 대학, AI 교육장 등 현장 방문	'26.3월
간담회	○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26.4월
회의	○ 재정정책자문회의, 기초실장 간담회, R&D 예산 협의회 등	'26(연중)

☐ 기대효과

- (전략적 R&D) NEXT 10대 전략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 성장 주도
- (AI경쟁력 강화) 초산업 AI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따른 AI 강대국 입지 공고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사업군		회계구분	'25	'26
첨단산업 분야 전략기술 R&D 및 AI 3강 공고화 위한 투자 강화				
①	NEXT 10대 전략기술 사업군(단위: 조원)	-	신규	11.0
②	투자형 R&D 사업군(단위: 억원)	-	신규	신규
③	全산업 AI 기반 구축을 통한 AI 3강 공고화 위한 ①정보통신(ICT) 및 ②정보화 예산(단위: 억원)	-	①15,664 ②37,817	①41,788 ②39,9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년 예산)	'24 (25년 예산)	'25 (26년 예산)	'26 (27년 예산)			
AI 관련 재정 투자규모(조원)	신규	1.8조	9.9조	10.0조	· 총지출증가율 이상 전년 대비 예산 편성(총지출 증가율 미정) * GPU 구매(2.1조), AX스프린트(0.5조) 등 일시 소요 제외한 '26년 AI 예산 규모(7.3조원) 고려할 때 전년 수준 이상의 목표치 산출은 도전적 목표 설정	'27년 본예산 규모 (정부안 기준)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신규 AI 시스템 투자 (억원)	신규	신규	신규	2,400억	· 전년 대비 3배 이상 * '26년 신규 AI시스템 투자: 800억	'27년 본예산 (정부안 기준)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NEXT 전략기술 투자규모(조원)	신규	신규	11.0	12.1	· 전년대비 NEXT 전략기술 예산 증액편성(R&D 분야 예산 증가율(현재미정) 이상) * NEXT에 포함되지 않는 중점투자필요 (지역국방 R&D 등) 소요 고려 시, R&D 분야 예산 증가율 이상의 목표치 산출은 도전적 목표 설정	'27년 본예산 (정부안 기준)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투자형 R&D 신설 및 투자규모(억원)	신규	신규	신규	신설 (정부투자 규모 900)	· 기존 출연 중심 R&D를 보완 하고 기술사업화 촉진 및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투자형 R&D 신설을 목표로 설정 · 투자형 R&D 도입 초기단계 에서는 정부 투자재원을 마 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정부 투자규모를 목표치*로 함께 제시 * 투자형 R&D 기획 시 참고한 기존유사모델의 연평균 투자 지원 금액은 약 220억원 → 투자형 R&D 사업 4개 추진 목표에 따라 900억 이상의 목표치 설정	'27년 본예산 (정부안 기준)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1) 주요 내용

- (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안전 분야 재정투자 소요 지속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저출생 및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 합계출산율(명): ('21)0.81 ('23)0.72 ('25)0.8 / 고령인구비중(%): ('21)16.6 ('23)18.3 ('25)20.3 ('26)21.6
 -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 재난 반복으로 국민안전 위협 증대

- (주요내용) ①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②지역필수의료 확충, ③재난 대비 인프라·현장 대응 강화

- ① 양극화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 구축,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
 -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고 노인 빈곤 문제 대응 강화
- ②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연금개혁 후속조치 지속 추진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투자 확대,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체질개선에 중점 투자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첫 보험료 지원, 크레딧 등 연금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 자살 시도 초기부터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는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
-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 고도화 및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극한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
 -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마련, 무인소방로봇, 해양 감시드론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현장인력 위험노출 최소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전년대비, %)
관리과제	층층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② 저출생 조세지출·현금 급여 통합·확대 규모(조원) ③ 소득기준 하후상박 구조 기초연금 개혁(%)
	지역필수의료 확충, 연금제도 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① 지역필수의료 관련 투자규모(조원) ②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크레딧 지원대상(명) ③ 자살예방대응 예산투입규모(억원)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① 재난예방 강화(%) ② 공장화재 안전강화(여부, 개소) ③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예산)	'24 ('25 예산)	'25 ('26 예산)	'26 ('27 예산)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7.5	4.7	8.2	5.5 이상	전년대비 5.5% 이상 증가 * 최근 4년 평균 증가율(5.45%) 감안 도전적 목표 설정	'27년 예산안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27년 정부 편성 예산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복지·의료·안전 등 부문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강하고, 지원 대상·범위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부처별 예산 협의회(부처), 지방재정협의회(지방),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민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노력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Ⅱ-4-①)

□ 추진배경

- (현황)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원 필요
- (사회안전매트) 생계·의료급여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및 사각지대 존재
- (저출생·고령화)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고 초고령화 사회('24년 진입)에 적극 대응 필요*

* 합계출산율(명): ('21)0.81 ('23)0.72 ('25)0.8 / 고령인구 비중(%): ('24)19.2 ('25)20.3 ('26)21.6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안전매트)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
- (저출생) 저출생 대응 관련 조세지출과 현금성 급여를 통합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출산, 양육기간에 더욱 두텁게 지원
- * 청년의 혼인 → 출산 → 양육 전 생애주기에 대한 패키지 지원 방안 마련
- (기초연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혁을 통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노인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취약계층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원 중기 소요 검토	'26.3월	
	○ 저출생·고령화 대응 관련 정책방향 협의·검토	'26.3월	
2/4분기	○ 취약계층 지원 관련 간담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6.4~5월	
	○ 저출생·고령화 관련 간담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6.4~5월	
3/4분기	○ '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중앙생활보장위원회)	'26.7월	
	○ '27년 예산안에 사회안전매트 구축사업, 저출산 대응사업 및 기초연금 개편안 반영 → 국회 제출	'26.9월	
4/4분기	○ '27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예산 국회 확정	'26.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의견수렴 및 간담회	'26.1~5월
현장방문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고령화 등 관련 현장방문	'26.1~5월
회의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조세지출·현금 급여 사업 통합, 기초연금 개혁 관련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상시

□ 기대효과

- (사회안전매트)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 계층 대상 촘촘하고 두터운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 (저출생·고령화) 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핵심분야 적극 투자와 노인 빈곤 완화 기반 마련을 통해 초 생애주기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Ⅱ-4-①)				
	■ 생계급여	일반회계	84,900	91,727
	■ 아동수당	일반회계	19,588	24,822
	■ 기초연금	일반회계	217,912	231,141
	■ 첫만남 이용권	일반회계	3,593	4,111
	■ 부모급여	일반회계	21,353	23,726
	■ 아이돌봄지원	일반회계	4,750	5,9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예산)	'24 ('25 예산)	'25 ('26 예산)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36.2	36.9	37.0	37.0	■ 최근 3년 평균(36.7) 및 전년 실적 감안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한 '25년 실적치 이상으로 설정	■ '27년 예산안 편성	■ '27년 예산안
저출생 조세지출·현금 급여 통합·확대 규모(조원)	-	-	-	0.5 이상	■ '26년 대비 저출생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 규모 10% 이상 확대	■ 저출생 조세지출 및 현금 급여 통합 여부 ■ '27년 예산안 편성	■ '27년 예산안
소득기준 하후상박 구조 기초연금 개혁(%)	-	-	-	20	■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대상자 비중 20% 이상 확대	■ '27년 예산안 편성	■ '27년 예산안

② 지역필수의료 확충, 연금제도 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Ⅱ-4-②)

□ 추진배경

- (지역필수의료) 인구감소, 교통 발달 등에 따른 수도권 의료쏠림이 지역 내 의료 공급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발생

*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24) : (수도권) 1.86명 vs (비수도권) 0.46명

- (연금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25.3*)은 완료되었으나 청년층 등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 필요**

* 보험료율: (기존) 9.0→ (개선) 13%, 소득대체율: (기존) 41.5→ (개선) 43%

**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율('25.대국민 인식조사, 경총) : (전체) 55.7 (20대) 69.2 (30대) 74.7 ... (60세↑) 37.1%

- (자살예방) 자살사망자 수는 '25.10월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나, 자살 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초기 개입 부재로 재시도 위험 상존

* 자살사망자(전년동월대비): ('26.1월) △8.1%, (2월) △16.2%, (3월) △11.2%, (4월) △15.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체계 개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양성, 거점병원-의료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중점 투자

* (4대 개선과제) ①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②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③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④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 새로 도입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27~)를 내실있게 준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취약지 기반 확충 등 뒷받침

- (연금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도입, 크레딧 제도개선 등 추진

* 만18세 청년 대상 보험료 1개월분 국고 지원, 군 복무기간 12개월→ 전체기간으로 확대

- (자살예방 대응) '위기포착 → 초동대응 → 치료 → 퇴원 후 관리 → 일상회복' 쉼 과정의 긴급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국회·유관기관 논의	'26.1~3월	
	○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국립대병원 현장간담회	'26.2월	
2/4분기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단축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6.2~3월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 협의	'26.4~6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협의·발표	'26.6월	
3/4분기	○ 자살 대응체계 구축 방안 협의·발표	'26.7월	
	○ 출산·군 크레딧 등 제도개선 협의	'26.7~9월	
	○ 지역필수의료 의견수렴 지속 및 정부안 확정	'26.7~9월	
4/4분기	○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 협의	'26.9~10월	
	○ 지역필수의료 사업군 국회 예산심의 대응 및 확정	'26.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국립대병원 현장간담회	'26.2월
현장방문	지역필수의료 현장방문 추진(장소미정)	'26.5월
회의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상시
회의	지역필수의료 '27년 예산 지원 방향 관계부처 협의	상시

□ 기대효과

-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보상 강화를 통해 의료공백 위기 지역의 의료 공급여건 획기적 개선
- 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자살 위기의 전과정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살 재시도 감소 및 국민 생명 안전망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5	'26
보건의료체계 내실화 및 연금제도 개선(II-4-②)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딧	일반회계	13	18
	■ 지역필수의료 사업군	일반회계, 응급기금 등	9,534	11,46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건강증진기금	587	7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예산)	'24 (25 예산)	'25 (26 예산)	'26 (27 예산)			
지역 필수의료 관련 투자규모 (억원)	지역 필수의료 예산규모 (억원)	9,534 11,465			12,000	'27년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세입이 1.1조원인 점을 감안, 재정여건과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 설정	정부안 예산 규모	'27년 예산 편성안
	지역 필수의료 건보지원 규모(억원)				30,000	전체 건보 급여지출의 3% 이상 수준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관련 부처 발표	부처 발표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크레딧 지원대상(명)		11	13	18	200	(첫보험료) 청년층의 연금 조기가입 유도를 위해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현재 신설되지 않은 제도임을 감안, '27 신규사업 도입여부가 중요	'27년 확정예산 반영 여부	'27년 확정예산
						(크레딧) 군·출산 크레딧 등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인식제고 기대	지원대상 확대 규모(명)	
자살예방 대응예산 투입규모(억원)		513	587	736	883	2년 연속 20% 이상 확대, 적극적 증액 목표 설정	정부안 예산 규모	'27년 예산 편성안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Ⅱ-4-③)

□ 추진배경

- (재해예방) 기후위기 등에 따라 최근 대형산불, 극한호우 등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아파트 화재 등 생활안전 위험 증가
* (25.3월 산불) 역대 최대 산불 피해 (25.7월 호우) 20년 만의 최대 호우피해
- (공장화재) 대규모 공장·창고 화재가 지속됨에 따라 사후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선제적 예방·억제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V말씀: (26. 3월, 대전 화재현장) 공장 화재 같은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
- (첨단장비)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기존 대응방식의 한계와 대응인력 안전 확보를 감안, 첨단장비 기반 대응체계 강화 필요
* V말씀: (26. 12월, 업무보고 등) 고위험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안전 위해 소방로봇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해예방) 재난 예측·감시체계 고도화 및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극한·대형 재난에 대비
- (공장화재) 공장·창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발표하여 사후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대형 화재위험의 선제적 관리 강화
- (첨단장비) 무인 소방로봇, 해양 감시드론 등 첨단장비 투자를 확대하여 재난 대응력 강화 및 현장인력 위험 노출 최소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및 안전예산 중점 투자방안 마련	'26. 1~3월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 관련 관계부처 협의	'26. 1~3월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 사업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	'26. 1~3월	
	공장·창고 화재 실태분석 및 안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26. 1~3월	
2/4분기	안전예산 투자방안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26. 4~6월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위한 훈련 및 장비 예산 협의 및 검토	'26. 4~6월	
	첨단장비 관련 현장수요 및 사업별 예산소요 검토	'26. 4~6월	
	공장·창고 화재 예방·억제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과제 검토	'26. 4~6월	
3/4분기	재난 대비 및 사고 대응력 제고 위한 안전예산 편성	'26. 7~9월	
	사고현장 대응 강화 예산 정부안 편성	'26. 7~9월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 관련 '27년 예산 정부안 편성	'26. 7~9월	
	공장·창고 화재 안전강화 방안 수립·발표	'26. 7~9월	
4/4분기	관련예산 국회 제출 및 최종 의결	'26. 10~12월	
	사고현장 대응 강화 예산 관련 국회 대응 및 최종 의결	'26. 10~12월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 예산 관련 국회심의 대응 및 최종 의결	'26. 10~12월	
	공장·창고 화재 안전강화 방안 후속과제 추진상황 점검	'26.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침수·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지역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장점검 및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 수렴
- 일선 소방서, 해경서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일선 소방서·해경서와 공장·창고 현장방문을 통해 첨단장비 운용 수요와 화재 취약요인 등 현장의견 수렴

□ 기대효과

- 기존 사후복구 중심의 안전분야 투자를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에 따라 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및 재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
- 첨단장비 투자와 공장·창고 화재 예방대책으로 재난 대응역량 및 현장인력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 화재위험 선제관리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Ⅱ-4-③)				
①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행안부	지특	8,742	10,630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행안부	지특	446	400
	■ 재난안전드론 중앙상황실 연계 행안부	일반	-	34
③	■ 첨단소방장비 도입 지원 소방청	일반	-	2
	■ 연안안전관리 드론 도입 해경청	일반	-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예산)	'24 ('25 예산)	'25 ('26 예산)	'26 ('27 예산)			
1)재난예방강화(%)	신규	신규	64.8	68.0	전년도 안전예산 총액 중 예방예산 비중 대비 5% 높은 수준으로 설정	전년도 예방예산 비중 × 1.05	'27년 예산안
2)공장화재 안전강화 (여부, 개소)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마련 여부	지속되는 대규모 공장창고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 강화 방안 마련(1건) 및 대외 발표를 목표로 설정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마련발표 건수	보도자료 등
				4,000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관련 부처별 추진 사업의 수혜기업수로 설정 - 신규 지표임을 감안, 고위험 사업장수 (약 10만개) × 4% 수준인 4천개소	사업별 지원대상 기업수	'27년 예산안
3)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강화(%)	신규	신규	30.2	50.0	첨단장비 기반 패러다임 전환으로 50%로 상향 설정(전년 30% 수준)	관련 세부사업 내 첨단장비 관련 사업 예산 비중	'27년 예산안

- 1) 성과지표: ('25년) 행안부 재난본부 예산 규모 → ('26년) 재난예방강화
- 2) 성과지표: ('25년) 해양사고 예방·구조 시설·장비 → ('26년) 공장화재 안전강화
- 3) 성과지표: ('25년) 소방장비 등 투자 확대 → ('26년)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강화

(1) 주요 내용

□ 지방주도성장 지원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 지방 우대 원칙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본격 도입
-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5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지원

□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 안보 위협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방위력 강화 투자 지속 확대
 - 국방비 확대에 상응해서 사타 제도개선·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 질적 고도화로 투자 효율성 제고
-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상비병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의 복무여건 제고노력 지속 추진

□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

- AI·문화 등 강점 분야 ODA 사업을 중점 지역·국가에 집중하여, K-이니셔티브 확산 및 경제·문화 영토 확장 등 국익에 기여
- 역량 있는 시행기관의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사업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ODA 질적 내실화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공공안전·일행·외통·국방분야 총지출 증가율(%)
관리과제	① 지방주도성장 지원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개수(개)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규모(조원)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규모(조원)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한국형 3축체계 투자 확대(억원)
		병력운영 재구조화 및 장병 복무여건 제고 사업군 투자 강화(억원)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③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	무상 ODA 사업 수(개)
		ODA 예산 과목구조 전면개편
		AI·문화 ODA 예산 증가율(전년대비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예산)	'24 (25 예산)	'25 (26 예산)	'26 (27 예산)			
공공질서·안전·일행·외통·국방분야 총지출 증가율(%)	1.6	1.2	8.1	4	공공질서 및 안전·일행·외통·국방 분야 총지출 평균 증가율(최근 3년, 3.63%)보다 높은 수준인 4% 증가율 설정	'27년 확정 예산안 각 분야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	'27년도 예산 확정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저성과·부실 ODA 사업 대폭 정비 과정에서 각 부처로부터 사업 유지 또는 증액 요구 등 반발 가능성

- 제4차('26-'30)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 마련 노력

* ODA 기본계획에서도 '27년에는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방주도성장 지원(Ⅱ-5-①)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구·경제력*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활력감소 및 소멸위기 직면

* 수도권 인구 비중(%) : ('21) 50.4 → ('22) 50.5 → ('23) 50.7 → ('24) 50.9 → ('25) 51.0
수도권 GRDP 비중(%) : ('21) 52.8 → ('22) 52.8 → ('23) 52.5 → ('24^Þ) 52.8

-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89개 중 85개, 95.5%) 하며, 지역의 의료·교통 등 사회 인프라도 열악

-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생존전략*인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주도성장 지원강화 필요

* 대한민국 일극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제는 균형발전이 정부의 시혜나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V, 부산 타운홀 미팅(7.2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지방우대사업 본격 도입) '26년 7개 사업*에 대해 시범 추진 중인 지방 우대 원칙을 '27년 예산편성 과정에 본격 도입

*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부처별로 발굴·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 지원할 계획

* 서울로부터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소멸정도 등을 감안하여 마련 중(행안부)

- ② (광역행정통합 지원) 원활한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위해 최대 연간 5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지원

-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1.20일 구성) 논의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③ (지역소비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용 확대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집행 가능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제도개선 검토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7년도 중점투자 방향 마련(편성지침 수립)	'26. 1~3월	
	○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	'26. 1월	
	○ 중기사업계획 수립	'26. 2~3월	
2/4분기	○ 지방우대사업 추진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관련 관계부처 협의·검토	'26. 3~6월	
	○ 지방주도성장 관련 사업 투자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 수렴	'26. 6월	
3/4분기	○ 지방주도성장 관련 예산 정부안 편성	'26. 6~8월	
	○ 지방주도성장 관련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26. 8월	
	○ 지방주도성장 관련 예산 국회 결산 대응	'26. 8~9월	
4/4분기	○ 지방주도성장 관련 예산 국회 심사 대응 및 확정	'26. 9~12월	
	○ 당해년도 실적 점검·확인	'26. 12월 ~'27. 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지역 주민, 지역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 지역 경제력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지역내 소비진작,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 ⇒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II-5-②)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행정안전부)	지특회계	10,000	11,5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개수(개)	-	-	7	20	'26년 시범추진 중인 지방우대 사업 개수의 약 3배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예산편성 순기상 차년도 예산)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규모(조원)	-	-	7.7	10	'26년 시범추진 중인 지방우대 사업 예산 규모 약 30% 확대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예산편성 순기상 차년도 예산)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규모(조원)	-	-	-	5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국무총리 브리핑('26.1.16일)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예산편성 순기상 차년도 예산)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Ⅱ-5-②)

□ 추진배경

- ①세계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한편, ②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

* 병역자원: ('22~'36년) 23만명 → ('37년~) 18만명

- ①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다양화되고 전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드론·AI 등 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 필요
- ②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병력은 정예화하고, 유사시 전력화가 가능한 예비전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주국방 기반 강화) 안보 위협에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방위력 강화 투자
- (병력운영 재구조화) 상비병력을 전투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전투 분야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현역 중심의 병력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상비예비군 운용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장병 복지 증진) 주거·급식 등 장병 복무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복무 중 장병의 학습·성장 기회도 적극 지원하여 정예화 추진
- (효율성 제고) 국방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전 타당성 제도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 투자 내실화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7년도 국방분야 예산 중점투자 방향 마련(편성지침 수립)	'26. 1~3월	
	○ '26~'30 국방분야 예산 중기사업계획 수립	'26. 2~3월	
	○ 국방 R&D 중점 투자 방향 검토	'26. 2~3월	
2/4분기	○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편성 방향	'26. 4~6월	
	○ 전력운영 분야 연관사업 규모 관계부처 협의·검토	'26. 4~6월	
	○ 국방분야 예산 정부안 편성	'26. 6~8월	
3/4분기	○ 국방분야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26. 8월	
	○ 국방분야 예산 국회 결산 대응	'26. 8~10월	
4/4분기	○ 국방분야 예산 국회 심사 대응 및 확정	'26. 9~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등 군장병과 직접 소통 확대를 통해 군 복무여건 개선 추진
- 국방사업 관련 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육·해·공·해병), 국방연구기관 등)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방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

□ 기대효과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등을 통한 자주국방 기반 강화
-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상비병력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의 복무여건 제고노력 지속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 및 장병 인적투자 확대(Ⅱ-5-③)				
국방비			612,469	658,642
① 전력운영비(국방부)		일반회계	434,007	458,989
②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		일반회계	178,462	199,6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한국형 3축 체계 투자 확대 (억원)	58,214	60,625	88,387	99,877	'26년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증가율 (11.9%) 대비 10% 상향된 13%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차년도 정부안 예산 편성 규모	27년 정부 예산안 (예산편성 순기상 차년도 예산)
병력운영 재구조화 및 장병 복무여건 제고 사업군 투자 강화 (억원)	38,395	37,357	41,685	44,187	최근 3개년 예산 증가율(4.2%) 대비 상향된 6.0%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차년도 정부안 국방비 규모	'27년 정부 예산안 (예산편성 순기상 차년도 예산)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	-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사업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운용지침·수행총괄지침 제정,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제도개선방안 확인	편성지침 등 정부정책 반영

③ ODA 실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Ⅱ-5-③)

□ 추진배경

- 그간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책무 이행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부족

* ODA 지원규모 및 순위(OECD DAC 실적 통계) :

(‘21) 3.3조원, 15위 → (‘22) 3.6조원, 15위 → (‘23) 4.1조원, 14위 → (‘24) 5.5조원, 13위

- 소규모·중복 사업 과다* 및 일회성·저성과·비효율 사업 등에 대한 외부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통폐합 등 자체 개선은 미흡

* ‘25년 기준 41개 시행기관에서 1,585개 무상 ODA 사업을 추진 중

- 부처별 ODA 사업 관리체계가 지나치게 상이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검토, 사업성과 비교 등이 곤란하고, 사업 투명성도 부족

-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ODA로 전환이 시급

※ (대통령 지시사항) ODA가 K-이니셔티브 차원에서 한국을 브랜드화하고 문화 진출과 기업·경제 진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것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및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ODA 실적 내실화

- 국조실·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ODA 시행기관 및 사업을 점검하여, 역량 있는 시행기관의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 ODA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부처 간 사업 성과 비교, 지출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 부처 ODA 예산구조 전면개편

※ 제4차(‘26-’30)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 발표) 관련 내용 : “ODA 사업명은 명칭만 보아도 일반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으로 설정”

② 국익 연계 상생 전략형 ODA 추진 및 선택과 집중

- ODA가 수원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문화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전략적 관점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 AI·문화 등 우리 강점 분야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향후 협력가능성이 높은 중점 지역·국가에 집중 투자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6년도 중점투자 방향 마련(편성지침 수립)	'26. 1~3월	
	○ 국제기구분담금 사업관리 체계 개선안 마련	'26. 3월	
2/4분기	○ ODA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목구조 개편안 마련	'26. 4월	
	○ ODA 사업 과목구조 개편 추진(부처 협의 등)	'26. 5월	
	○ ODA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26. 4~6월	
3/4분기	○ ODA 사업 통폐합·정비 추진(국조실·외교부 등 협조)	'26. 6월	
	○ AI·문화 ODA 확대 등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	'26. 6~8월	
4/4분기	○ '27년 예산안 국회 의결	'26.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원국, 국제기구, 사업시행기업, 개발협력 NGO 등

□ 기대효과

- ODA 질적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한국 ODA의 대표 성공사례 창출 및 브랜드화 계기 마련
- 수원국과 공여국의 동반성장을 통한 ODA 지속가능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국익 연계 상생 전략형 ODA 추진(Ⅱ-5-②)	다부처사업	65,835	53,5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4	'25	'26	'27			
무상 ODA 사업 수(개)	1,645	1,585	1,505	1,430	• 전년대비 사업 수 △5% 축소	국조실 발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확정의결 자료
ODA 사업 과목구조 전면개편	-	-	-	전면 개편	• ODA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 과목구조 전면개편안 마련	차년도 정부안 사업내역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AI·문화 ODA 예산 증가율(전년대비, %)	-	-	-	30.0	• AI·문화 ODA 예산 확대 필요 ('26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조실 AI·ODA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 분류 예정)	'27년 정부안 사업규모 확인	'27년 정부 예산안 확인

기 본 방 향

- ◇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재정혁신 추진
- ◇ 재정당국·관계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성과목표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성과관리 강화
- ◇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한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마련
- ◇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전면 개편
- ◇ AI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민생안정 등에 대응하여 재정집행을 관리
- ◇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권기금사업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익적 가치 제고
- ◇ 부처합동 일제점검 강화, 국고보조시스템(e나라 도움) 통합관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미정산·미징수 정리로 국가재정 확충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0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재정 인프라 혁신		재정 인프라 혁신 종합지표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재정성과관리 만족도 조사(점)
	① 체계적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① 성과평가제도 개선과제 이행률(%)
		② 성과목표관리 목표 달성률(%)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적극적 재정환류	① 평가대상사업 중 사업정비 건수비율(%)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조회건수
	③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	① 기금 자산운용제도 운용개선
		② 연기금투자폴 운용수익률(%)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재정투자관리 만족도 조사(점)
	①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 강화	① 예타제도 운영개선
		② 예타 컨설팅 시범운영(건)
	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①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②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건수(건)
	③ 재정집행 관리 강화	①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률(%)
		② 중점관리대상 상반기 집행률(%)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① 당초 계획 대비 복권매출액 달성률(%)
		② 복권 건전 문화 조성 추진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① 복권기금 브랜드사업군 지원비율(%)
		② 복권기금 홍보 활동 지수(점)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법령 등 제도 정비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실적
	②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미정산·미징수 정리실적

(1) 주요내용

□ 재정 운용의 수 과정을 총괄 관리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성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성과목표관리 제도 및 재정사업 점검·분석을 위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운용
- 엄격하고 중립적인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체계적 지출구조 조정 시스템’을 마련
- 67개 전체 기금 자산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한 공통 기준 및 기금 자산운용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재정의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민자를 활용한 경제성장 지원

-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사전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 운용
- 신산업 민자 도입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향유하기 위한 「민자활성화 방안」 마련
- 재정사업의 조기성과 도출 등을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

□ 복권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복권기금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공익적 가치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25	'30			
재정인프라 혁신 종합지표	12.6	1.6	4.2	6.5	5.2	9.6	성과평가환류액 및 투자절감액은 연평균 3% 증가,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10% 성과우수사업,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목표로 산정	성과평가환류액(A) + 투자절감액(B) + + 복권기금공익사업 중 성과우수사업 규모(C)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D) *A :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환류 규모(조원) B : 예타 총사업비 절감액(조원) C :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성과 평가결과 우수사업 규모(조원) D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	부처별 예산요구서, PIMAC 연차보고서

* A :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환류 규모(조원), B : 예타 총사업비 절감액(조원),
C :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성과평가결과 우수사업 규모(조원), D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

(3) 기타

(1) 주요 내용

-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위해 독립적 외부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
 - 15개 분야,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소부처 사업을 평가하고, 개별평가 주관부처(행안부·지방위) 등도 함께 참여
- (재정사업 성과평가) 적극적 재정환류를 위해 평가 결과를 명확히 유형화하여 예산에 직접 연계하고 평가보고서 등을 ‘열린재정’에 공개
 - ①평가결과를 예산요구시 반영(5월), ②예산안 반영 정도,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9월)
- (자산운용 관리체계)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공적역할 제고를 위해 기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책 기능 강화
 -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통 기준을 최초로 수립하고, 종합적 자산운용 방향 논의를 위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재정성과 관리 강화	▶ 재정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관리과제	1. 체계적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 성과평가제도 개선과제 이행률(%) ▶ 성과목표관리 목표 달성률(%)
	2.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적극적 재정환류 및 투명성 강화	▶ 평가대상사업 중 사업정비 건수·비율(%)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조회건수
	3.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	▶ 기금 자산운용제도 운용개선 ▶ 연기금투자폴 운용수익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재정성과관리 만족도 (점)	-	-	-	79.5	전년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 목표치(78.9)에 최근 3개년('22~'24년) 연평균 증가율(0.7%)을 적용	재정성과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개별법에 근거한 성과평가*의 특수성이 미반영

* (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등

○ 개별법상 별도 평가와 통합·연계 운영 강화

☐ 기획처 주관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부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우려

○ 평가 수행 단계별 부처 의견을 서면·대면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논의 진행

☐ 일반 국민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

○ 평가단 구성시 시민사회 소속·추천 인사를 일정비율 포함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체계적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Ⅲ-1-①)

□ 추진배경

- (성과평가) 급변하는 대외환경 대응, 저출생·저성장 극복, 민생경제 회복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
 - 따라서 체계적 재정성과관리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핵심과제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재정여력 확보가 필수적
 - 특히, **엄격하고 중립적인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체계적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성과목표관리) 성과관리의 거시적·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의 재정비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성과지표의 **효율적 설정** 및 **연례적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환류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성과평가)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개편(’26년~)
 -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 제고
 - 평가대상 중복 및 부처 평가부담 최소화,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위해 **개별법상 평가***를 **통합 성과평가와 연계·통합** 운영

* 균형발전(지방위)·재난안전(행안부)·일자리(고용부)·중소기업(중기부) 평가 등
- (성과목표관리) 성과지표의 **적정성 점검·개선**, 성과목표관리 환류체계 강화 및 대국민 접근성 개선
 - 「1프로그램 1성과지표」원칙이 부적절한 프로그램 점검·개선과 성과계획서에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포함 등 **활용도** 제고
 - 성과목표관리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과 우수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포털「열린재정」에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 강화**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발표	1월	
	'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지침 개정	1월	
	'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우수 부처 등 선정	3월	
2/4분기	'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국무회의 보고	4월	
	'2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지침 개정	4월	
3/4분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7~'31년) 마련	8월	
	'2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재정성과평가단 검토 → 국회 제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개선안, 성과계획서 활용도 제고 방안 등)	8월	
4/4분기	'27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마련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편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 관련 관계부처·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편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회의	1월
회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개정 관련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4월

□ 기대효과

- 관계부처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평가의 **중립성·객관성·실효성** 제고
-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강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통한 기관의 성과 달성 동기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성과평가제도 개선과제 이행률(%)	-	-	-	100%	▶ 연초 기획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선과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행계획 상 개선과제 중 실제 달성과제 ÷ 총 과제 ×100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목표관리 목표달성률(%)	-	-	-	79.9%	▶ '22~'24회계연도 3년 평균 달성률 78.8%보다 1%p 상승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 ÷ 총 성과지표 × 100	성과보고서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적극적 재정환류 (Ⅲ-1-②)

□ 추진배경

-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자체평가 방식의 한계 및 다수 평가 제도의 분산적 운영으로 인한 환류 미흡 등 평가 실효성 부족
-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평가결과, 부처별 구조조정 계획 등 일부만 공개하여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성과 등을 중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 (평가대상)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사업(세부사업 원칙)
 - *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재정사업(세부사업 원칙, '26년 기준 2,700여개) 대상
 - (평가항목)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종합 평가
 - (환류) 평가결과를 명확히 유형화*하여 예산에 직접 연계
 - * (부처 자체평가)우수/보통/미흡 → (통합평가)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 평가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부처별) 등을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서면평가 추진	1~2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대면평가 추진	3월	
2/4분기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쟁점사업 평가 추진	4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확정·통보	5월	
3/4분기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6월	
4/4분기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우수사업 포상 추진	9~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정사업 평가시 각 부처 사업담당자에 적극적 소명기회 제공, 평가단 대상 조정위원회·분과회의 등을 운영하여 의견수렴·조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서면·대면 평가 쟁점 관련 사항 수시 논의 및 부처 소명기회 제공	1~5월

□ 기대효과

- 평가결과를 명확히 유형화*하여 예산에 연계하고, 평가보고서를 공개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부처 자체평가)우수/보통/미흡 → (통합평가)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정성과 관리 강화				
① 재정사업평가(2644)		일반회계	33.1	52.3
■ 재정사업평가(300)		일반회계	33.1	5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사업정비 건수·비율(%)	-	-	-	25.0	▶ 재정사업 자체평가 초기 5년 평균('09~'13) 미흡사업 비율(23.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 * '26년 부처 자체평가 폐지 및 관계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 자체평가가 정착된 '21~'25년 평균 미흡사업 비율이 15.7%인 점을 감안시 매우 도전적	(감액, 폐지·통합 사업건수/평가 대상사업건수) x100	평가보고서 (열린재정에 공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조회건수	2,018	1,974	2,066	3,000	▶ 통합평가 도입에 따른 공개항목 확대(2→4개)로 국민 관심 및 정보 활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50% 상향한 목표 설정 * 기존 공개사항인 평가결과, 부처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평가보고서 원문, 미반영 사유서도 공개	당해연도 통합평가 결과보고서 조회건수 (매년 12월 기준)	열린재정

③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 (Ⅲ-1-③)

□ 추진배경

- 현재 기금 여유자금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는 자산운용 지침(IPS)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기금 자산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적역할 등 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성 제기
- * ('20) 884 → ('21) 1,007 → ('22) 1,130 → ('23) 1,082 → ('24) 1,222조원
- 또한, 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기구**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수립) 기금 자산운용의 공통 기준으로서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수립
 -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기본원칙인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만족하는 「**자산운용의 최적점**」 모색
 - 또한, 기금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내 벤처·코스닥 등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기금 투자시 **의의·고려사항** 제시
- (거버넌스 강화) 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
 - 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는 연기금투자풀의 운영·관리 관련 사항만을 심의, **전체 기금을 아우르는 자산운용 방향** 심의기능은 부재
 -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기금 자산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 수행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6년 자산운용 기본방향 수립 및 '26년 기금평가 지침 개정	1월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 및 위원회 개최	1월	
	연기금투자폴 대체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수시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월	
2/4분기	기금 자산운용 실태 평가	3~5월	
	'26년 기금운용평가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5월	
	연기금투자폴 대체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수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수시	
3/4분기	기금자산운용정책위 민간위원 대상 설명회 개최	7월	
	연기금투자폴 대체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수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수시	
4/4분기	기금운용평가 결과 하위기금 등 정밀실사 실시	10~12월	
	기금 자산운용 효율화 업계·기금관리주체 대상 세미나 개최	12월	
	연기금투자폴 대체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수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기본방향) 기본방향 마련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자산운용 주체인 기금 담당자 등과 간담회·회의 수시 개최

*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전문가, 금융시장 전문가 등

- (거버넌스 강화) 기금자산운용정책위 정부위원으로 대형기금 소관 부처까지 확대하여 기금 자산운용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또한,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도 추가 위촉하여 간담회 및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책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기금 담당자,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 개최	수시
	자산운용 관련 학계·금융시장 등 민간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수시
회의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수시

□ 기대효과

- (기본방향) 기금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금의 사회적 책임·공공성 제고에 기여
 -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기금의 가용재원 확충 가능
- (거버넌스 강화)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종합적 운용방향 수립 및 관리체계 고도화로 자산운용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정성과 관리 강화				
① 재정사업평가(2644)		일반회계	33.1	52.3
▪ 재정사업평가(300)		일반회계	33.1	5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기금 자산운용제도 운용 개선				제도 개편 (신규)	· 제도 개편 방안(지침 개정 등) 발표 및 세부과제별 후속조치 진행	제도개편 방안 발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등
연기금투자 자산운용수익률(%p)	-	-	-	연기금투자 자산운용수익률 > 벤치마크 수익률	· 연기금 투자 자산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	연기금투자자산 기간 수익률 - 벤치마크 수익률	연기금투자자산 성과보고서 등

(1) 주요 내용

- (타당성심사 관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사업 예타제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뒷받침
 - 균형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을 뒷받침하고 효과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지속 개선
 - 연 4회(분기별) 예타 대상·면제사업 선정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략적 적기 투자를 지원
- (민간투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후속조치와 유망사업 발굴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신사업·신유형 도입, 국민참여 확대, 지방민자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및 민자가라반 등을 통한 유망사업 발굴
- (재정집행 관리) 경기·민생안정 등에 대응하여 재정집행관리
 -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경제에 밀접한 핵심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별하여 상반기 집중 집행관리(목표 70% 이상)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재정투자 관리 강화	▶ 재정투자관리 만족도 조사(점)
관리과제	①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강화	▶ 예타제도 운영개선
		▶ 예타 컨설팅 시범운영(건)
	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건수(건)
	③ 재정집행 관리강화	▶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률(%)
		▶ 중점관리대상 상반기 집행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재정투자관리 만족도 (점)	-	-	-	79.5	전년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 목표치(78.9)에 최근 3개년('22~'24년) 연평균 증가율(0.7%)을 적용	재정성과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예타조사 기간의 장시간 소요 및 타당성 미확보 시 사업부처의 수용성 저하 등 애로 발생
 - 예타 제도개선 시 적극적으로 부처·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제공 및 적극적 대안검토 등을 통해 조사결과의 수용성 제고
-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과제 이행과 신규 민자사업 발굴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
 -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설명회·현장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
- 면밀한 재정집행 점검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 지연, 자금배정 지연 등에 따라 집행목표 미달성 가능성 상존
 - 범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 찾아가는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 해소방안 도출 등 집행관리 강화 추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②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 강화 (Ⅲ-2-①)

□ 추진배경

- 예타* 도입('99년) 이후 총 1,064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수행, 타당성 낮은 382개 사업을 선별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SOC, 정보화, 사회복지 등)을 추진 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 예타 도입 前('94~'98) 부처 자체 타당성조사 통과율: 97%(33건중 1건 미통과)
예타 도입 이후('99~'25) 예타 통과율: 64.1%(1,064건 중 382건 미통과)

-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계량화된 경제성(B/C)과 비계량 가치*' 사이의 최적점을 모색하고 전략적 적기 투자를 지원할 필요

* 지역 균형 및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춰 평가하여 국가아젠다 추진을 뒷받침

-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26.3월)하고, 지침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제도개편안 시행('26.6월~)

- SOC 대상기준 상향*, 노후화된 SW·HW 단순 대체사업 예타면제 신설 등 법개정 사항 지속 모니터링 및 신속한 통과 추진

*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
(개편)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를 공정·신속하게 수행하고, 예타 쏠 과정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업 관리 강화

- 연 4회 예타 대상·면제사업 선정 및 사업 완료시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원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3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발표	3월	
2/4분기	지침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6월	
3/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7~9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안 설명회 개최	9월	
4/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0~12월	
	조사기관 확대를 위한 조직·예산 등 기반 마련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예타 제도개편안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 예타 제도 세부 운영과정 상 보완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조사 수행기관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슈 점검회의 개최
- 제도 개편 보완점 및 추가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간담회·회의 수시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안 설명회 개최	9월
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관련 조사수행기관 회의 개최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수시

□ 기대효과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및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예타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아젠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Ⅱ-2)				
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		일반회계	131.6	19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301)		일반회계	129.3	17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402)		일반회계	2.2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예타제도 운영개선	-	-	-	제도 개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및 지침 정비 필요	지침 개정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안건, 보도자료 등
예타 컨설팅 시범운영	-	-	-	시범 운영 수행 (신규)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사업부처·지자체 대상 예타 컨설팅 시범운영 예정	수행여부	보도자료, 내부보고자료 등

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Ⅲ-2-①)

□ 추진배경

- (제도개선) 그간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미흡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필요
- (사업발굴)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발굴 필요
 - AI 등 미래형 인프라 및 지역맞춤형 생활 SOC 등 지방 유망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참고】 대통령 지시사항('25.8.29일)

- 예산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민간 자원을 동원해서 대체할 방법을 찾아볼 것
 - ①재정부담은 줄이고, ②민간에 대한 통제는 하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고, ③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의 방법을 발굴할 것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도개선) 신사업·신유형 민자 도입, 국민참여 확대, 지방민자 활성화, 절차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
 - 신사업(데이터센터 등)·신유형을 도입하여 민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참여형 인프라편드를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 기반 확보
 - 지역우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활성화하고 지역맞춤형·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5%p), 공공계약제도 상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등

** 소규모 생활 SOC에 대한 가중치 상향(+5%p) 및 지방민투심 권한 이양

- RFP 표준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민자사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정비 수요를 반영해 절차* 개선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격성조사·민투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

○ (사업발굴) 지자체 유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 상담 - 후속 지원 체계를 통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건수 제고

- 민자카라반*(7개 권역) 등을 통해 지역 유망사업 발굴 및 사례 공유

* 지방정부 현장에서 사업발굴, 절차 컨설팅지원, 제도개선 건의 취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신용보증기금·KDI의 기초단위 지방정부 자문* 및 개별사업 컨설팅**을 연중 운영 → 지방의 민자사업 접근성 완화

* 민자사업 이해와 광역자치단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특화교육 신설(KDI, '26년)

** 신보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25년 60회 → '26년 200회로 목표 상향)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6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수립	2월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1~3월	
	민간투자사업 공공부문 대면교육	3월	
	민간투자사업(BTO 및 BTL) 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2/4분기	민간투자제도 부처·지자체 대상 교육 및 설명회	4월	
	'26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국회 제출	5월	
	민간투자사업(BTO 및 BTL) 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3/4분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워크숍	7월	
	민간투자제도 부처·지자체 대상 교육 및 설명회	9월	
	'26년 BTL 한도액 요구서 국회 제출	9월	
	민간투자사업(BTO 및 BTL) 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4/4분기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10월	
	민간투자사업 추계학술대회	11월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문 대면교육	12월	
	민간투자사업(BTO 및 BTL) 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민간투자 활성화) 민자 활성화방안 간담회, 집행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주무관청 등 관계기관 회의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지역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장 방문	수시
간담회	「민자카라반」을 통해 지방현장 소통 실시	4월~

□ 기대효과

- (민간투자 활성화) 민간투자 추진여건 개선을 통해 한정된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면서 지역 맞춤 사회기반시설 공급 확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Ⅱ-5)				
② 민간투자사업활성화 지원(2645)		일반회계	3.3	2.3
■ 민간투자사업활성화 지원(300)		일반회계	3.3	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	-	-	제도 개편 (신규)	▶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및 세부과제별 후속조치 진행	제도개편 방안 발표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간담회, 민자카라반 등 현장소통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건수)	9	17	9	12	▶ 최근 3년 평균(철회 제외, 11.7건) 상회하는 목표 달성 노력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건수	공공투자관리센터

③ 재정집행 관리 강화 (Ⅲ-2-③)

□ 추진배경

- 정부재정의 신속집행 등 적극적 집행관리를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민생안정 도모
 - 국민·기업 등에 재정 혜택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경제성장률(% , 전년동기, 한은): ('25.상) 0.3 (하) 1.6 → ('26. 상[㉠]) 2.4 (하[㉡]) 1.6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22) 63.0 ('23) 65.0 ('24) 65.0 ('25) 66.8 ('26) 63.0

-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경제에 밀접한 핵심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별하여 상반기 집중 집행관리→ 목표 70% 이상

⇒ 재정집행 점검회의, 찾아가는 집행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경제여건 등 변동 시 집행계획 보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6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수립	1월	
	재정집행 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한 재정집행 관리	1~3월	
2/4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한 재정집행 관리	4~6월	
3/4분기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발표	7월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재정집행 관리	7~9월	
4/4분기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재정집행 관리	10~12월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재정포럼 개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집행 애로사항 점검
- 집행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추진
-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현장 건의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장방문	1, 3월 방문 주기적 추진
간담회	집행체계 개선방안 마련 관련 간담회	4~5월
회의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수시

□ 기대효과

-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뒷받침, 연말 집중 집행
방지로 이·불용 감소 등 예산집행 효율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재정집행 관리 강화(Ⅲ-2-③)			
① 재정집행관리(2643)	일반회계	2.4	3.35
■ 재정집행관리(300)	일반회계	2.4	3.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률(%)	65.7	66.2	69.5	63.0	▶ '26년 경제전망에 근거하여 과거 상고하저(20,22년 전망) 시기와 유사하게 설정 * 집행목표(%) : ('20) 62.0 ('22) 63.0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액 /예산액)×100	정부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중점관리대상 상반기 집행률(%)	-	-	-	70.0	▶ 신속집행과 별개로 경기민생에 밀접한 핵심사업 선정 → 신속 집행보다 높은 집행률 목표 관리	(중점관리대상 사업 상반기집행액 /예산액)×100	정부예산회계시스템 (dBrain)

(1) 주요 내용

□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복권판매방식 개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 복권 및 복권기금 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불법행위 선제 대응 등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 복권 소비자인 일반국민이 복권구매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사업의 정체성 강화
 - 일반국민 수요, 주요 해외사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복권 사업 브랜드화 지속 추진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관리과제	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당초 계획대비 복권매출액 달성률(%)
		복권 건전 문화 조성 추진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복권기금 브랜드사업군 지원비율(%)
		복권기금 홍보 활동 지수(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81.0	69.6	76.9	75.8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대상 복권에 대한 인식 공감도 조사 - 최근 3년 평균치(75.8%)로 목표 설정	설문기관 조사	설문기관 조사 결과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복권기금은 기존 복지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지출이 경직적인 반면, 새로운 민생수요는 증가 →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성 증대
- '04년 복권법 제정시 기존 발행기관(10개)에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 도입
 - 그간 성과평가를 통한 가감조정제도 도입('11년 $\pm 20\%$)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지적* 지속
 - * 재정여력(자체수입 보유 등)이 충분하거나 사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여유자원 편성)한 기관에도 기계적으로 복권수익금을 배분
 - 이에, (1단계)성과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하고 (2단계)법정배분제 일몰제 도입 및 공익사업 전환 추진
 - ⇒ (1단계)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2단계)해당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은 제고 하되 갈등은 최소화

(4) 기타

- 그간 다수 민원 제기 사항 중 복권의 신뢰성 및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제도개선 과제는 연도 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Ⅲ-3-①)

□ 추진배경

- 그간 복권판매의 성장세에 따른 복권기금의 규모 확대*, 사행산업에서의 위상 상승**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 매출액(조원): ('04)3.5 →('25)7.7(2.2배↑) / 기금사업비: ('04)0.9 →('25)3.3(3.6배↑)

** 사행산업 내 매출비중 변화('15→'24년, %): (경마)38→26 (경륜)11→6 (복권)17→29

- 現 오프라인(판매점, 현금) 중심 판매 등으로 젊은층* 등 다양한 소비자의 변화 요구 반영에 한계

* '25년 설문조사 결과, 젊은층의 복권 구매경험은 낮고 부정인식은 높았음

(구입경험) 전체 60.6% ↔ 19-29세 55.1% (복권인식) 도박전체 9.9% ↔ 19-29세 13.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바일 구매환경 개선)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 확대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개시(2.9, 상반기 시범운영* → 하반기 본격도입)

* 평일(월~금) 판매 / 현행 인터넷 판매한도(1회차 5천원, 총량 전년도 5%) 유지

- (안정적 판매망 유지) 모바일 환경下, 판매점 상생방안 마련('26년)

- 판매점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적정 판매점수(9,500개) 유지*

* '26년은 추가모집 미 실시하고 '27년부터 자연 감소분만 충원

- 저매출 판매점 지원 강화방안 검토

- (시스템 유연화) 클라우드 기반의 복권시스템으로 개편('31년)

* 개편 추진 일정: 차세대 복권시스템 정보화 기본계획('25~'26년) → 차기 복권 수탁 사업 원가 산정에 반영('27년) → 차세대 시스템 개발('29년~)

- 결제수단 다양화, 신상품 도입 등의 요구에 유연한 대응 가능

○ 복권 나눔·기부문화 확산 및 불법행위 선제 대응을 통해
건전한 복권 문화 조성

- 복권구매자와 기금수혜자가 연결하는 복권 지원사업의
브랜드화 및 전략적 홍보 추진

* 대표 복권기금 지원사업 영상 제작 및 다양한 플랫폼(TV, 유튜브, SNS) 맞춤 홍보 진행

- 복권위원장(2차관)과 복권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연6회)을
통해 복권의 기본가치인 나눔 실천 지속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복권 건전구매가이드 및 맞춤형 과몰입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
고 판매점 지도점검 및 중독 예방 캠페인 확대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모집 및 1차 봉사활동 실시	2~3월	
	○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2월	
	○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 실시	연중	
	○ 복권발행관리자문단 개최	연중	
	○ 5기 복권사업 운영 관련 협의체 회의	연중	
2/4분기	○ 27년도 복권발행계획 수립	4월	
	○ 복권 건전문화 조성 캠페인 개최	4월·6월	
	○ 행복공감봉사단 2차·3차 봉사활동 실시	4월·6월	
	○ 복권판매점 불법행위 지도·단속 점검(매월)	연중	
	○ 복권발행관리자문단 개최	연중	
	○ 5기 복권사업 운영 관련 협의체 회의	연중	
3/4분기	○ 인터넷 판매한도 개선방안, 판매점 상생방안 발표	7~8월	
	○ 복권 건전문화 조성 캠페인 개최	8월	
	○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 실시	9월	
	○ '27년 복권홍보계획 수립	9월	
	○ 복권발행관리자문단 개최	연중	
	○ 5기 복권사업 운영 관련 협의체 회의	연중	
4/4분기	○ 복권 건전문화 조성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10월	
	○ 4대 제도개선 추진방안, 온라인공간 재구조화 방안 마련	11월	
	○ 복권 건전문화 조성 캠페인 개최	11월	
	○ 행복공감봉사단 5차·6차 봉사활동 실시	11월·12월	
	○ 복권 건전화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연중	
	○ 복권발행관리자문단 개최	연중	
	○ 5기 복권사업 운영 관련 협의체 회의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복권구매자) 모바일 구매자 설문조사(4회), 판매인 공청회 및 대국민 복권인식조사(하반기)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 복권사업운영 협의체 회의(매월), 복권발행관리자문단 회의(연중 수시) 등을 통해 복권사업운영방향 상시협의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수탁사업자와 복권사업운영 협의체 회의	매월
공청회	판매인 대상 판매점 상생방안 공청회	7~8월
현장방문	복권인쇄업체, 복권추첨방송사, 동행복권 콜센터 등	연중 수시
회의	복권발행관리자문단 회의	연중 수시

□ 기대효과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판매방식 개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 소비자 만족도 제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복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복권기금 브랜드 인식 제고
- 복권 불법행위 감시 강화,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복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복권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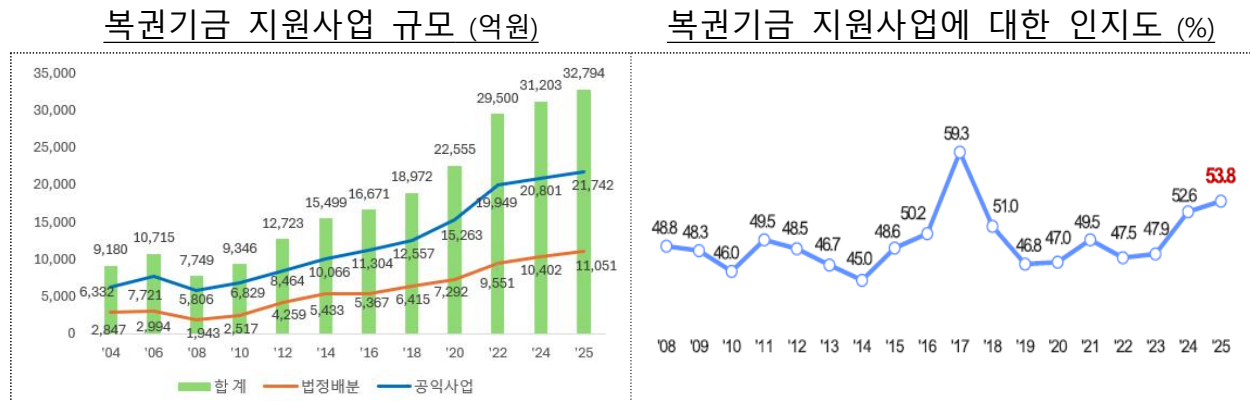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당초 계획대비 복권매출액 달성률 (%)	100.1%	100.6%	99.6%	100.2%	복권 시장의 실제 수요를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 복권발행계획상 계획액 대비 달성률이 둔화 추세('26년 상반기 진도율 49.2%) 임에도,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100.1%보다 높은 100.2%로 도전적 설정	$\frac{\text{실적액}}{\text{당초 계획액}} \times 100$	·(계획액) 복권발행계획 · 매전년 4월 작성 ·(실적액) 결산자료 · 매년 관보공지
복권 건전 문화 조성 추진 (횟수, %)	-	-	-	5	캠페인 개최 횟수(0.6) 복권 과몰입 방지, 불법도박 근절, 구매상한 준수, 건전 복권문화 조성 등 복권 건전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개최 - 지표설정 첫 해임을 감안, 주요 권역별 캠페인(4회), 유관기관 워크숍(1회)로 도전적 목표 설정	권역별 캠페인 개최 횟수, 워크숍 횟수	결과보고서
	30.5	36.8	34.3	34.0	복권의 사행성 평가 결과(0.4) - 최근 5년 실적 평균(38.4%)보다 훨씬 낮은 34.0%를 목표치로 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하향지표)	설문기관 조사	설문기관 조사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Ⅲ-3-②)

□ 추진배경

- '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복권지원 사업 인지도는 낮은 수준



-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상 속 나눔행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국민 선호·체감 사업으로의 전환은 미흡

* 복권인식조사(입소스, 매년) 결과:

나눔행위: ('08) 52.1%→('24) 62.0%→('25) 77.1%, 일확천금: ('08) 55.9%→('24) 51.1%→('25) 46.4%

- ⇒ 복권사업을 브랜드화(선택·집중)하여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구매효능감 증대→지원사업 확대' 선순환 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추진전략】 ①일반국민이 선호·체감하는 사업군으로 선택과 집중
 ②지원사업기관의 자발적 유도(성과평가 인센티브)
 ③국민참여 확대 및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인지도 제고

- (브랜드사업 군 선정) 일반국민 선호, 주요 해외사례, 현재 지원사업 등을 토대로 3개 브랜드 사업군 선정
 -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지원 사업군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

복권기금 지원사업 브랜드사업群

1. 주거복지사업群 【국민선호사업】 출표권 예시 복권 한 장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현재(예시) ■ 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주택도시기금 전출)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희망제주 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2. 장학사업群 【국민선호/해외참고】 출표권 예시 복권 한 장이 아이들의 꿈으로 현재(예시) ■ 저소득층 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 청소년 생활장학금 (경기도) ⋮	3. 소외계층 복지사업群 【사회적요구 사업】 출표권 예시 복권 한 장이 이웃들의 희망으로 현재(예시)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양성평등기금 전출) ■ 서민금융, 청년정책금융 (금융위원회) ■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산·대구·광주광역시 등) ⋮
--	--	---

- (사업기관의 자발적 참여유도) 기관별 복권기금 지원 예산 중 브랜드 사업群 비중에 따라 최대 +3점 가점 부여

* 법정배분사업은 기관별, 공익사업은 사업별로 부여

- (브랜드사업군 홍보강화) 복권사업 홍보CF에 ‘나눔·기부’와 ‘브랜드사업’ 연결 이미지 집중 홍보 (온라인)

- 브랜드사업群에 대한 홍보포스터 제작 → 전국 9천여 개 복권판 매점을 통해 홍보 전개 (오프라인)

- (지출구조조정 병행) 연례적 부진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24년 집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 기존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에서도 수혜대상자 등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정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복권기금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제출	1월	
	○ 복권기금 집행지침 마련·통보	1월	
	○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 마련·통보	2월	
2/4분기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4월	
	○ 1/4분기 복권기금사업 집행실적 점검	4월	
	○ '2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정부안 수립	5월	
3/4분기	○ 2/4분기 복권기금사업 집행실적 점검	7월	
	○ '2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 국회 제출	9월	
4/4분기	○ 3/4분기 복권기금사업 집행실적 점검	10월	
	○ '2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의결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부처 간담회	• 복권기금 지원사업 신청사업 설명회 및 의견수렴	연중
현장방문	•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장방문 및 건의사항 등 수렴	연중
협의	•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협의 및 집행실적 등	연중

□ 기대효과

- 복권기금 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선택과 집중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구매효능감 제고 및 일반재정 부담 완화
 - 사행성 위주의 국민 인식을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으로 전환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복권기금 브랜드사업군 지원비율(%)	-	-	86.3	87.0	전체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에서 브랜드사업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 '25년 신규 지표임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상회한 점을 감안(목표85.0→ ^{실적} 86.3), '26년 목표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87.0%로 설정	브랜드사업군 지원사업비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27년 정부예산안																				
복권기금 홍보활동 지수 (점)	-	-	-	1,271	복권기금사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치(Y) = 1,098 표준편차(S) = 115 - 최고목표: 기준치+1.5×표준편차 = 1,271 최저목표: 기준치-1.5×표준편차 = 926 • 기준치 $Y = \frac{Y_a + 4Y_m + Y_b}{6}$ * Y_a : 과거 3개년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867) Y_b : 과거 3개년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1,145) Y_m : 평가 직전 연도 실적치(1,145) ■ 복권기금 홍보활동 실적 <table><tr><th>구 분</th><th>'23 실적</th><th>'24 실적</th><th>'25 실적</th></tr><tr><td>① 홍보영상 지상파 TV 노출 건수</td><td>922</td><td>1,008</td><td>1,202</td></tr><tr><td>② 홍보영상 디지털(유튜브, 티빙 등) 노출 건수 (단위: 십만건)</td><td>719</td><td>898</td><td>1,275</td></tr><tr><td>③ SNS(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 조회 및 방문자 수 (단위: 1000건)</td><td>938</td><td>984</td><td>1,005</td></tr><tr><td>실적</td><td>867</td><td>965</td><td>1,145</td></tr></table> ■ (지수산출) ① 홍보영상 지상파 TV 노출 건수 × 0.3 + ② 홍보물 디지털 노출 건수(십만건) × 0.3 + ③ SNS 조회 및 방문자 수(천건) × 0.4	구 분	'23 실적	'24 실적	'25 실적	① 홍보영상 지상파 TV 노출 건수	922	1,008	1,202	② 홍보영상 디지털(유튜브, 티빙 등) 노출 건수 (단위: 십만건)	719	898	1,275	③ SNS(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 조회 및 방문자 수 (단위: 1000건)	938	984	1,005	실적	867	965	1,145	지표별 가중평균	수탁사업자 복권홍보 및 광고실시 결과 보고서
구 분	'23 실적	'24 실적	'25 실적																								
① 홍보영상 지상파 TV 노출 건수	922	1,008	1,202																								
② 홍보영상 디지털(유튜브, 티빙 등) 노출 건수 (단위: 십만건)	719	898	1,275																								
③ SNS(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 조회 및 방문자 수 (단위: 1000건)	938	984	1,005																								
실적	867	965	1,145																								

(1) 주요 내용

-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강하고 일제 점검 추진
 -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의 직접 심의 위해 부정수급심사소위를 신설하고, 후속조치 강화 등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등 추진
 - * (1천만원 이상) 기획처 부정수급 심사소위 (1천만원 미만) 부처 부정수급 심의위
 - ** 부정수급 현장조사 시 자료제출·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기획처 중심 부처합동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25년(606건) 대비 21배 이상 확대된 13,240건*+α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 실시
- 사업종료 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반납 독려·촉진을 통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국가 재정(세외수입) 확충
 - 매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미반납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교부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실효적 제재 병행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 법령 등 제도 정비
관리과제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실적
	2.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 당초 계획 대비 미정산·미징수 정리 실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3	'24	'25	'26			
법령 등 제도 정비	-	-	-	연내 완료	'26.3월에 발표한 부정 수급 근절대책*에 포함된 보조금법 개정, 신고포상금 확대, 신고센터 설치 등	근절대책에 있는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	실제 업무추진 여부 점검 (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등)

* 상시 신고센터(재정정보원) 구축, 보조금법 개정, 기획예산처·재정정보원 인력 확충, 신고포상금 확대, 보조금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 e나라도움 고도화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업 관리감독 주체인 부처의 소극적 자세(문제를 밝혀내기 보다는 덮으려는 행태)로 부정수급 적발, 후속조치(부정수급 환수 등) 미흡 가능

⇒ 기획처 중심의 합동 일제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신설

* 보조금관리위 결정에 부처가 3개월 내 미조치하는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경찰 고발 등

□ 모든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일원화시 다양한 사업 주체의 업무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등에 영향

⇒ 정보시스템 구축시 업무 재설계(BPR)까지 수행하고 중앙·지방 소통 강화 등 통해 부처,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Ⅲ-4-①)

□ 추진배경

- 대통령님 지시('26.2.27)*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6.3.10)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논의·발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간 큰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함. 혈세를 도둑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환수는 물론 몇 배의 경제적 제재 부과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17년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관리 중이나,

- 사업부처의 소극적 행태*, 부정수급의 지능화·다양화, 지방정부 보조금 별도 관리** 등으로 부정수급 근절에 한계

* 관리책임 문책에 대한 두려움, 온정주의 등으로 각 부처의 자체점검 미흡

**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시스템인 보탬e, e호조를 통해 관리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중심)

- (합동점검) 기획처 중심으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대폭 확대('25년 606건 → '26년 13,200건 + α)

* 기획처, 관계부처, 재정정보원, 회계사, 보조인력 등이 참여 (총 24개팀 운영)

** 민간보조 6,500여건 + 자치단체 보조 6,700여건 + 부정수급 신고센터 제보(α)

- (제도보강) 빈틈 없는 부정수급 적발과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조금법 개정** 등 추진

*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신설 (오프라인) 재정정보원에 전담창구 설치·운영

** 현장조사시 보조사업자 등에게 자료제출·보고·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포상금 등)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제재부가금 대폭 상향으로 부정수급 유인 근절

*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 →

(개편) 반환명령 금액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금 모든 금액의 30%

- (거버넌스)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관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에서 실시한 심의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 소위** 신설

* 부정수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해 부처에 결정 통보 → 부처는 3개월내 조치 의무

**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건을 직접 심의한 뒤 보조금관리위 상정·의결

- (보조금 통합관리) e나라도움 고도화*(~'29년)를 통해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지방+민간)을 통합 관리

* '29년 구축을 목표로 '26년 중 BPR(업무재설계) /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추진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3월	
	근절대책 추진 관련 예비비 확보	3월	
2/4분기	보조금 부정수급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구축·운영	4월	
	부정수급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 보조금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5월	
	부처 합동 특별집행점검단 구성 및 일제 점검 실시	4~10월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	6~9월	
3/4분기	국고보조금관리단 정규 직제화(기획처) 및 보조금부정수급관리본부 신설(재정정보원) 직제 관계기관 협의	7~8월	
	신고포상금 확대 등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8월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 내실화, 제재부가금 강화 등 보조금법 개정 추진	8월~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구성·운영 (부정수급액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부정수급 여부, 제재 수준 등 심의)	9월~12월	
4/4분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 후, 부처 통보)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집행시 중앙·지방 정부,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통합관리하는 e나라도움 고도화 위해 중앙·지방정부, 시스템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간담회 등 개최

< 간담회, 협의체 추진현황 및 계획 >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설명회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부처 설명회	4월
위원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심의·의결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정부위원 12인, 민간위원 12인) 개최(서면, 5.18~19)	5월
위원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중간보고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6.17)	6월
회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실무회의 * 1차: 7.1~7.8(23개 부처), 2차: 7.27~7.29(31개 부처)	7월
회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운영방안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 청취 *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10인	8월
위원회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심의·의결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8월
회의	차세대 e나라도움 BPR/ISP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앙부처, 광역 지방정부, 공공·민간기관 등 74개 기관)	7~9월
위원회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개최(9월 이후 상시)	9~12월

□ 기대효과

- 관계부처 합동점검 확대,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포상 강화, 심사 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
-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해 민간보조금과 자치단체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Ⅲ-4-②)				
○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501)	일반회계	193	2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실적	6.6 %	7.8 %	9.2 %	7.9%	부정징후 추출* 건수 대비 적발건수의 3년 평균('23~'25) * 사례학습 통해 부정징후 사업을 추출하는 'AI통계모델' 적용	적발건수 / 추출건수	점검결과 보고서

②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Ⅲ-4-②)

□ 추진배경

- 국고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①2개월 내 정산(자치단체보조사업은 3개월)하고, ②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내 의무적으로 국고 반납

⇒ 사업종료 후 정산이 지연되고 있거나 정산 완료 후 예탁계좌(재정정보원)·지방정부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국고보조금 정리 추진

※ '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25년) 시 지방정부 보조금 중 미반납 잔액 지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미정산·미징수 된 국고보조금 잔액 전수조사 실시 (매월)

② 매월 집중관리와 상시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집중관리)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예탁계좌(재정정보원)에 보관 중인 국비 100% 민간보조사업 대상

* 부처별 담당자를 직접 접촉하여 정리방법 상세 설명 등 신속히 미정산·미징수 해소

- (상시관리) 부처별 자체점검, 교육 강화, 실효적 제재 강구 등

- 관련 부처는 年 2회(3월, 9월) 미징수 보조사업 자체점검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정기교육(재정정보원) 외 맞춤형 교육(10인 이상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 및 온라인 교육(재정정보원) 진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26.2월 개정)에 따라, 미반납 사업에 대해 추가 교부 제한 조치 시행

- '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실적을 포괄보조금 지역별 차등지원기준으로 반영

③ 미정산·미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민간+지방정부*)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 추진

* '26년 미정산·미징수 정리 대상 2.7조원 중 지방정부 집행은 2.3조원으로 86.5%

< '2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미반납사업은 보조금 추가 교부 중지)	2월	
	상반기 미정산·미징수 관리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3~4월	
	부처별 상반기 미반납사업 자체점검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3월	
2/4분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 (집행잔액 반납실적을 포괄보조금 차등지원 평가기준 반영)	4월	
	집중관리 대상사업 점검 실시	4~6월	
	미반납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 중지 e나라도움 시스템 반영	5월	
3/4분기	하반기 미정산·미징수 관리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9월	
	부처별 하반기 미반납사업 자체점검 결과 e나라도움에 등록	9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집중관리 대상사업 점검 시, 관련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미반납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의견 수렴
- 자치단체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업무협조 위해 지방정부와 회의·간담회를 적극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부처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수렴	4~6월
간담회 개최	자치단체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업무처리 위해 지방정부와 간담회 개최	7월

□ 기대효과

-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잔액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통해 재정규율 확립 및 국가재정(세외수입) 확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e나라도움 고도화, 담당자 교육 강화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5	'26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Ⅲ-4-②)				
○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정보화)(501)		일반회계	193	201
■ 차세대 e나라도움 BPR/ISP		일반회계	-	1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5	'26			
미정산·미징수 정리 실적	-	74.8 %	78.4 %	80.4%	최근 2개년 실적(74.8%→ 78.4%)의 향상 추세를 반영하되, 추진체계 개선 및 이행점검 강화 등을 고려 하여 전년대비 2%p 증가한 80.4%를 목표	정리실적/ '26년 정리대상 목표(2.7조원) * '17~'23 종료사업 +'24년 종료사업 ('26.1.31.기준)	e나라도움에서 추출

※ '26년 정리대상 목표는 감소('24년 4.5조원 → '25년 3.4 → '26년 2.7)하였으나, '26년 2.7조에는
'24~'25년에 처리하지 못한 난도 높은 미정산·미징수 대상이 포함된 점을 고려 ⇨ '26년
목표치는 '25년의 증가폭(3.6%p, 74.8%→78.4%) 보다 소폭 작게(+2.0%p) 증가한 80.4%로 산정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단계】 분과위원회별 세부평가

- 자체평가 시행계획 상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에 따라 각 실·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세부평가 수행
- 위원회 개최 최소 1주일 전까지 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분과 위원에게 제공,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 부여

【2단계】 전체위원회의 최종평가

- ① 분과위원회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
- ② 실국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심의하여 평가점수 확정
 - * 분과위원회 1차 평가결과 실국 전달 → 실국 이의신청 접수(1주일) → 평가위원 재심의(1주일)
- ③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7등급으로 상대평가(등급제) 적용, 성과부진 원인·대안 제시 등 정성적 평가 병행(가점 등)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등급	총 37개 관리과제
~상위 5%이내	1등급(매우 우수)	1위
5%초과~20%이내	2등급(우수)	2, 3, 4, 5, 6, 7위
20%초과~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8, 9, 10, 11, 12위
35%초과~65%이내	4등급(보통)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위
65%초과~80%이내	5등급(다소 미흡)	25, 26, 27, 28, 29위
80%초과~95%이내	6등급(미흡)	30, 31, 32, 33, 34, 35위
95%초과~	7등급(부진)	36, 37위

* 순위 누적 % = (순위 / 총 과제수) × 100%

단, 동 순위일 경우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국정과제 등 연계 과제 등에 우선순위 부여

【3단계】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①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② 자체평가결과보고서 국무조정실 제출

자체평가 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논의사항
자체평가 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26. 4.	자체평가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시행계획 수립 * 5년단위
상반기 점검	'26. 7.	성과관리시행계획 上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26. 8.	평가위원 검토의견 등 반영하여 계획 수정
하반기 점검	'26.12.	성과관리시행계획 上 연간 이행상황 점검
자체평가 실시	'27. 1.	계획수립, 시행과정, 정책성과, 정책효과성 등 평가
자체평가 결과 확정	'27. 2.	정책성과평가위 심의·의결
자체평가 결과 공개	'27. 4.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고 및 부처홈페이지 게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 결과 최종 확정 (국무조정실 '27.4월)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3개)* 구성·운영

* (구성) 민간위원 15명 + 정부위원 1명(정책기획관), (임기) 2년('26~'28년)
(분과) 3개(미래전략, 예산, 재정성과 민간위원 5명씩) 나누어 운영

② 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평가결과 공개

- 자체평가 결과 ‘상세본’을 기획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 * 전 기관 보고서 정부업무평가 포털 일괄 게시

평가결과 활용

① 정책개선

- 정책성과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실·국별 자체평가 결과 등은 개선대책 수립·시행
- 미흡·부진과제 개선방안을 제출해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② 개인 성과평가

- 평가결과를 내부성과평가(부서평가-정책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추진 인센티브로 활용
 - 국장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시 평가 결과 활용

※ 내부성과평가 체계

① 부 서 평 가			+	② 개 인 평 가			+	③가감점(±α)
계	1. 정책성과	2. 조직역량		계	3. 기여도	4. 교육훈련		개인
90% ~ 65%	75% ~ 40%	15% ~ 25%		10% ~ 35%	10% ~ 30%	0 ~ 5%		(가점)0.3~3점 (감점)0.2~2점

* 26년 기준

** 상위직급일수록 정책성과 반영비중이 높은 구조

③ 우수사례 공유·확산

-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국 설명회 개최시 전파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3	3	0 (0%)	0 (0%)	1 (33.3%)	2 (66.7%)	3 (100%)
성과목표	13	13	0 (0%)	0 (0%)	8 (61.5%)	5 (38.5%)	12 (92.3%)
관리과제	81	81	0 (0%)	6 (7.4%)	61 (75.3%)	14 (17.3%)	74 (91.4%)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3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중장기 미래 대비	실질 GDP 성장률 (%)	한국은행 발표	30-50 클럽 평균 성장률 상회	정량	결과	
II.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원)	예산안 확인	△33	정량	산출	
III. 재정 인프라 혁신	재정인프라 혁신 종합지표	성과평가환류액(A) + 투자절감액(B) +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성과우수사업 규모(C)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D) *A :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환류 규모(조원) B : 예타 총사업비 절감액(조원) C :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성과 평가결과 우수사업 규모(조원) D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	9.6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중장기 미래 대비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	보도자료 등	5	정량	산출	
2.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15세 이상 고용률 (%)	월별 고용률의 연평균	63.0	정량	결과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지출혁신 방안 도출 수	차관급 이상 회의체에서 발표된 지출혁신 과제 수	30개 이상	정량	산출	
4.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열린재정 이용자 수(명)	열린재정 연간 이용자 수	582,000	정량	결과	공통*
II.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	'27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 경상성장률	경상성장률 초과 (4.9%)	정량	산출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교육·문화·환경 분야 투자규모(조원)	'27년 예산안 편성	90.4	정량	산출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산업, SOC, 농림,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조원))	'26년 예산 4대분야 정부안에 3년 평균 증가율 6.9% 적용	107	정량	산출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복지분야 총지출증가율 (전년대비, %)	'27년예산 복지분야 증가율 측정	5.5	정량	산출	
5. 지방주도성장 및 국민안전·평화 기반 구축	공공질서안전·일행·외통·국방분야 총지출 증가율(%)	'27년 확정 예산안 각 분야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	4.0%	정량	산출	
III. 재정인프라 혁신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재정성과관리 만족도(점)	재정성과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9.5	정량	결과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재정투자관리 만족도(점)	재정성과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9.5	정량	결과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 사업 혁신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대상 복권에 대한 인식 공감도 조사	75.8	정량	결과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법령 등 제도정비	근절대책에 있는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	이행완료	정성	산출	

* **공통(공통지표)** : '26년 성과계획서 상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인 경우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중장기 미래 대비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중장기전략에 대한 국민 만족도(%)	중장기전략 관련 전문가 등 설문조사 결과	70	정량	결과	
	② AX·GX 등 산업 구조 대전환	산업구조 대전환 범정부 정책수립(건)	장관급 회의 안건 상정·발표, 보도자료 등	3	정량	산출	
		산업계 건의사항 정책반영(%)	대외발표 안건, 보도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등	20	정량	산출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K-MSR 수립(건)	대외 발표	1	정량	산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마련(건)	대외 발표	1	정량	산출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 관련 토론회 개최(건)	토론회 개최	1	정량	산출	신규
	2.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① 양극화 대응 전략 마련	일자리·지역 등 관련 대책 발표(수)	일자리·지역 등 관련 대책 발표	3	정량	산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율(%)	기획예산처	+0.2%p	정량	결과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간담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발표 건수(횟수)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등	12	정량	산출	신규
		중장기 인구전략 대책 수립(횟수)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등	1	정량	산출	신규
	③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정책만족도	협동조합 이사장·임원·조합원, 전문가, 협의회 대상 설문 조사	85	정량	결과	공통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①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문가 평가 점수(점)	전문가 평가 점수	75.7	정량	결과	공통
	② 고강도 재정혁신	정부 예산안 반영 과제 건수	「지출효율화 TF」에서 발굴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과제 건수	12	정량	산출	
	③ 거시·재정정책 공조 강화	거시·재정정책 공조 건수	협의 횟수	3	정량	과정	
		경제지표 부처 내 공유·확산 횟수	보고자료 작성 횟수	48	정량	과정	
4.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① 재정운용의 참여소통 활성화	예산국민참여단 만족도조사 점수(점)	예산국민참여단 설문조사	84.7	정량	결과	
		재정교육 이수자 수(명)	공무원 등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자 수 합계	7,400	정량	산출	
			일반국민 대면교육 참가자 수 합계	690			
	② 국가발전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	양자·다자 협력채널 구축	외국정부·국제기구와의 공식 면담·회의·협의	16회	정량	과정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	재정데이터활용 건수(건)	재정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 API 활용종수	105,882	정량	결과	
		‘모두의 재정’ 재정통계 공개 확대(건)	‘25년 열린재정 공개건수와 비교	355	정량	산출	
Ⅱ.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총지출 대비 지출구조조정 규모(%)	예산안 국회 제출시	4.0	정량	산출	
		부처·지자체·국민과의 협의 및 소통(건수)	재정전문가 및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건수 측정	100	정량	과정	공통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건수)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 건수	80	정량	산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정부안 편성시 구조조정 의견 준수 사업수/ 연장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사업수	96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기금총지출 (외평기금자산운용 수수료 포함) 대비 기본경비 비중(%)	기금총지출 (외평기금자산운용 수수료 포함) 대비 기본경비 비중(%)	0.392	정량	산출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비율 *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의 합계	3.11	정량	산출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취약계층 지원 규모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 억원)	'27년 예산안 편성	329,476	정량	산출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안공단조사	0.377	정량	결과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대학 육성 재정 투자규모 (억원)	'27년 예산안 * 고등교육 부문 중 대학 직접지원 관련 2개 프로그램(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24개 세부사업) 예산	73,323	정량	산출		
		첨단분야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인재양성 규모 (명)	대학별 최소 인재양성목표 (부트캠프별 100명, 특성화대학별 50명)	15,152	정량	산출		
		영유아보육료 단가(0세반 기준) (만원)	'27년 예산안 '27년 정부안	133.6	정량	산출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	재생에너지 투자규모(조원)	'27년 정부예산안	1.7	정량	산출		
		온실가스 감축인자 대상사업 개수	'27년 정부예산안	366	정량	산출		
		문화재정 총지출 대비 K-문화 콘텐츠산업육성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 예산 비중	'27년 정부예산안	11.0	정량	산출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경제안보 구축,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지출 증가율	'27년 예산안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재정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 2배	정량	산출		
석유비축계획 달성률		(비축시설목표 달성률*0.5) + (비축유목표달성률*0.5)	99.0	정량	결과	신규		
창업·벤처 예산 총지출 기여도(%p)		총지출 대비 창업 및 벤처 부문 지출 증가율 차이 * 부문 증가율 - 총지출증가율	0.81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미래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활성화 투자 확대(억원)		'27년 본예산 규모(정부안)	16,086	정량	산출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		정성적 평가	계획고시	정성	산출	신규
		농수산임업직불금 및 농어촌기초소득 지원규모(조원)		'27년 본예산규모 (정부안 기준)	3.4	정량	산출	신규
		농림분야 예산 대비 농어업 K-푸드 산업육성과 미래기반조성 위한 투자 비중(%)		'27년 본예산 규모(정부안)	2	정량	산출	
	③ AI 3강 공고화 및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실현	AI 관련 재정 투자규모(조원)		'27년 본예산 규모 (정부안 기준)	10.0	정량	산출	
		신규 AI시스템 투자규모(억원)		'27년 본예산 (정부안 기준)	2,400	정량	산출	신규
		NEXT 전략기술 투자규모(조원)		'27년 본예산 (정부안 기준)	12.1	정량	산출	
		투자형 R&D 신설 및 투자규모(억원)		'27년 본예산 (정부안 기준)	신설(정부투자 규모900억원)	정량	산출	신규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① 촘촘한 사회안전메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27년 예산안 편성	37.0	정량	산출	
		저출생 조세지출·현금 급여 통합·확대 규모(조원)		저출생 조세지출·현금 급여 통합·확대 규모 (조원)	0.5 이상	정량	산출	
		소득기준 하후상박 구조 기초연금 개혁(%)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대상자 비중 20% 이상 확대	20	정량	산출	
	② 지역필수의료 확충, 연금제도 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지역필수 의료관련 투자규모 (억원)	지역 필수의료 예산규모	정부안 예산 규모	12,000	정량	산출	
			지역 필수의료 건보지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30,000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크레딧 지원대상(명)		(첫보험료) '27년 확정예산 반영 여부 (크레딧) 지원대상 확대 규모(명)	12,000	정량	산출	
		자살예방 대응예산 투입규모(억원)		정부안 예산규모	88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재난예방강화(%)	전년도 예방예산 비중 × 1.05	68.0	정량	산출	신규
		공장화재 안전강화 (여부, 개소)	공장화재 안전강화 방안 마련·발표 건수	방안마련 여부	정량	산출	
			사업별 지원대상 기업수	4,000			
		첨단장비 활용 재난대응강화(%)	관련 세부사업 내 첨단장비 관련 사업 예산 비중	50	정량	산출	
5.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① 지방주도성장 지원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개수(개)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20	정량	산출	신규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규모(조원)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10.0	정량	산출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규모(조원)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5	정량	산출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한국형 3축체계 투자 확대(억원)	차년도 정부안 예산편성 규모	99,877	정량	산출	
		병력운영 재구조화 장병 복무여건 제고 사업군 투자 강화(억원)	차년도 정부안 국방비 규모	44,187	정량	산출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제도개선 방안 확인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성	산출	
	③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	무상 ODA 사업 수(개)	국조실 발표	1,430	정량	산출	
		ODA 예산 과목구조 전면개편	차년도 정부안 사업내역	전면개편	정성	산출	
		AI·문화 ODA 예산 증가율(전년대비, %)	'27년 정부안 사업규모 확인	3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Ⅲ. 재정 인프라 혁신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① 체계적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성과평가제도 개선과제 이행률(%)	시행계획 상 개선과제 중 실제 달성과제 ÷ 총 과제 ×10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관리 목표 달성률(%)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 ÷ 총 성과지표 × 100	79.7	정량	결과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적극적 재정환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사업정비 건수·비율(%)	(감액, 폐지·통합 사업건수/ 평가대상사업건수)x100	25.0	정량	산출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조회건수	당해연도 통합평가 결과보고서 조회건수 (12월 기준)	3,000	정량	결과	
	③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	기금 자산운용제도 운용 개선	제도개편 방안 발표	제도개편 (신규)	정성	산출	
		연기금 투자폴 운용 수익률(%)	연기금투자폴 기간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연기금투자폴 수익률>벤치 마크수익률	정량	결과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①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 강화	예타제도 운영개선	지침 개정	제도개선	정성	산출	
		예타 컨설팅 시범운영	수행여부	시범운영 수행(신규)	정성	산출	
	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제도개편 방안 발표	제도개편 (신규)	정성	산출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건수)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건수	12	정량	산출	
	③ 재정집행 관리 강화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률(%)	(신속집행관리대상사업 상반기집행액/예산액) ×100	63.0	정량	과정	
		중점관리대상 상반기 집행률(%)	(중점관리대상사업 상반기집행액/예산액) ×100	70.0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당초 계획대비 복권매출액 달성률(%)	$\frac{\text{실적액}}{\text{당초계획액}} \times 100$	100.2	정량	결과	
		복권 건전 문화 조성 추진 (횟수,%)	권역별 캠페인 개최 횟수, 워크숍 횟수 (0.6)	5	정량	산출	
			복권의 사행성 평가 결과(0.4)	34.0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복권기금 브랜드사업군 지원비율(%)	$\frac{\text{브랜드사업군지원사업비}}{\text{복권기금지원사업비}}$	87.0	정량	산출	
		복권기금 홍보 활동 지수(점)	지표별 가중평균 ⁽¹⁾	1,271	정량	산출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실적	부정징후 추출 건수 대비 적발건수의 3년 평균('23~'25)	7.9%	정량	결과	신규
	②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미정산·미징수 정리 실적	정리실적 / 정리대상 목표(2.7조원)	80.4%	정량	결과	신규

(1) 복권기금 홍보 활동 지수(점) 측정방법 상세

- 복권기금사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치(Y) = 1,098 표준편차(S) = 115
- 최고목표: 기준치+1.5×표준편차 = 1,271
- 최저목표: 기준치-1.5×표준편차 = 926

• 기준치 $Y = \frac{Y_a + 4Y_m + Y_b}{6}$

- * Y_a : 과거 3개년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867)
- Y_b : 과거 3개년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1,145)
- Y_m : 평가 직전 연도 실적치(1,145)

- 복권기금 홍보활동 실적

구 분	'23 실적	'24 실적	25 실적
① 홍보영상 지상파 TV 노출 건수	922	1,008	1,202
② 홍보영상 디지털(유튜브, 티빙 등) 노출 건수 (단위: 십만건)	719	898	1,275
③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 등) 조회 및 방문자 수 (단위: 1000건)	938	984	1,005
실적	867	965	1,145

- (지수산출) ① 홍보영상 지상파 TV 노출 건수 × 0.3 +
② 홍보물 디지털 노출 건수(십만건) × 0.3
+ ③ SNS 조회 및 방문자 수(천건) × 0.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중장기 미래 대비		
1.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국정 15,
	② AX·GX 등 산업 구조 대전환	국정 20, 21, 22, 38, 40, 41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국정 38, 39, 40, 41, 42, 43
2. 포용성·지속가능성 제고		
	① 양극화 대응 전략 마련	국정 49, 51, 53, 54, 55, 57, 77, 82, 84, 85, 86, 89, 93, 94, 95, 96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정 87, 88, 91, 95
	③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국정 81, 지시(0*-1*-0**)
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①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② 고강도 재정혁신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지시(0*-1*-0**)
	③ 거시·재정정책 공조 강화	
4.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운용		
	① 재정운용의 참여 소통 활성화	국정17-4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7-4-㉔
	② 국가발전전략·재정 분야 국제 네트워크 구축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	국정17-4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7-4-㉔, 지시(0*-7*-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Ⅱ. 적극적·전략적 재정투자		
1.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국정 17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국정 17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국정 75, 92, 93, 94, 95, 96
	②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교육 내실화	국정 55, 99, 100, 101, 102
	③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K-콘텐츠 수출확산 지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	국정 38, 39, 40, 42, 43, 44, 103, 104, 105
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및 경제안보 구축,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	국정 29, 30, 34, 35, 37, 38, 39, 41, 51, 61, 67
	② SOC 효율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정 49, 57, 68, 69, 71
	③ AI 3강 공고화 및 기술 주도의 초혁신경제 실현	국정 20, 21, 22, 26, 27, 28, 29
4. 따뜻한 공동체,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정 77, 78, 79, 87, 88, 91
	② 지역필수의료 확충, 연금제도 개선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국정 29, 32, 87, 90
	③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국정 73
5.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평화 기반 구축		
	① 지방주도성장 지원	국정 53, 61, 81, 지시(0*-7*-1**)
	②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국정 109, 110, 111, 112, 113
	③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	국정 40, 68, 120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Ⅲ. 재정인프라 혁신		
1. 재정성과 관리 강화		
	① 체계적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	국정 17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적극적 재정환류 및 투명성 강화	국정 17
	③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	-
2. 재정투자 관리 강화		
	① 재정사업 타당성심사 관리 강화	지시(0*-7*-1**)
	②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시(0*-7*-1**)
	③ 재정집행 관리 강화	-
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①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국정 88, 104
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시(0*-4*-0**)
	②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